

전략연구 2020-11

사회지표와 생활SOC지표 활용한 충남 삶의 질 격차분석과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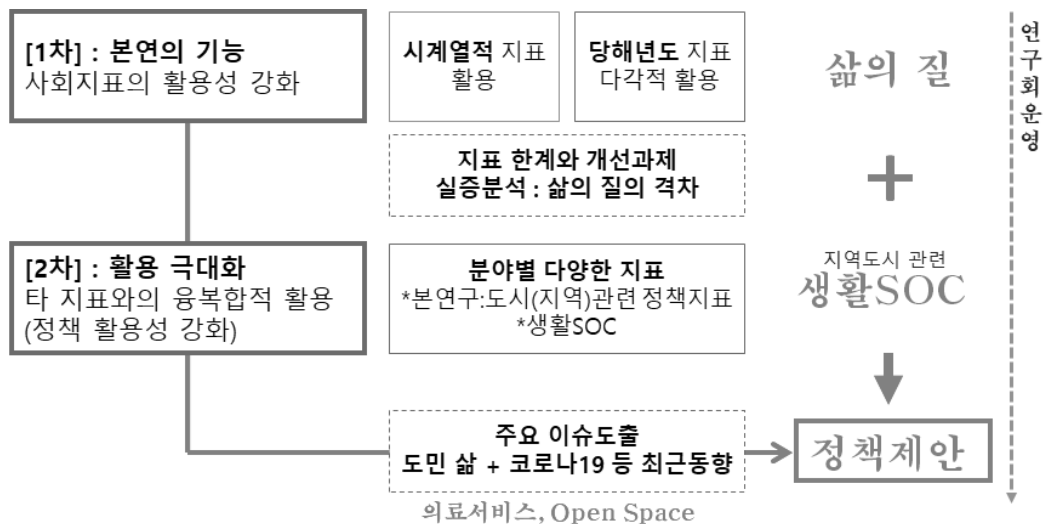
임준홍·최정현

요 약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충남 도정의 핵심 키워드인 ‘행복(삶의 질)’을 양극화(격차)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민의 삶의 질 변화와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남 15개 시군의 삶의 질과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조사된 ‘충남사회지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9년 ‘충남사회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격차에 대해 분석하고 충남사회지표조사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의 ‘충남사회지표’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지표’의 연계 분석을 통해, 삶의 질 결정에 영향을 주고 코로나 시대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슈를 도출하였다. 즉, 의료시설과 생활권공원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도민의 의료시설만족도와 충남도의 의료생활SOC의 격차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활권공원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생활권공원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주요내용과 흐름

〈연구를 통해 밝히고 싶은 핵심적 내용〉

[충남사회지표조사] 삶의 질 관련

1. '충남도의 삶의 질 수준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을 것이다'
2. '충남의 전체적인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3. '분야별 삶의 질은 높아 졌으며(개선되었으며),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분야별로 충남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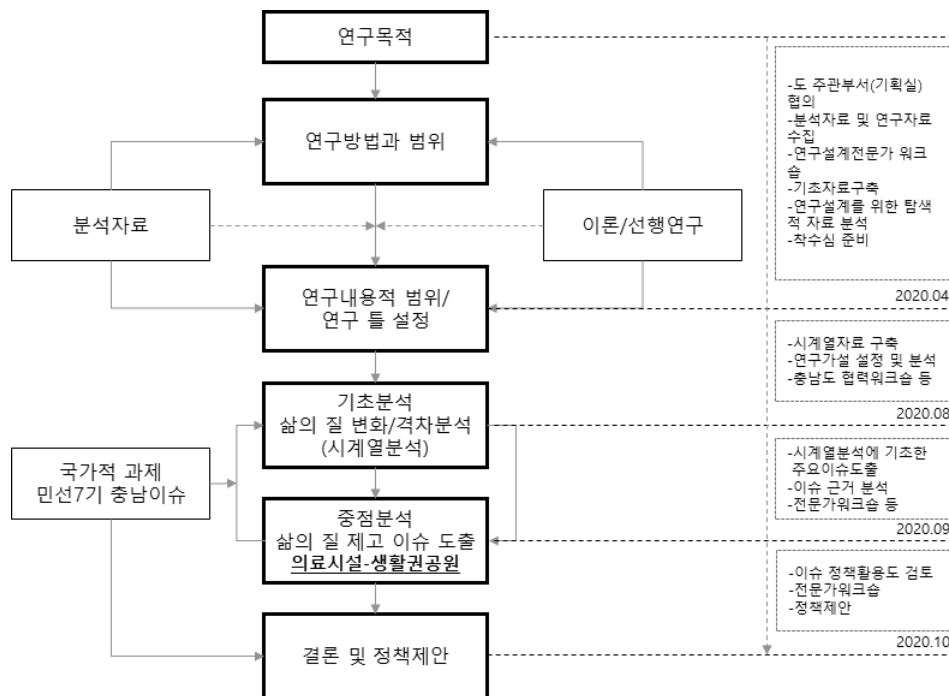
※ 충남사회지표조사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생활SOC 관련] 삶의 질과 생활SOC관련 및 주요이슈(의료)

1. '생활SOC의 유형별·지역별 공급수준은 차이가 있고 이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 '의료관련 생활SOC시설의 서비스 수준(원단위와 접근성)에 따라 사회지표로 측정된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정책의사결정 기법 지원] 생활권공원을 대상으로 생활SOC의 확충 및 최적입지에 대한 시나리오기법 개발 제안

- 연구회 및 자문회의(총 5회)를 통한 단계적 접근(목적공유--> 이슈도출 --> 정책함의 도출)



〈그림 2〉 연구의 진행과정

2. 탐색: 전국과 비교한 충남의 삶의 질 격차

‘충남도의 삶의 질 수준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을 것이다’

→ 충남 도민의 삶의 질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개별 항목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충청도민의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삶의 질 만족도는 66.4점으로 전국 평균(66.5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세부 항목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소비생활만족도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등은 낮게 나타났다.

〈표 1〉 한국의 사회지표 중 사회조사로 비교가능한 항목 비교

부문	지표	충남 평균	전국 평균
가구·가족	1) 가족관계 만족도*	62.9	56.6
	2) 가사분담률 (본인주도/분담/남편주도)	39.4/58.5/2.1	38.4/59.1/2.5
	3)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견해 (결혼 해야한다/이혼 하지않는 것이 좋다)	51.8/16.5	48.1/16.7
건강	4) 주관적 건강상태*	50.9	48.7
	5) 유병률*	30.0	27.5
	6) 의료서비스 만족도* (병의원/종합병원)	61.0/64.2	54.2/57.8
교육	7) 교육비 부담도	56.2	64.4
	8) 학교생활 만족도*	59.7	58.0
노동	9) 일자리 만족도*	33.6	32.3
소득·소비·자산	10) 소득만족도*	14.5	14.1
	11) 소비생활만족도	15.9	16.9
여가	12) 여가생활만족도	28.2	28.8
	1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61.4	66.2

부문	지표	충남 평균	전국 평균
생활환경	14)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대기질/수질/소음/토양환경/녹지환경 만족도)	32.3/32.0/40.1/ 34.7/53.2	28.6/29.3/29.9/ 29.4/50.2
	15) 기후변화 불안도	48.0	49.3
범죄·안전	16) 야간보행 안전도*	65.8	63.5
	17) 사회안전 인식*	23.8	20.5
주관적 웰빙	18) 주관적 삶의 만족도	66.4	66.5

*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3. 분석결과: 실증분석과 정책대안 제시

1) 실증분석 1: 충남의 삶의 질 변화와 지역격차

‘충남의 전체적인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 충남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2013년 5.610점, 2015년 5.696점, 2017년 6.026점, 2019년 6.047점으로 작은 변화지만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었다.

충남도민의 삶의 질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5.610점, 2015년에는 5.696점, 2017년에는 6.026점, 2019년은 6.04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동·읍·면)에서 동일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충남도민의 삶의 질 변화(충남 전체)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평균	5.610	5.696	6.026	6.047
표준편차	1.876	2.221	1.994	2.020

주)2015년의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1~5점의 5점 척도에 의해 조사된 반면에 나머지 연도에서는 0~10점의 11점 척도로 조사됨. 2015년 5점 척도를 11점 척도로 변환하였음

‘충남 지역간 삶의 질 격차는 있을 것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과 같이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 중에서는 읍지역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격차는 동지역의 평균이 높고, 읍지역의 평균이 낮으며, 표준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표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변화(충남 전체)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동지역	평균	5.613	-	6.124	6.171
	표준편차	1.906	-	1.981	1.909
읍지역	평균	5.596	-	5.837	5.932
	표준편차	1.927	-	2.030	2.113
면지역	평균	5.618	-	6.055	6.092
	표준편차	1.784	-	1.970	1.980

주) 2015년 “-” 는 응답자의 거주지가 읍면동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읍면동별 수치를 산출하지 못함(이하 동일)

‘분야별 삶의 질은 높아졌으며(개선되었으며),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교육, 안전 관련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점점 개선되는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충남 삶의 질 관련 지표의 변화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교육	평균	2.936	2.981	2.938	3.137
	표준편차	0.649	0.752	0.948	0.874
의료	평균	3.327	3.406	3.384	3.458
	표준편차	0.748	0.901	0.828	0.910
주거환경	평균	5.694	-	5.437	5.716
	표준편차	2.074	-	1.783	1.809
환경: 대기	평균	3.377	-	2.794	3.026
	표준편차	0.879	-	1.146	1.196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환경: 수질	평균	3.324	-	3.121	3.401
	표준편차	0.821	-	0.951	0.948
환경: 토양	평균	3.354	-	3.142	3.435
	표준편차	0.808	-	0.932	0.902
환경: 소음	평균	3.239	-	3.071	3.400
	표준편차	0.985	-	1.083	1.086
환경: 녹지	평균	3.505	-	3.248	3.516
	표준편차	0.908	-	0.995	0.979
문화/여가 만족도	평균	4.129	4.450	6.029	6.886
	표준편차	2.124	2.211	2.418	1.888
안전: 자연재해	평균	3.557	3.622	3.028	3.320
	표준편차	0.820	0.890	0.932	0.919
안전: 건축물	평균	3.442	3.435	3.075	3.400
	표준편차	0.763	0.848	0.870	0.848
안전: 교통사고	평균	3.108	2.921	2.744	2.984
	표준편차	0.762	0.910	0.864	0.923
안전: 화재	평균	3.403	3.273	2.938	3.055
	표준편차	0.772	0.867	0.879	0.923
안전: 범죄	평균	3.162	3.006	2.820	3.414
	표준편차	0.811	0.940	0.909	0.816
안전: 사회전반	평균	3.294	3.253	2.934	3.219
	표준편차	0.744	0.836	0.777	0.753

주)주거환경 만족도와 문화/여가 만족도는 0~10점의 11점 척도로 변환되었고, 나머지 변수들은 1~5점의 5점 척도로 변환되었음

‘분야별로 충남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개인/가족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주거환경영역 중 전반적인 주거환경과 여가문화, 의료 서비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가족영역에서는 가족관계, 소득, 신체건강에 대한 요인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주거환경영역 중에서는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운데 여가문화와 의료서비스, 사회안전요인도 삶의 질에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읍·면 지역별로도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변수 삶의 질

영역구분	설문항목	충남도 전체(y1)	거주지역별		
			동지역(y4)	읍지역(y5)	면지역(y6)
개인/가족 영역	신체건강	0.2292** (16.37)	0.2265** (9.32)	0.2399** (15.84)	0.2119** (8.21)
	소득	0.3627** (15.10)	0.4179** (11.43)	0.3233** (9.34)	0.3340** (7.84)
	가족관계	0.4227** (13.67)	0.4694** (11.59)	0.4007** (7.81)	0.4282** (9.14)
주거환경 영역	의료서비스	0.0532* (2.65)	0.1262* (2.78)	-0.0017 (-0.05)	0.0605* (2.71)
	여가문화	0.0710** (3.84)	0.0362* (2.35)	0.0744** (3.07)	0.1205** (4.60)
	주거환경	0.1123** (8.25)	0.0664* (2.99)	0.1426** (6.53)	0.1066** (3.69)
	대중교통	0.0417 (1.58)	0.0430 (1.17)	0.0704 (1.60)	-0.0131 (-0.31)
	환경	0.0001 (0.00)	0.0322 (1.15)	-0.0401 (-1.41)	0.0408 (0.83)
	사회안전	0.0669* (2.38)	0.1469** (3.67)	0.0689 (1.56)	-0.0567 (-1.18)
사회영역	신뢰	0.0890** (5.41)	0.0764* (2.71)	0.0685* (2.60)	0.1435** (6.25)
Adj. R2		0.3369	0.3527	0.3244	0.3630
표본수		14,205	3,865	6,541	3,799

★ 충남사회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

충청남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최대 표본 설문조사인 충남사회지표조사는 당해 연도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좋은 조사이다. 조사 성격상 사회 전반을 파악하기는 좋지만, 특정 분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2년 전부터 3년을 주기로 특정 분야의 조사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충남사회지표조사는 다음의 점이 개선되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지표변화이다. 최근, 국가 사회지표와의 비교지표 도출(타 광역도와의 차이 분석)과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지표의 3개 년 주기적 조사 전략으로 많이 정리되었지만 2012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사회지표의 역사를 감안할 때 보다 규격화되고 정량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충남사회지표는 당해 연도 지역사회 실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계열적 분석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조사척도의 문제이다. 많은 항목에서 동일성격의 설문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척도가 달라(예를 들어 5점 만점, 11점 만점 등) 시기적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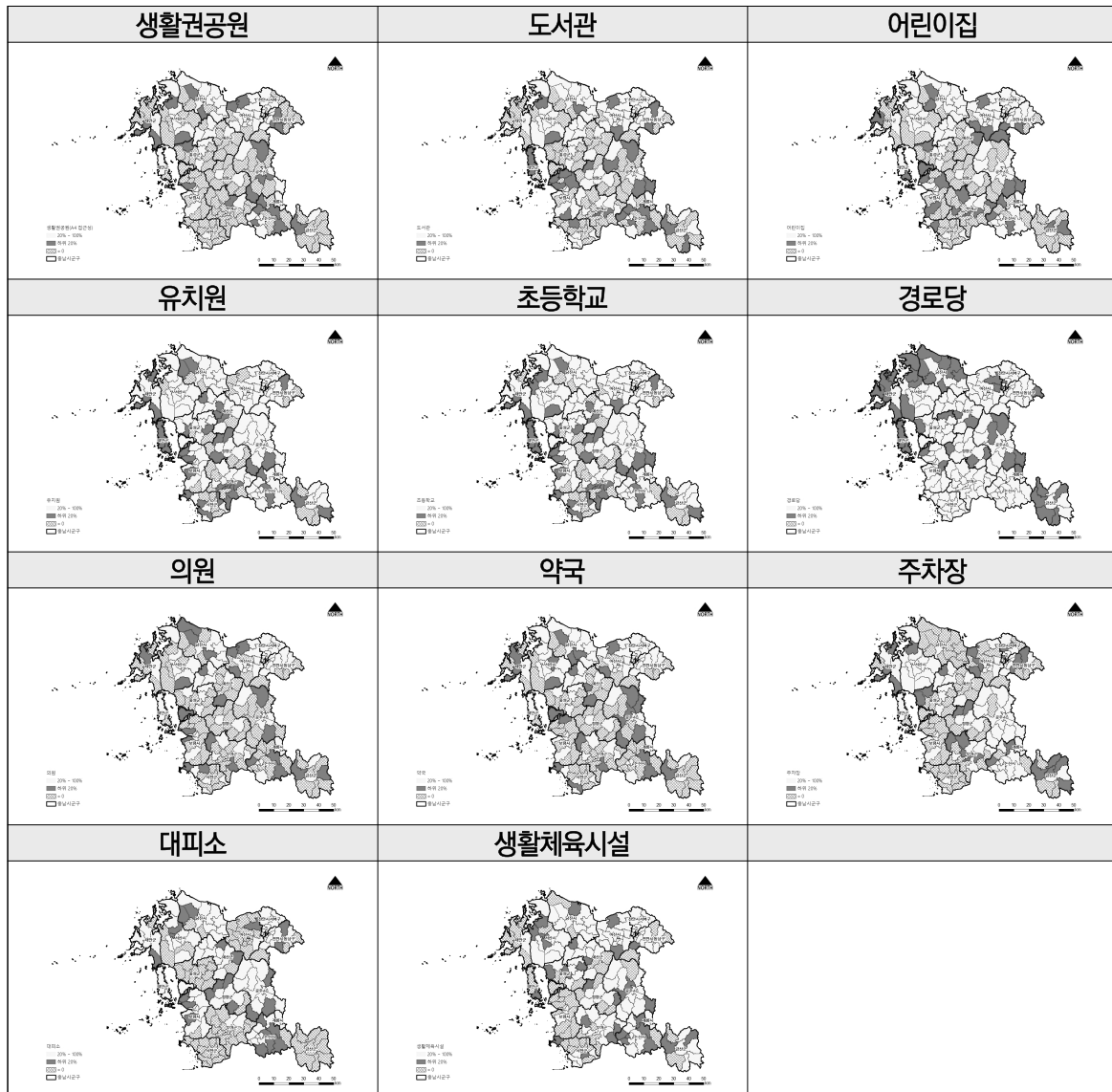
셋째, 표본추출의 최소 공간적 범위이다. 현재 충남사회지표는 시군단위의 통계 생산을 위해 집계·공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 간 비교는 효과적이지만 더 낮은 단계의 지역비교(예를 들어, 읍·면·동 단위의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계적 공포는 시군단위로 하더라도, 활용도 측면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집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읍면동의 경우 표본추출이 '0'인 지역도 있어 전체적인 지역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표본재설계 과정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지표의 활용성을 강화이다.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가칭)충남사회지표 활용 정책제안 '콘테스트' 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제안할 때 도민에게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실증분석 2: 충남 생활SOC서비스 격차와 삶의 질과의 관계

'생활SOC의 유형별·지역별 공급수준은 차이가 있고 이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활SOC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공급수준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생활SOC별 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3〉 생활SOC서비스 취약(양호)지역 분포(근린시설): 붉은색 하위 20% 지역)

회귀분석을 통해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SOC서비스 간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종속변수 삶의 질 등, 독립변수 개인특성+생활SOC지표(접근성))

〈표 6〉 삶의 질과 기반시설 간 관계

구 분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만족 + 일에 대한 가치 + 행복감 - 근심·걱정 - 우울감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여성	0.196**(5.55)	0.939**(6.33)	-0.014(-0.44)
연령대(15~19세)			
20대	-0.284**(-3.06)	-0.693+(-1.80)	-0.069(-0.78)
30대	-0.674**(-7.11)	-2.187**(-5.59)	-0.222*(-2.47)
40대	-0.819**(-8.68)	-2.824**(-7.25)	-0.234**(-2.64)
50대	-0.864**(-8.95)	-2.838**(-7.10)	0.049(0.54)
60대 이상	-0.791**(-7.85)	-2.456**(-5.89)	0.288**(3.02)
학력(초졸 이하)			
중졸 이하	0.106*(2.49)	0.722**(4.03)	0.004(0.09)
고졸 이하	0.251**(5.85)	1.334**(7.41)	0.050(1.28)
대학 이상	0.709**(14.28)	3.115**(14.89)	0.233**(5.13)
혼인상태(미혼)			
배우자 있음	0.411**(7.08)	1.762**(7.22)	0.068(1.23)
사별	0.233**(3.11)	0.959**(3.07)	0.131+(1.94)
이혼	-0.112(-1.37)	-0.576+(-1.68)	-0.014(-0.19)
가구주	0.120**(3.13)	0.703**(4.35)	0.003(0.07)
가구소득(1백만 원 미만)			
1~2백만 원 미만	0.444**(10.75)	1.945**(11.23)	0.121**(3.28)
2~3백만 원 미만	0.627**(14.12)	2.800**(15.05)	0.152**(3.76)
3~4백만 원 미만	0.785**(15.65)	3.564**(16.98)	0.253**(5.40)
4~5백만 원 미만	0.886**(16.67)	4.019**(17.77)	0.234**(4.65)
5백만 원 이상	1.247**(23.84)	5.583**(25.34)	0.595**(12.16)
세대구분(1인 가구)			
1세대 가구	0.042(0.76)	0.296(1.27)	0.084+(1.68)
2세대 가구	-0.310**(-6.10)	-1.376**(-6.37)	-0.079+(-1.75)
3세대 이상 가구	-0.309**(-4.38)	-1.715**(-5.80)	-0.109(-1.64)
비혈연 가구	0.058(0.18)	1.167(0.87)	0.374(1.47)
주택형태(단독주택)			
아파트	-0.129**(-3.60)	-0.855**(-5.71)	0.197**(5.95)
연립주택	-0.160**(-2.62)	-0.458+(-1.76)	0.087(1.62)
다세대 주택	-0.196*(-2.53)	-1.474**(-4.54)	-0.057(-0.83)
기타	0.360**(3.77)	1.821**(4.54)	0.216*(2.42)
점유형태(자가)			
전세	-0.094+(-1.85)		-0.398+(-1.84)
보증부 월세	-0.159**(-2.79)		-0.713**(-3.03)
월세(사글세포함)	-0.317**(-4.88)		-1.259**(-4.73)
무상	-0.031(-0.44)		-0.354(-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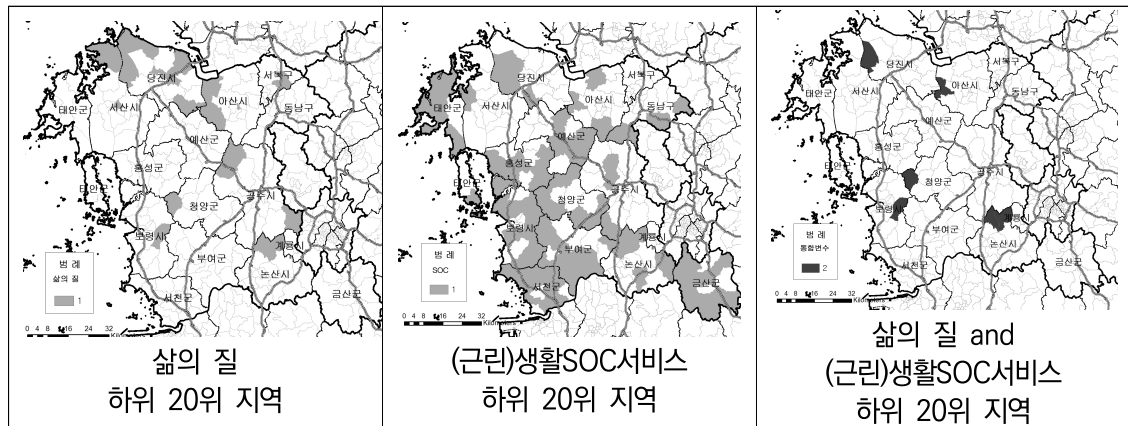
구 분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만족 + 일에 대한 가치 + 행복감 - 근심·걱정 - 우울감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기반시설 접근성	0.105(0.90)		0.968+(1.95)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0.152**(-5.27)		-0.995**(-8.38)
공연문화시설	0.031(0.95)		0.135(0.99)
도서관	0.489**(2.92)		3.022**(4.25)
공공체육시설	-0.037(-0.65)		0.400+(1.69)
어린이집	-0.862*(-2.02)		0.768(0.43)
유치원	53.794**(4.50)		334.204**(6.56)
초등학교	-14.924(-1.49)		-150.230**(-3.52)
종합사회복지관	-0.352**(-3.99)		-2.698**(-7.21)
경로당	-0.492(-1.39)		-2.004(-1.36)
종합병원	0.519**(3.12)		3.493**(4.82)
응급의료시설	-0.788**(-5.38)		-4.540**(-7.09)
병원	0.020(0.86)		-0.066(-0.67)
의원	0.070(0.75)		0.020(0.05)
보건기관	-0.059(-0.32)		-1.155(-1.57)
약국	-0.013(-0.08)		-0.893(-1.28)
주차장	-0.001(-0.33)		0.002(0.15)
경찰서	0.486**(2.93)		3.938**(5.76)
소방서	0.048(0.65)		0.318(1.06)
대피소	-1.912**(-5.73)		-10.449**(-7.45)
생활체육시설	-0.414(-0.92)		-2.421(-1.29)
노인여가복지시설	1.415**(2.84)		6.412**(3.11)
상수향	5.705**(52.44)		7.999**(17.71)
관측수	25,243		25,199
Adj. R-squared	0.0827		0.0907

주)괄호 안의 수치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 실증분석 2_ 정책제안: 생활SOC취약지역 도출과 생활SOC복합화 전략

삶의 질이 낮거나 생활SOC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한 우선적 정책투입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삶의 질 만족도가 낮거나 생활SOC서비스(접근성) 수준이 낮은 지역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삶의 질과 생활SOC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

특정시설뿐만 아니라 수요인구와 재정 여력이 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생활SOC복합화 관점에서 여러 시설의 융·복합적 조성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가는 생활SOC복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산시 도고면을 대상을 분석한 결과 특정 시설의 공급이 해당 지역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동시에 인접 지역의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복합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 [분석결과] 아산시 도고면 공급이 필요한 생활SOC(1순위): 고령자 관련 생활SOC 서비스 취약 → 고령자복지 생활SOC 복합화(플랫폼 구축)

〈표 7〉 생활SOC 확충 우선순위 검토(사례: 아산시 도고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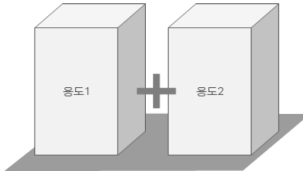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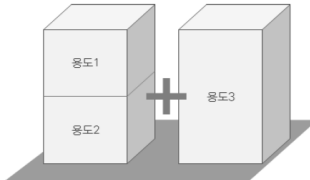
구분	시설 수혜인구 (%)	시설수 (개수)	확충 우선순위*	정부 제시 주요 복합화 사업대상
생활권공원	48.9	6	2순위	
주체공원	100.0	0		
문화시설	100.0	0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28.4	2	2순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체육시설	87.9	2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0.5	3	2순위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유치원	1.4	2	2순위	
초등학교	2.7	2	2순위	

구분	시설 수혜인구 (%)	시설수 (개수)	확충 우선순위*	정부 제시 주요 복합화 사업대상
종합사회복지관	100.0	1		
노인복지관	37.4	0	1순위	
노인교실	5.0	0	1순위	
경로당	37.4	34	2순위	
종합병원	100.0	0		
응급의료시설	100.0	0		
병원	100.0	0		
의원	29.7	1	2순위	
보건기관	100.0	2		
약국	39.3	2	2순위	
주차장	27.7	2	2순위	주거지주차장
경찰서	78.2	1		
소방서	100.0	0		
대피소	0.0	0	1순위	
생활체육시설	48.9	2	2순위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37.4	0	1순위	

* 우선순위 1순위는 해당시설이 도고면에 없으면서, 수혜인구가 50% 미만인 시설
우선순위 2순위는 해당시설이 도고면에 있지만, 수혜인구가 50% 미만인 시설

〈표 8〉 생활SOC 복합화 사업유형과 추진주체

구분	사업유형	정책 목표	주요 내용	주 기능 시설
사업 유형 (예시)	돌봄플랫폼	고령화 및 돌봄 수요 대응	·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체육플랫폼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지역의 스포츠·여가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스포츠·여가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문화플랫폼	문화 중심 지역자치 기반 구축	· 지역의 문화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지원	공공도서관
	복합플랫폼	소통·협력 기반의 사회혁신 활성화	· 일(work), 삶(live), 놀이(play)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창의 공간 조성	①+②+③

구분	사업유형	정책 목표	주요 내용	주 기능 시설
형태	수직 복합화 			
	수평 복합화 			
	중복 복합화 			

3) 실증분석 3: 의료 관련 생활SOC서비스와 의료만족도와의 관계

‘의료관련 생활SOC시설의 서비스 수준(원단위와 접근성)에 따라 사회지표로 측정된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은 어느 정도 검정할 수 있었다.
 특정 시설의 원단위와 접근성은 해당 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종의 의료관련 생활SOC 중 일상적인 생활의료시설인 의원과 약국이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종합적인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활SOC는 병원과 종합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SOC중 의료 관련 시설의 접근성이 충남사회지표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두 가지 방법 즉, 시설원단위 방법과 접근성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접근성 보다는 시설원단위 방법을 적용한 경우 의료시설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보다 명확히 나타났다. 즉, 접근성보다는 해당 시설의 수와의 관계가 더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였다.

- 병(의)원 생활SOC수가 병(의)원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줌
-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오히려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 수임

〈표 9〉 의료관련 생활SOC(원단위)가 해당 의료시설 만족도에 주는 영향

구 분 (생활SOC 중 의료관련 시설)		종속변수(충남사회지표조사 만족도)				
		종합병원	지방 의료원	병(의)원	주거환경 (의료) 만족도	본인의 건강만족도
종합병원(%)	계수	0.007	0.028+	-	0.017*	0.011*
	t-값	(0.55)	(1.90)		(2.29)	(2.43)

구 분 (생활SOC 중 의료관련 시설)		종속변수(충남사회지표조사 만족도)				
		종합병원	지방 의료원	병(의)원	주거환경 (의료) 만족도	본인의 건강만족도
응급의료시설(%)	계수	-0.010	-0.031+	-	-0.004	-0.000
	t-값	(-0.66)	(-1.94)	-	(-0.55)	(-0.07)
병원(%)	계수	-	-	-0.003	0.014**	0.003
	t-값	-	-	(-0.57)	(3.13)	(0.56)
의원(%)	계수	-	-	0.042+	0.030	0.033+
	t-값	-	-	(1.70)	(1.57)	(1.69)
약국(%)	계수	-	-	-	0.010	-0.011
	t-값	-	-	-	(0.36)	(-0.62)
보건기관(%)	계수	-	-	-	0.001	-0.011+
	t-값	-	-	-	(0.22)	(-1.65)

“-”는 종속변수와의 관계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지 않은 변수임

※ 개인 및 가족속성변수는 회귀분석과정에서 투입하여, 통제하였으나 표에는 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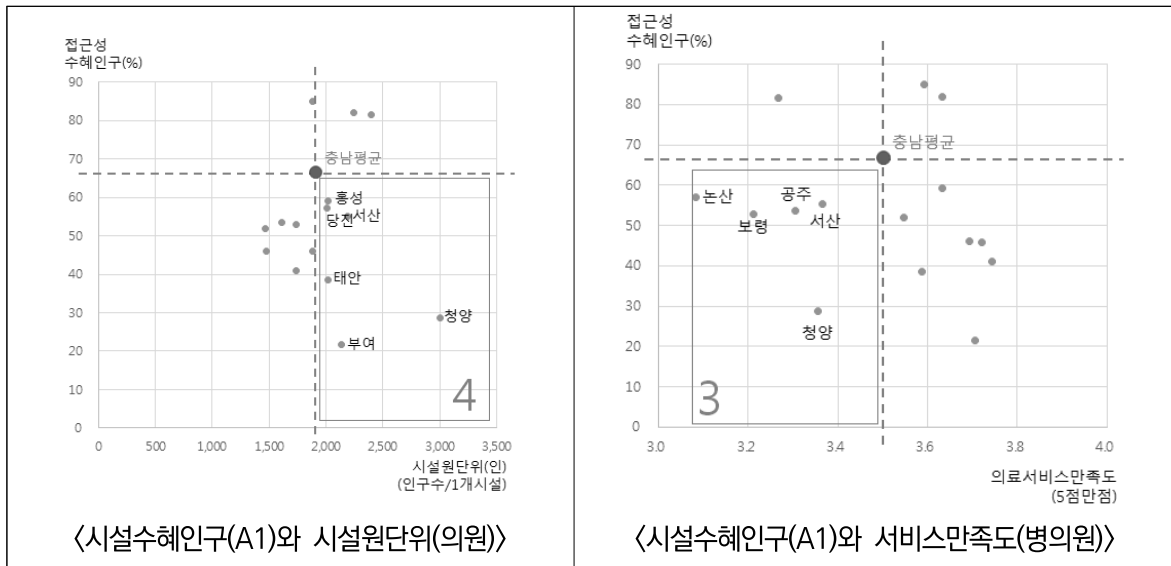
의료시설 중 약국과 보건소의 경우 사회지표조사 응답자수가 적어 분석이 불가능하여 제외함

□ 실증분석 3_ 정책제안: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도출과 전략적 접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이용자수 대비 공급시설수가 적으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 지역은 대표적으로 충남 서해안에 인접한 지역들 즉, 국가의료권역구분에서 서산권임

병(의)원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분석결과, 접근성(수혜인구)과 시설원단위 분석에서 모두 열악한 시군은 충남 15개 시군 중 서산, 태안, 당진이다. 즉 의료권역구분 상 서산권에 해당하는 지역과 15개 시군 중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가장 농촌성격의 청양과 부여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접근성(수혜인구)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모두 열악한 시군은 서산, 공주, 보령, 논산이었다.

이 중 서산과 청양은 두 가지 모두 열악하여, 병(의)원 의료서비스 수준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병(의)원 취약지역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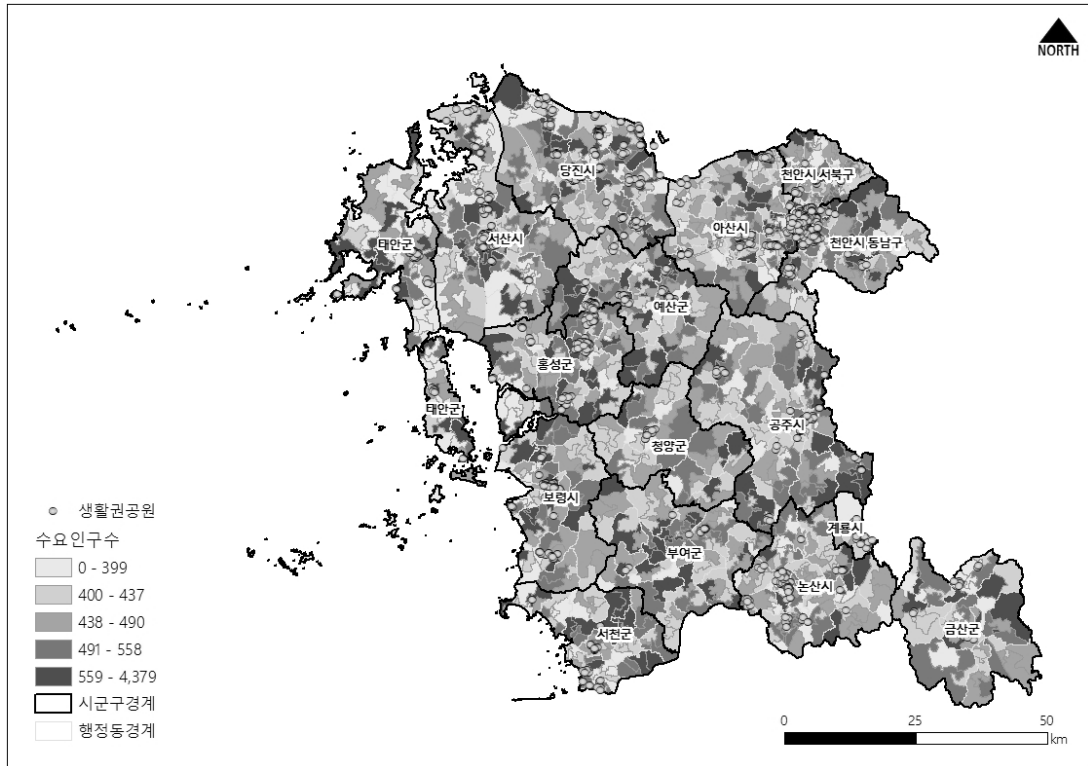
4) 실증분석 4: 생활SOC서비스 우선공급지역 도출: 생활권공원 사례 분석

생활권공원을 대상으로 생활SOC의 확충 및 최적입지에 대한 시나리오기법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상대적으로 생활권공원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도출할 수 있었고, 우선 공급지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할 경우 해당 생활SOC공급 및 복합화를 통한 확충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 생활SOC시설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로와 공원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시설이 도로와 공원이다.

〈표 10〉 충청남도 시군구 단위 공원 유형별 기초통계 정보: 개수(개), 총면적(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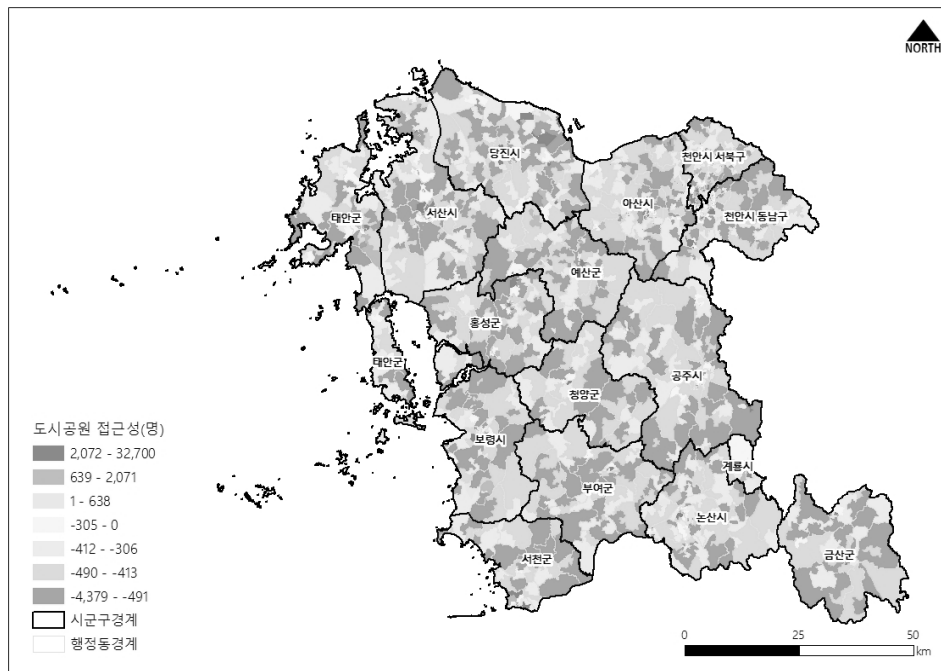
시군구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계	
	개수	총면적	개수	총면적	개수	총면적	개수	총면적
계룡시	9	884,595	9	42,403	6	17,719	24	944,717
공주시	12	577,968	16	33,596	13	21,550	41	633,114
금산군	9	1,251,137	4	4,605	5	14,563	18	1,270,305
논산시	11	692,599	27	49,989	28	56,106	66	798,694
당진시	45	3,070,408	37	55,626	46	93,703	128	3,219,737
보령시	16	929,236	16	29,029	34	75,748	66	1,034,013
부여군	4	103,303	5	3,200	3	7,110	12	113,613
서산시	21	2,652,727	24	51,916	42	77,770	87	2,782,413
서천군	8	417,022	3	15,052	10	26,582	21	458,656
아산시	18	780,019	0	0	46	99,005	64	879,024
예산군	11	576,030	19	58,529	19	57,329	49	691,888
천안시 동남구	21	1,785,502	5	11,556	43	95,470	69	1,892,528
천안시 서북구	28	750,683	2	1,811	65	309,027	95	1,061,521
청양군	3	82,868	4	6,359	4	8,555	11	97,782
태안군	11	499,627	4	13,386	15	33,493	30	546,506
홍성군	28	1,513,704	13	20,760	35	83,234	76	1,617,698
총합계	255	16,567,428	188	397,817	414	1,076,964	857	18,042,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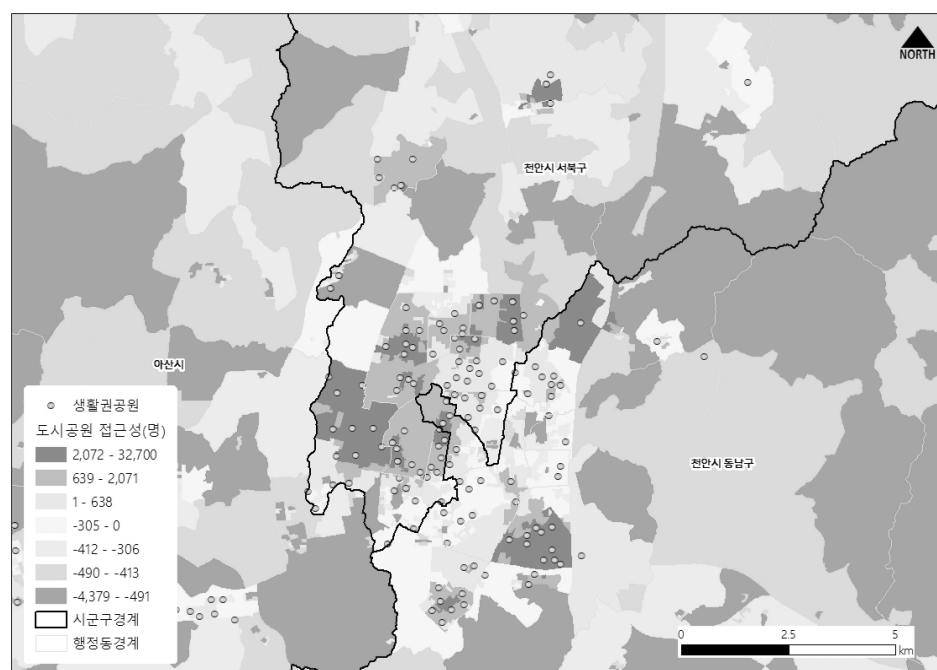
〈그림 6〉 집계구 단위 인구수 단계구분도 및 공원의 공간적 분포현황도

특히, 공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충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권공원을 대상으로 기 조성된 공원분포와 이용자 밀집도(수혜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함께 고려하여 우선적인 공급(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하면서도 공급이 적은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천안과 아산 그리고 서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즉, 인구증가에 비해 생활SOC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지역들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의 추가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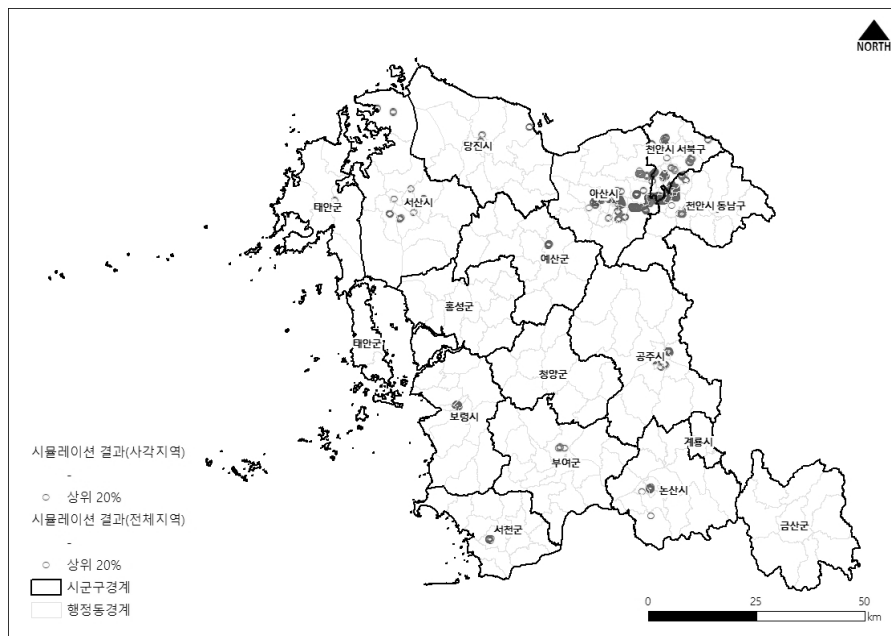


〈그림 7〉 충남지역 집계구 단위 도시공원 접근성 추정 결과



〈그림 8〉 도시공원 접근성 추정 결과 (일부 도시지역 확대)

□ 실증분석 4_ 정책제안: 생활권공원SOC시설의 우선적 공급이 필요한 지역 도출
 시뮬레이션 기법에 근거하여 집계구 단위로 생활권공원 SOC시설의 우선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효과적 생활SOC
 공급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림 9〉 신규입지 적정성 시뮬레이션 결과 상위 20% 지점

이와 같은 시나리오 분석방법을 다른 생활SOC시설에 적용할 경우 생활SOC별 우선
 공급지역을 추출할 수 있고, 이를 생활SOC공급 정책에 반영할 경우 효과적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SOC시설 데이터 구축 역시 단순한 위치뿐만 아니라
 규모, 주변의 주민수는 물론 유동인구 등의 데이터도 함께 구축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충남연구원 데이터센터(데이터맵 구축)와 연계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임)

4. 결론 및 연구한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의 전체적인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2013년 5.610점, 2015년 5.696점, 2017년 6.026점, 2019년 6.047점으로 작은 변화지만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충남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있을 것이며, 도시지역(동)에 비해 농촌지역(읍.면)이 열악할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연구가설과 같이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 중에서는 읍지역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양적 분석결과인 24개 생활SOC지표의 이용성(접근성) 차이가 충남 도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즉, 양적·물리적 지표에 따라 삶의 질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증명하기 어려웠다. 즉 생활SOC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인과관계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넷째, ‘의료관련 생활SOC시설의 서비스 수준(원단위와 접근성)이 (충남사회지표조사를 통해 측정된)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은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었다. 특정 의료시설의 원단위와 접근성 방법에 의한 서비스 수준은 해당 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종의 의료관련 생활SOC 중 일상적인 생활의료시설인 의원과 약국의 경우에 이러한 영향관계가 보다 명확하다. 하지만, 종합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활SOC는 병원과 종합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생활권공원을 대상으로 생활SOC의 확충 및 최적입지에 대한 시나리오기법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상대적으로 생활권공원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도출할 수 있었고, 우선 공급지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할 경우 해당 생활SOC공급 및 복합화를 통한 확충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사회지표조사 결과를 통해 도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의 격차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질적 지표인 도민의 삶의 질 지표와 양적 지표인 생활SOC지표를 연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SOC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방법론을 제시한 점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보다 정교한 정책적 판단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충남사회지표조사의 조사항목과 척도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생활SOC 역시 시설 종류와 시설 서비스범위 설정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도가 국가 차원에서 힘들다면, **충남도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민선7기 도정의 핵심을 ‘**더 행복한 충남**’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근거 기반의 충남도정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삶의 질 관점에서 조사·분석·평가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성적 지표와 이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연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자고 시도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명확한 해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표의 대표성 문제, 지표 측정상의 문제, 조사시기의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3) 연구결과의 정책활용(기대효과)	7
2. 연구의 방법과 진행과정	8
1) 분석자료: 충남사회지표, 국가 생활SOC자료	8
2) 분석방법과 연구 일정	17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1.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19
1) 관련이론 검토	19
2) 선행연구 검토	2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2. 삶의 질 측정과 사회조사	38
1) 삶의 질 측정	38
2) 사회조사와 삶의 질 측정	41
3. 국가 생활SOC정책	45
1) 국가 생활SOC 정책 개요	45
2) 국가 생활SOC 내용	47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48

제3장. 사회지표로 본 충남의 삶의 질 격차와 충남사회지표 개선 정책건의

1. 우리나라 삶의 질 변화	49
1) 국민의 삶의 질 지표	49
2) 국민행복도 변화	53

2. 전국과 비교한 충남의 삶의 질	54
1) 가구·가족 부문	55
2) 건강 부문	59
3) 교육 부문	63
4) 노동 부문	66
5) 소득·소비·자산 부문	68
6) 여가 부문	70
7) 환경 부문	72
8) 범죄·안전 부문	75
9) 주관적 웰빙 부문	78
3. 충남의 삶의 질과 격차	79
1) 지역별 삶의 질 변화와 격차	79
2) 부문별 삶의 질 변화와 격차	81
3) 지역별·부문별 삶의 질 변화와 격차	83
4. 충남의 삶의 질 결정요인	86
5. 충청남도 사회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89

제4장.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제안: 사회지표와 생활SOC지표의 연계분석

1.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91
1) 실증분석방법	91
2) 분석결과	93
2. 생활SOC정책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공원 접근성 추정과 최적입지 제안	113
1) 실증분석방법	113
2) 분석결과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참고문헌

133

표 목차

〈표 1〉 충남 생활SOC공급현황으로 본 주요 서비스 강화 실태	6
〈표 2〉 충남사회지표 시계열 동일지표(2013/2015/2017/2019)	8
〈표 3〉 충남사회지표 시계열 동일지표 측정방법_만족도 관련	10
〈표 4〉 충남사회지표 구성(2019년 조사)	11
〈표 5〉 국민의 삶의 질 지표 목록	15
〈표 6〉 충남도내 생활SOC 시설 유형별 시설의 개수와 서비스 권역	16
〈표 7〉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비교에 관한 연구	31
〈표 8〉 세대간 차이 Scheffe 다중비교	34
〈표 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 경험 빈도분석	35
〈표 10〉 OECD의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 세부지표 측정결과	40
〈표 11〉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 구성	42
〈표 12〉 사회지표와 지역사회지표의 발전단계	43
〈표 13〉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 작성 현황(2015년 기준)	43
〈표 14〉 충남사회지표의 영역별 구성(2019)	45
〈표 15〉 삶의 질 영역별 변화	50
〈표 16〉 행복지표로 살펴본 한국의 위상 변화	53
〈표 17〉 한국의 사회지표 중 사회조사로 비교가능한 항목	54
〈표 18〉 가족관계 만족도(2008~2018)	55
〈표 19〉 시도별 가족관계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2018)	56
〈표 20〉 가사분담률(2008~2018)	57
〈표 21〉 시도별 가사분담률(2018)	57
〈표 22〉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견해(2008~2018)	58
〈표 23〉 시도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2018)	59
〈표 24〉 주관적 건강상태(2008~2018)	59
〈표 25〉 시도별 주관적 건강상태(2018)	60
〈표 26〉 2주간 유병률(2008~2018)	61
〈표 27〉 시도별 2주간 유병률(2018)	62

〈표 28〉 의료서비스 만족도(2008~2018)	62
〈표 29〉 시도별 의료서비스 만족도(2018)	63
〈표 30〉 교육비 부담도(2008~2018)	63
〈표 31〉 시도별 교육비 부담도(2018)	64
〈표 32〉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2008~2018)	64
〈표 33〉 시도별 학교생활 만족도(2018)	66
〈표 34〉 일자리 만족도(2009~2019)	67
〈표 35〉 시도별 일자리 만족도(2019)	67
〈표 36〉 소득 만족도(2009~2019)	68
〈표 37〉 시도별 소득 만족도(2019)	68
〈표 38〉 소비생활 만족도(2009~2019)	69
〈표 39〉 시도별 소비생활 만족도(2019)	69
〈표 40〉 여가생활 만족도(2009~2019)	70
〈표 41〉 시도별 여가생활 만족도(2019)	70
〈표 4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2011~2019)	71
〈표 43〉 시도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2019)	72
〈표 44〉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2010~2018)	73
〈표 45〉 시도별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2018)	74
〈표 46〉 기후변화 불안도(2008~2018)	74
〈표 47〉 시도별 기후변화 불안도(2018)	75
〈표 48〉 야간보행 안전도(2008~2018)	76
〈표 49〉 시도별 야간보행 안전도(2018)	76
〈표 50〉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08~2018)	77
〈표 51〉 시도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18)	77
〈표 52〉 주관적 만족감(2009~2018)	78
〈표 53〉 시도별 주관적 만족감(2019)	78
〈표 54〉 충남도민의 삶의 질 변화(연도별)	79
〈표 55〉 충남도민의 삶의 질 변화(동·읍·면)	79
〈표 56〉 충남 시군별 삶의 만족도 변화	80
〈표 57〉 충남 삶의 질 관련 지표의 변화	82

〈표 58〉 충남 삶의 질 관련 지표의 변화(동지역)	83
〈표 59〉 충남 삶의 질 관련 지표의 변화(읍지역)	84
〈표 60〉 충남 삶의 질 관련 지표의 변화(면지역)	85
〈표 61〉 삶의 질 등의 지역별 격차(2019년)	86
〈표 62〉 삶의 질 주요 항목별 만족도 관련 변수 기술통계(2019): 충남전체	86
〈표 63〉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변수 삶의 질(변수 삶의 질 1-1)	88
〈표 64〉 지역별 생활SOC 수혜인구	94
〈표 65〉 삶의 질과 기반시설 간 관계(평균, tsw = 0.01, 서비스 권역을 형성하는 시설들의 공간가중치 누적값에 수요인구수를 곱한 값)	97
〈표 66〉 읍면동별 시설원단위	101
〈표 67〉 의료권역별 시설원단위	102
〈표 68〉 시군별 시설원단위	103
〈표 69〉 지역(읍면동)별 시설 접근성	104
〈표 70〉 의료권역별 시설 접근성	104
〈표 71〉 도시(시군)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105
〈표 72〉 의료관련 생활SOC(원단위)가 해당 의료시설만족도에 주는 영향	106
〈표 73〉 의료관련 생활SOC(접근성)가 해당 의료시설만족도에 주는 영향	106
〈표 74〉 의료시설 원단위와 접근성 상관분석	107
〈표 75〉 도고면 생활SOC 확충 우선순위 검토	110
〈표 76〉 생활SOC 복합화 사업유형과 추진주체	111
〈표 77〉 생활SOC 사업유형별 사례	112
〈표 78〉 충청남도 시군구 단위 공원 유형별 기초통계 정보	118

그림 목차

〈그림 1〉 삶의 질 수준 및 주거환경 불만도 비교	1
〈그림 2〉 GDP와 성장률	2
〈그림 3〉 우리의 삶의 질	3
〈그림 4〉 이스털린의 역설(예)	3
〈그림 5〉 주요국과 한국의 연령별 삶의 만족 수준	5
〈그림 6〉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7
〈그림 7〉 연구의 진행과정	18
〈그림 8〉 삶의 질의 개념	20
〈그림 9〉 간접효용함수와 단위비용함수	22
〈그림 10〉 EUROSTAT의 삶의 질 지수 영역	27
〈그림 11〉 OECD의 웰빙측정을 위한 “How’s Life” 분석틀	27
〈그림 12〉 Social Progress Index	39
〈그림 13〉 OECD의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 측정결과	40
〈그림 14〉 OECD의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지표의 세부지표 측정결과	40
〈그림 15〉 SOC 의미변화	46
〈그림 16〉 생활SOC 정책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	47
〈그림 17〉 국민 삶의 질 지표 선정 배경	49
〈그림 18〉 전국과 충남의 학교생활 만족도(2008~2018)	65
〈그림 19〉 전국과 충남의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2018)	73
〈그림 20〉 시설별 서비스권역내 인구 산정방식(예)	93
〈그림 21〉 생활SOC서비스 취약(양호)지역 분포(근린시설)	95
〈그림 22〉 삶의 질과 생활SOC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	100
〈그림 23〉 병(의)원 취약지역 도출	108
〈그림 24〉 충남지역 집계구 단위 인구수 단계구분도 및 공원의 공간적 분포현황도 ·	117
〈그림 25〉 충남지역 집계구 단위 도시공원 접근성 추정 결과	120
〈그림 26〉 충남지역 집계구 단위 도시공원 접근성 추정 결과(일부 도시지역 확대) ·	122
〈그림 27〉 신규입지 적정성 시뮬레이션 결과 상위 20% 지점	123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성장과 삶의 질]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 체감도를 측정한 결과(2017), 우리나라는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일과 삶 균형, 커뮤니티 등이 OECD 평균보다 낮다.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Better Life Index(BLI) 순위는 29위이며, 삶의 만족도는 5.9점, 전체적인 삶의 질 점수는 3.8점으로 30위를 기록하고,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안전, 교육, 기술 관련 점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 [삶의 질 격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에 의하면 의료, 교육, 녹지, 문화 시설 등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국내 시도 지역 간 체감 격차가 심각하다. 주거환경 요소 중 시도 지역 간 격차(체감)가 가장 높은 시설은 의료시설로 불만도 최고(경북)-최저(울산)간 149배의 격차를 보이며, 교육 55배, 대기오염 47배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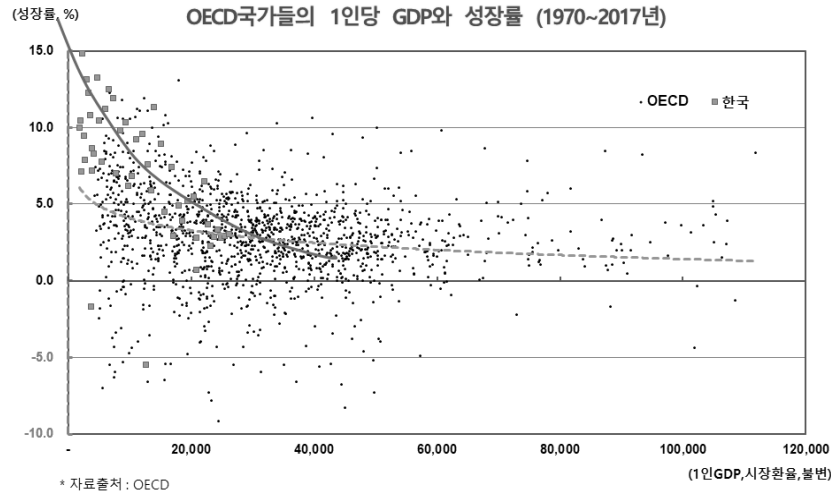


〈그림 1〉 삶의 질 수준 및 주거환경 불만도 비교

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19, 대한민국정부(국토연구원)

■ [정책방향 전환의 시기] 저성장·뉴노멀시대의 도민의 삶의 질과 도정방향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성장시대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으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고, 지속성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많은 학자와 정책가들은 뉴노멀¹⁾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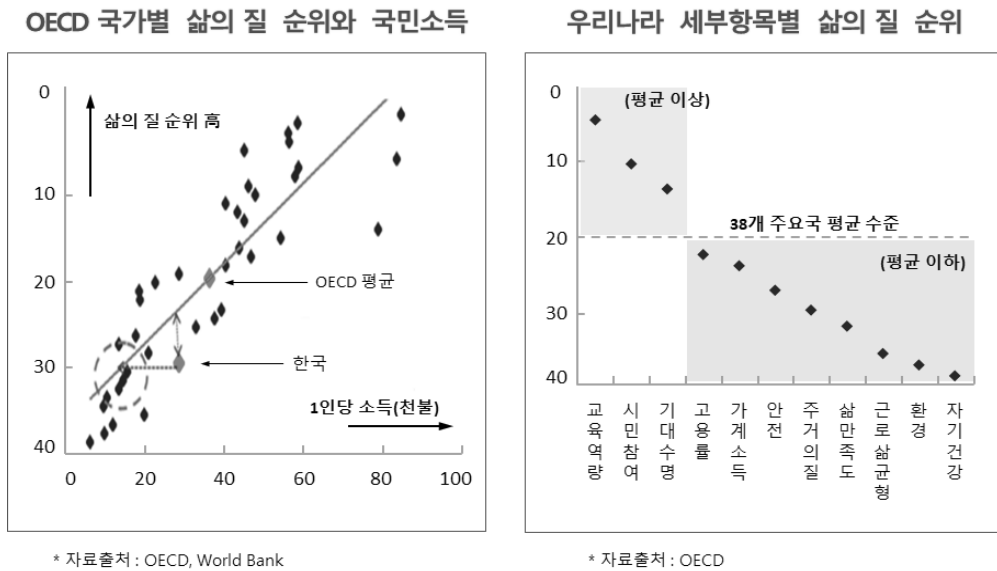


〈그림 2〉 GDP와 성장률

자료: 김현철, 2020.2.3, 글로벌 경제 대변혁과 한국, 충남연구원 특강자료 인용

성장이 국민과 지역민의 삶의 질과 비례적 관계가 아닐뿐더러 이의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자료에서 설명되고 있다. 1인당 GDP와 성장률, 소득과 삶의 질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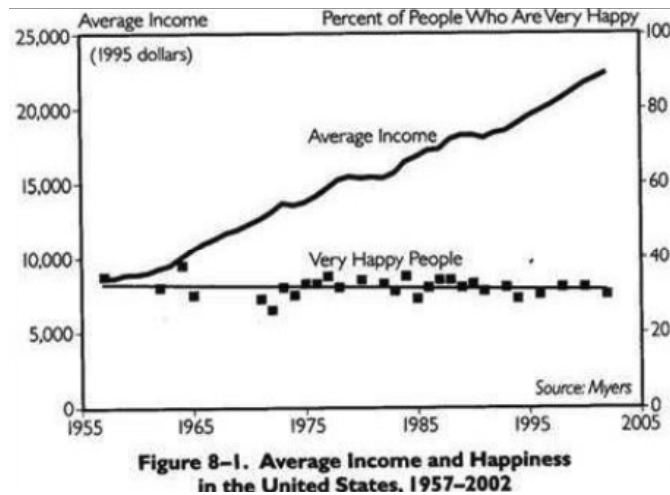
1)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과거에는 비정상(abnormal)로 여겨졌던 것들이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뉴노멀이 새롭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도 이후 새로운 경제현상으로 M.A. El-Erian이 2008년 《When Markets Collide: Investment Strategies for the Age of Global Economic Change》라는 저서에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 등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로 언급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El-Erian, 2008, 2010). 이후 Summers나 Krugman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면서 학술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최상욱, 2016)



〈그림 3〉 우리의 삶의 질

자료: 김현철, 2020.2.3, 글로벌 경제 대변혁과 한국, 충남연구원 특강자료 인용

그 대표적인 이론은 **이스털린 역설**이다. 미국 이스털린 교수는 1인당 실질 GDP의 상승과 행복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 경제성장이 아닌 다른 요인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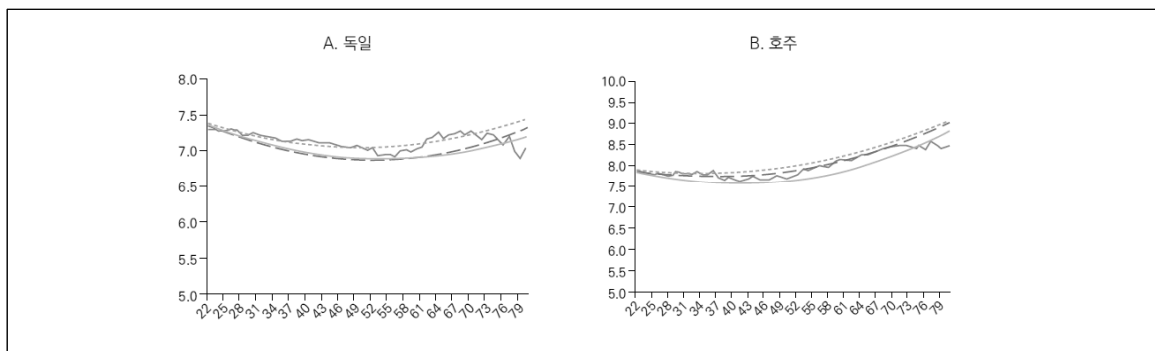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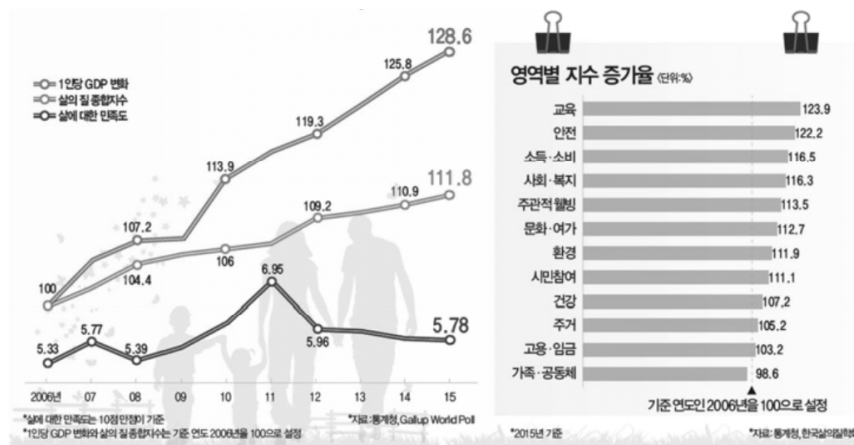
〈그림 4〉 이스털린의 역설(예)

자료 <https://m.blog.naver.com/cu11045/221223535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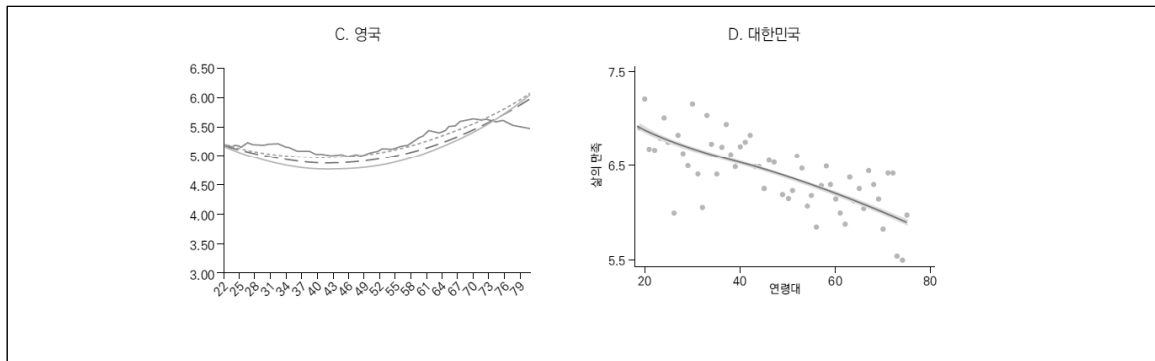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및 지역의 정책방향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과 도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 [beyond GRDP] 1인당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RDP로 삶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에, GDP의 한계²⁾를 지적하면서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GDP가 에어비앤비, 우버 택시 등 공유경제와 삶의 질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GDP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비욘드(Beyond) GDP’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마다 대략 GDP에서 0.3~1%의 오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GDP 추계 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도 다양하게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L3V73WZXA>).



〈그림 5〉 주요국과 한국의 연령별 삶의 만족 수준

자료: 김성아·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충남사회지표 활용도 강화 필요] 또 하나의 연구배경과 필요성은 매년 많은 비용을 투여하여 수립되는 **충남사회지표조사**의 **활용 강화**이다. 충남사회지표조사는 충남도가 조사하는 어떤 조사보다 충남 사회상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대표본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강화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충남사회지표조사³⁾는 도민의 삶의 질 측정에 초점을 둔 조사는 아니지만, 충남사회 전반적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이며, 민선5기와 더불어 시작된 조사는 도정 활용도 강화를 위해 행복과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생활SOC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SOC 수요가 부족한 지방도시들을 중심으로 여러 생활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복합SOC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계획에 비해 지방정부는 생활

3) 충남사회지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일반통계조사로서 충남의 사회적 상태를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측정한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 맞춤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로서, 매년 시군별 상주인구(외국인 포함)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장래인구 등에 기초하여 도내 15,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SOC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순위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에 공모하고 있다. 이에,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 생활SOC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1〉 충남 생활SOC공급현황으로 본 주요 서비스 강화 실태

합계	마을		거점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도서관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 문화센터	체육시설
47	13	1	1	7	5	0	15	5
100.0%	27.7%	2.1%	2.1%	14.9%	10.6%	0.0%	31.9%	10.6%

2) 연구목적

■ [충남 도정의 핵심 키워드] 민선5-6-7기의 핵심키워드 ‘행복(삶의 질)’, 양극화라는 점에서 충남 도정은 이미 물질적·경제적 성장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정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충남사회지표조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격차, 양극화)이 어떤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조사와 보다 활발한 활용을 위해 충남 사회지표조사의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한다.

■ [충남사회지표와 생활SOC지표의 연계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충남사회지표의 활용성 강화를 통한 정책제안의 예시적 분석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지표를 연계 분석한다.

즉, 질적 조사인 충남사회지표와 양적 분석 결과인 국가 생활SOC를 연계 분석한다. 예시적 분석을 위한 이슈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첫째, 양적 분석결과인 24개 생활SOC지표가 충남 도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즉, 양적·물리적 지표에 따라 삶의 질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가설 1).

둘째, 좀 더 구체적으로 의료관련 생활SOC시설의 서비스 수준(원단위와 접근성)에 따라 사회지표로 측정된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 2)

셋째, 생활SOC의 공급방법(예, 생활권공원)을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론을 제시하자라는 연구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슈선정에 있어, 그 핵심 이슈를 ‘의료서비스’와 ‘생활권공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충남도민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강조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서비스체계 개편과 외부공간 즉, 오픈스페이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를 통해 밝히고 싶은 핵심적 내용〉

[충남사회지표조사] 삶의 질 관련

1. ‘충남도의 삶의 질 수준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을 것이다’
2. ‘충남의 전체적인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3. ‘분야별 삶의 질은 높아 졌으며(개선되었으며),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분야별로 충남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충남사회지표조사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생활SOC 관련] 삶의 질과 생활SOC관련 및 주요이슈(의료)

1. ‘생활SOC의 유형별·지역별 공급수준은 차이가 있고 이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 ‘의료관련 생활SOC시설의 서비스 수준(원단위와 접근성)에 따라 사회지표로 측정된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정책의사결정 기법 지원] 생활권공원을 대상으로 생활SOC의 확충 및 최적입지에 대한 시나리오기법 개발 제안

3) 연구결과의 정책활용(기대효과)

- [충남사회지표조사를 통한 삶의 질 지역격차 분석] 충남사회지표 중 삶의 질 관련 지표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충남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분석하여, 행복한 충남, 충남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충남사회지표조사의 개선방안 제시] 충남사회지표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충남사회지표조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충남사회지표와 생활SOC자료의 연계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충남사회지표와 국가 생활SOC지표를 통합 분석하여, 보다 근거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시설과 생활권공원을 대상으로 의료시설 확충방안과 생활권공원 추가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방안 등을 제안한다.

2. 연구의 방법과 진행과정

1) 분석자료: 충남사회지표, 국가 생활SOC자료

- [충남사회지표 시계열자료] 도민의 삶의 질 변화 분석을 위한 시계열 분석을 위한 자료로 2012년부터 조사된 충남사회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시계열 분석은 13년/15년/17년/19년 자료를 활용한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자료와 지표의 공통성 등을 고려하여 홀수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총 295개 항목 중 24개 항목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삶의 질 지표, 세부 만족도 지표(6개) 추출과 기타 17개 설명지표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한다.

〈표 2〉 충남사회지표 시계열 동일지표(2013/2015/2017/2019)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구분
02건강(보건)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시설 이용 현황(경험, 횟수)	통계청
03가구와가족	가족생활	[가구주+배우자] 부모 생존 여부, 동거 여부, 부모 생활비 주제공자	통계청
04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초중고학부모] 교육환경 만족도(공/사교육)	통계청 ('20년)
05노동 (일자리)	고용현황	[일하였음] 종사상 지위(임금(상용...)/비임금(고용원이 있는...))	통계청
05노동 (일자리)	임금근로자 근로여건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근로여건 만족도	통계청
06소득과소비	소득	[가구주] 월평균 가구소득_(기본)	통계청 ('20년)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구분
06소득과소비	소득	소득 만족도	통계청 (‘20년)
06소득과소비	소비와 물가	소비생활 만족도	통계청
주거주택만족도		2013/2017/2019 *2015 없음	
주거환경전반적 만족도		2013/2017/2019 *2015 없음	
07주거와교통	역능성	거주기간(충남, 시군)	통계청 (‘20년)
07주거와교통	주거의 질	[가구주] 향후 이사계획 여부	
07주거와교통	주거의 질	[가구주] 향후 이사계획 시기, 지역	
08환경	생활환경	환경체감도(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	통계청 (‘20년)
09안전	안전의식과 평가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통계청 (‘20년)
11사회통합 (지역사회/ 복지)	역능성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삶, 일가치, 행복, 걱정, 우울함)	통계청 (‘20년)
12도정특성	역능성	[만 19세 이상] 사회발전방향에 대한 견해 (개혁-안전, 복지-성장)	
12도정특성	역능성	[만 19세 이상] 주관적 귀속계층 (사회경제적, 사회정치적)	통계청
기본 항목	기본(DQ)	주택형태 (거처)	
기본 항목	기본(DQ)	주거점유 형태	
기본 항목	기본(DQ)	가구주와의 관계	
기본 항목	기본(DQ)	성별	
기본 항목	기본(DQ)	연령	
기본 항목	기본(DQ)	혼인상태	
기본 항목	기본(DQ)	종교	
기본 항목	기본(DQ)	교육 정도 (학력)	

시계열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통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조사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3〉 충남사회지표 시계열 동일지표 측정방법_만족도 관련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만족도 설문 항목	문항	척도	만족도 설문 항목	문항	척도	만족도 설문 항목	문항	척도	만족도 설문 항목	문항	척도
전반적 교육 만족도	5-15	10	전반적 교육 환경 만족도	5-17	10	전반적 교육 환경 만족도	5-5	10	교육환경 만족도	4-10	10
이용 의료시설 만족도	6-7	10	의료시설 만족도	6-5	10	의료시설 만족도	6-2	10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2-17	10
보육시설 환경 만족도	9-11	10	보육시설 만족도	9-11	10	보육시설 만족도	9-1	10	보육방법 만족도	3-13	10
현 거주주택 만족도	7-4	10	현 거주주택 만족도	7-5	10	-	-	-	주거환경 만족도 (거주주택)	7-6	10
현 주거환경 전반적 만족도	7-7	10	현 주거환경 만족도	7-7	10	주거환경 만족도	7-1	10	전반적 주거환경 만족도	7-6	10
환경쾌적성 (대기)	8-12	10	환경쾌적성 (대기)	8-13	10	환경쾌적성 (대기)	8-1	10	환경체감도 (대기)	8-12	10
환경쾌적성 (수질)	8-12	10	환경쾌적성 (수질)	8-13	10	환경쾌적성 (수질)	8-1	10	환경체감도 (수질)	8-12	10
환경쾌적성 (토양)	8-12	10	환경쾌적성 (토양)	8-13	10	환경쾌적성 (토양)	8-1	10	환경체감도 (토양)	8-12	10
환경쾌적성 (소음)	8-12	10	환경쾌적성 (소음)	8-13	10	환경쾌적성 (소음)	8-1	10	환경체감도 (소음)	8-12	10
환경쾌적성(녹지/자연환경)	8-12	10	환경쾌적성(녹지/자연환경)	8-13	10	환경쾌적성(녹지/자연환경)	8-1	10	환경체감도 (녹지)	8-12	10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10-2	10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10-2	10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10-1	10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10-6	10
사회안전 (자연재해)	11-15	10	사회안전 (자연재해)	11-15	10	사회안전 (자연재해)	11-1	10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자연재해)	9-9	10
사회안전(건축물/시설물)	11-15	10	사회안전 (건축물/시설물)	11-15	10	사회안전(건축물/시설물)	11-1	10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건축및시설)	9-9	10
사회안전 (교통사고)	11-15	10	사회안전 (교통사고)	11-15	10	사회안전 (교통사고)	11-1	10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교통사고)	9-9	10
사회안전(화재 산불 포함)	11-15	10	사회안전(화재)	11-15	10	사회안전 (화재)	11-1	10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화재)	9-9	10
사회안전 (범죄)	11-15	10	사회안전(범죄)	11-15	10	사회안전 (범죄)	11-1	10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범죄)	9-9	10
사회안전 (전반적)	11-15	10	사회안전 (전반적)	11-15	10	사회안전 (전반적)	11-1	10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전반적)	9-9	10
소속감(동네)	12-9	10	지역 소속감	12-21	10	지역사회 소속감	12-3	10	-	-	-
소득만족도	3-2	10	소득만족도	3-2	10	-	-	-	소득 만족도	6-9	10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소비만족도	3-5	10	소비만족도	3-7	10	-	-	-	소비생활 만족도	6-10	10
행복감	12-13	10	행복감	12-19	10	행복감	11-1	10	정서경험(행복)	11-10	10
근심걱정	12-13	10	근심, 걱정	12-19	10	근심, 걱정	11-1	10	정서경험(어제근심정도)	11-10	10
우울	12-13	10	우울	12-19	10	우울	11-1	10	정서경험(어제우울정도)	11-10	10
삶에 대한 만족	12-13	10	삶에 대한 만족	12-19	10	삶에 대한 만족	11-1	10	삶에 대한 만족	11-10	10
하는 일의 가치	12-13	10	하는 일의 가치	12-19	10						

■ **[충남사회지표 단일시점(2019) 자료]** 전술한 시계열적 자료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분석하기에는 한계(동일 항목 부족 등)가 있어 가장 최근인 2019년 충남사회지표를 이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충남사회지표는 다음과 같이 12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충남사회지표 구성(2019년 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구분	관련 부서
건강 (보건)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 평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건강증진식품과
	건강상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가정, 직장, 학교생활)		건강증진식품과
	보건의료서비스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치료 방법		건강증진식품과
	건강상태	자살에 대한 충동/ 자살 충동 이유	통계청	건강증진식품과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시설 이용 현황(경험, 회수)	통계청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통계청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만족도	통계청(20년)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개선사항(불만족 응답자)		보건정책과
가구와 가족	가족생활	가족관계 만족도	통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생활	[가구주+배우자] 부모 생존 여부, 동거 여부, 부모 생활비 주제공자	통계청	노인복지과
	가족생활	[가구주] 미취학자녀 유무/보육방법 (시설)	통계청	출산보육정책과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구분	관련 부서
가구와 가족	가족생활	[가구주] 미취학자녀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요인		출산보육정책과
	가족생활	[가구주] 미취학자녀 보조 양육자 여부 및 돌봄비용 지출 현황		출산보육정책과
	가족생활	[가구주] 분거가족 현황(분거가족 유무, 관계, 지역, 이유, 기간)	통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생활	[가구주] 가사분담		여성가족정책관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초중고학부모] 교육환경 만족도 (공/사교육)	통계청('20년)	교육법무담당관
	교육기회	평생교육 참여 여부		교육법무담당관
	교육기회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교육법무담당관
노동 (일자리)	고용현황	지난 한 주간 한 일(경제활동 상태)	일자리통계	일자리노동정책과
	고용현황	[일하였음] 산업/직업(중분류코드) _[기본]	통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고용현황	[일하였음] 종사상 지위(임금(상용...)/비임금(고용원이 있는...))	통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고용현황	[일하였음]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일자리통계	일자리노동정책과
	임금근로자 근로여건	[임금근로자] 현재 고용형태(전일제, 시간제)	일자리통계	일자리노동정책과
	임금근로자 근로여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_[기본]	일자리통계	일자리노동정책과
	임금근로자 근로여건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근로여건 만족도	통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비임금근로자 근로여건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를 선택한 이유	일자리통계	일자리노동정책과
	비임금근로자 근로여건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_[기본]		일자리노동정책과
	비임금근로자 근로여건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의사		일자리노동정책과
	미취업자 현황	[미취업자] 지난 4주간 구직경험	일자리통계	일자리노동정책과
	미취업자 현황	[미취업자] 구직 애로사항	일자리통계	일자리노동정책과
	고용현황	1년 전 경제활동 여부/종사상 지위		일자리노동정책과
	경력단절여성 현황	경력단절 여성 여부/경험	일자리통계	일자리노동정책과
	경력단절여성 현황	[만25~54세 경단] 경력단절 주된 이유	일자리통계	일자리노동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구분	관련 부서
소득과 소비	소득	[가구주] 월평균 가구소득_기본	통계청('20년)	경제정책과
	소비와 물가	[가구주]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총소비지출액)	통계청	경제정책과
	소득	소득 만족도	통계청('20년)	경제정책과
	소비와 물가	소비생활 만족도	통계청	경제정책과
	소득	[가구주] 가구 부채 여부/이유	통계청	경제정책과
	소득	[가구주] 가구 부채 출처		경제정책과
	소득	[가구주] 가구 소득/부채 변화		경제정책과
	소득	[만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생활비 원천, 자녀 동거여부 등)		노인복지과
주거와 교통	역능성	거주기간(충남, 시군)	통계청('20년)	공동체정책과
	교통체계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통계청('20년)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통근·통학 여부, 교통수단, 소요시간, 지역	통계청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교통환경 개선사항		교통정책과
	역능성	지역 정주의사(10년 후)	통계청('20년)	공동체정책과
	주거의 질	[가구주] 향후 이사계획 여부		건축도시과
	주거의 질	[가구주] 향후 이사계획 시기, 지역		건축도시과
	주거의 질	[가구주] 향후 이사하려는 이유, 계속 거주하는 이유		건축도시과
	주거의 질	[가구주] 임대주택 입주의향		건축도시과
환경	생활환경	환경체감도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	통계청('20년)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안전	안전의식과 평가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통계청('20년)	안전정책과
여가와 문화	문화와 여가생활의 기반	여가/문화 활동 여부, 만족도, 향후 참여의향		문화정책과, 관광진흥과
	문화와 여가생활의 기반	여가/문화 활동 불만족 이유	통계청	문화정책과, 관광진흥과
사회 통합 (지역 사회/ 복지)	역능성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삶, 일가치, 행복, 걱정, 우울함)	통계청('20년)	정책기획관, 공동체정책과
	신뢰	일반인에 대한 신뢰	통계청('20년)	공동체정책과
	사회보장	[가구주] 미취학 아동보육 프로그램 선호도		출산보육정책과
	사회보장	[만 19세 이상] 돌봄노동 어려움 정도 및 돌봄 서비스 수요		출산보육정책과
	사회보장	[만 60세 이상] 노인 복지서비스 선호도		노인복지과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구분	관련 부서
도정 특성	역능성	[만 19세 이상] 사회발전방향에 대한 견해(개혁-안전, 복지-성장)		정책기획관, 공동체정책과
	역능성	[만 19세 이상] 주관적 귀속계층 (사회경제적, 사회정치적)	통계청	정책기획관, 공동체정책과
	지역행정	거주지역 인권의식		자치행정과
	사회보장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		자치행정과
	지역행정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정책관, 자치행정과
	지역행정	다문화사회 인식		여성가족정책관, 자치행정과
기본 항목	기본(DQ)	주택형태(거처)		
	기본(DQ)	주거점유 형태		
	기본(DQ)	주거지역 형태(도시/농/어촌)		
	기본(DQ)	다문화가족 여부		
	기본(DQ)	세대 형태		
	기본(DQ)	가구주와의 관계		
	기본(DQ)	성별		
	기본(DQ)	연령		
	기본(DQ)	혼인상태		
	기본(DQ)	종교		
	기본(DQ)	교육 정도(학력)		

■ **[정책 이슈 도출: 시계열지표+단일시점지표+국가(충남)이슈]**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충남도정의 방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이슈를 도출한다.

삶의 질 지표 중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나빠면서, 지금도 나쁜 지표와 그 중 국가와 충남도 민선7기의 핵심과제와 연결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기본적인 전략을 제안한다.

이슈 선정과 전략도출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설문조사 등도 병행한다. 이는 향후 연구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충남사회지표와 비교분석을 위한 기타 자료]** 충남도민의 삶의 질 분석결과를 다른 지역과 비교 해석을 위해 OECD나 통계청의 삶의 질 지수,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추가 DB를 구축한다.

〈표 5〉 국민의 삶의 질 지표 목록

단위	지표명	단위	단위	지표명	단위
가족· 공동체 (5개)	가족관계만족도	%	주거 (6개)	자가점유가구비율	%
	독거노인비율	%		주거환경만족도	%
	사회단체참여율	%		주택임대료비율 (소득대비, 전국)	%
	사회적 고립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지역사회 소속감	%		통근시간	분/일
건강 (7개)	건강수명	세	환경 (9개)	1인당 주거면적	m ²
	기대수명	세		기후변화불안도	%
	비만율	%		녹지환경만족도	%
	스트레스 인지율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신체활동 실천율	%		대기질 만족도	%
	자살률	%		미세먼지 농도	μg/m ³
	주관적 건강상태	%		소음만족도	%
교육 (6개)	고등교육이수율	%		수질만족도	%
	교육비 부담도	%		토양환경만족도	%
	대학졸업자 취업률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m ² /인
	유아교육 취원율	%	안전 (9개)	가해에 의한 사망률	명/10만명
	학교교육효과	%		교통사고 사망률 (10만 명당)	명
	학교생활만족도	%		범죄피해율	건/10만명
고용 임금 (6개)	고용률	%		산재사망률	명/만명
	근로시간	시간		아동안전사고사망률	명/10만명
	실업률	%		아동학대피해경험률	명/10만명
	월평균 임금	천원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일자리 만족도	%		야간보행안전도	%
	저임금근로자비율	%		화재사망자수	명/년
소득 소비 자산 (7개)	가계부채비율	%	시민참여 (7개)	기관신뢰도	%
	가구순자산	만 원		대인신뢰도	%
	가구중위소득(명목)	만 원		부패인식지수	점/10점
	상대적 빈곤율	%		선거투표율	%
	소득만족도	%		시민의식	점/7점
	소비생활만족도	%		자원봉사참여율	%
	1인당(실질) 국민총소득	만 원		정치적 역량감	%
여가 (6개)	문화여가지출률	%	주관적 웰빙 (3개)	긍정정서	점/10점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회/연		부정정서	점/10점
	여가생활만족도	%		삶의 만족도	점/10점
	여가시간(요일평균)	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			
	1인당 여행일수	일/연			

<https://www.index.go.kr/unify/idx-list.do?clasCd=8&pagenum=1>

■ **[생활SOC자료]** 생활SOC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토모니터링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24개 시설을 활용한다.

서비스 권역의 설정은 충남 15개 시군의 평균 거리(도시시설), 200여 개의 읍면동 평균 거리(지역시설)를 산정하고, 근린시설은 보행권 거리인 1,000M를 설정하였다.

〈표 6〉 충남도내 생활SOC 시설 유형별 시설의 개수와 서비스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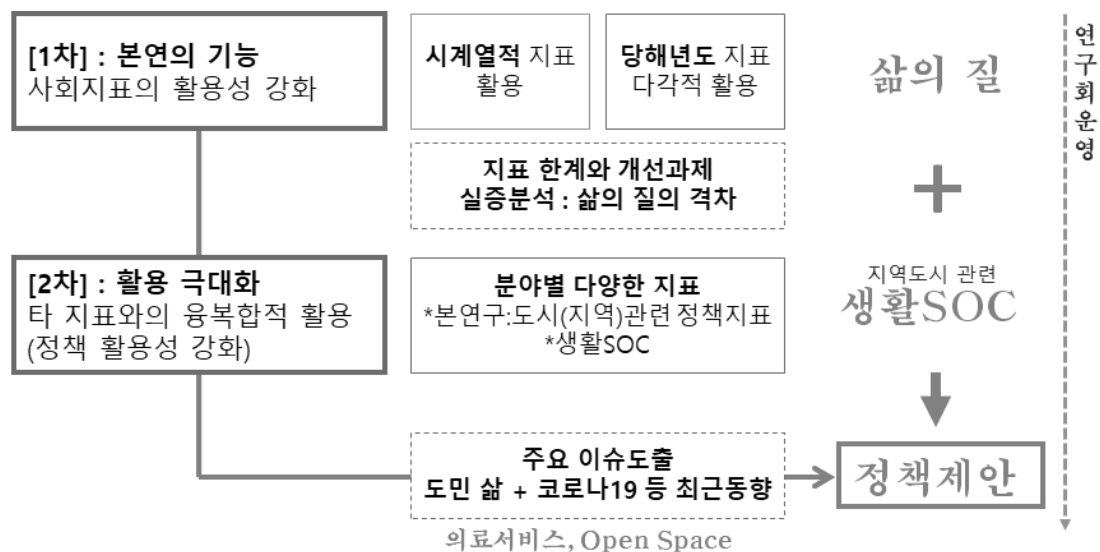
순번	시설유형	시설개수	서비스 권역(m)
1	생활권공원	796	1,000
2	주제공원	62	22,649
3	문화시설	117	22,649
4	도서관	387	1,000
5	공공체육시설	493	5,366
6	어린이집	1,760	1,000
7	유치원	495	1,000
8	초등학교	420	1,000
9	종합사회복지관	20	22,649
10	노인복지관	17	22,649
11	노인교실	3	22,649
12	경로당	5,774	1,000
13	종합병원	13	22,649
14	응급의료시설	15	22,649
15	병원	43	22,649
16	의원	1,074	1,000
17	보건기관	401	5,366
18	약국	918	1,000
19	주차장	4,135	1,000
20	경찰서	129	5,366
21	소방서	94	22,649
22	대피소	334	1,000
23	생활체육시설	493	1,000
24	노인여가복지시설	20	22,649

2) 분석방법과 연구 일정

(1) 연구 주요내용과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사회지표의 본연의 활용성 강화와 타 지표와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정책적 대안제시 부분으로 구분한다. 사회지표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 당해연도의 사회현상 분석과 2013년부터 누적된 사회지표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사회현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지표는 다양한 분야의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부분과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분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생활SOC사업과의 관계 속에서 충남도가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사회지표의 삶의 질과 분야별 만족도를 연계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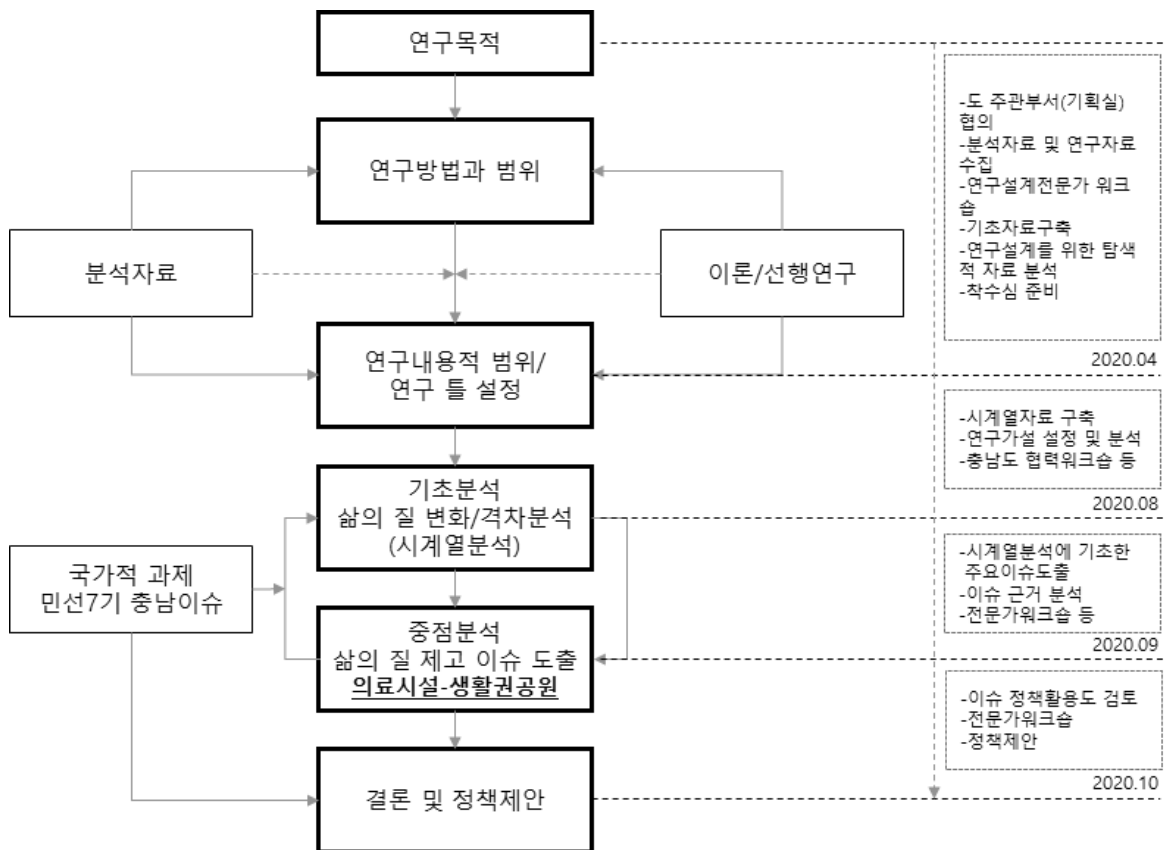
〈그림 6〉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 연구의 진행과정

전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과정에 따라 분석방법이 이루어진다. 먼저, 분석자료의 특성과 활용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연구목적을 명확히 하며, 연구의 틀(분석자료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등도 함께 검토한다.

분석내용과 방법은 기초분석과 중점분석으로 구분한다. 당초 삶의 질의 시계열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나, 자료 정리과정에서 시계열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지표가 한정되어 도민의 삶의 질 변화에 초점을 둔 기초분석과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한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중점분석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목적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도민의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그림 7〉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⁴⁾

1.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1) 관련이론 검토

(1)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정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측정의 용이성과 보편성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을 국가 간 비교하거나 혹은 이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 주요 지표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간과하거나 무기 생산활동이 포함되는 등 그 자체적으로 단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소득과 같은 물리적 풍요가 행복에 대한 체감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대표적으로 이스털린의 역설-이 부각되면서 행복 혹은 주관적 웰빙 등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 시도들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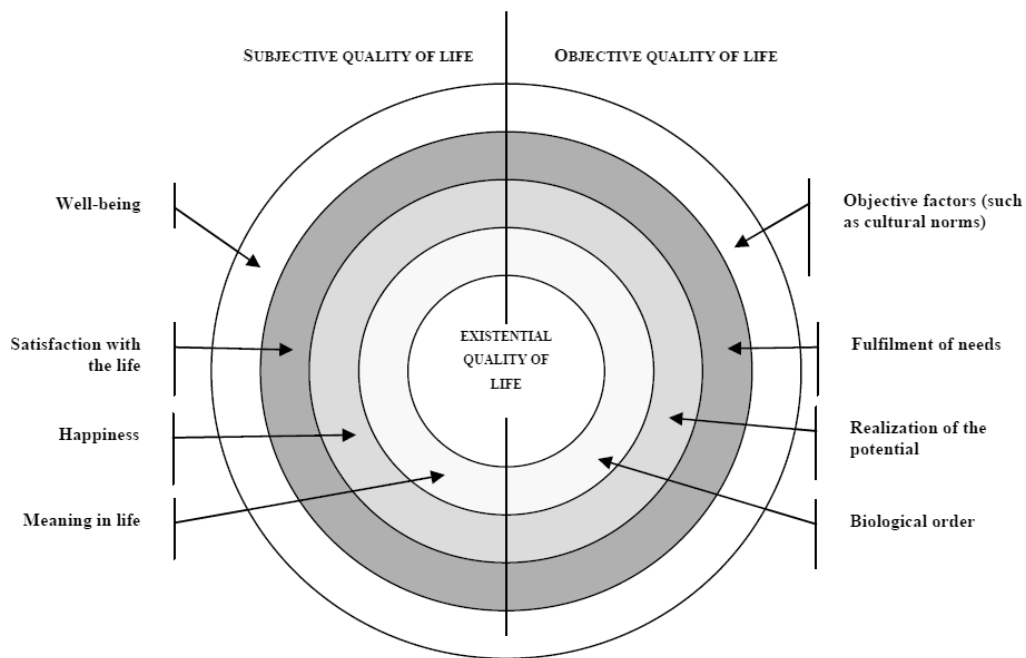
OECD는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의 측정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개인적 웰빙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가능성으로 이뤄진다. 개인적 웰빙은 다시 삶의 질과 물질적 조건으로 구분되고 주관적 웰빙이 삶의 질 측정에 있어 하나의 요소에 포함된다. 삶의 질은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으로 구성되며, 물질적 조건은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근로소득, 주택으로 구성된다.

OECD는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인지평가적 차원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적 차원인 정서경험, 삶에 대한 가치나 의미인 심리적 변영으로 구성된다. 한편, World Happiness Report(2013)에서는 웰빙의 정의에서 행복을 보다 더 강조하여 행복이 웰빙의 일부분이며 이는 두 가지 유형-즉, 헤도닉(hedonic)형태와

4) 2015년 이후 국내 발표논문(<http://www.dbpia.co.kr>)과 외국 논문검색 등을 통해 정리

유데모니아(eudaimonic)형태-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Ryan and Deci, 2001). 전자에 의하면, 웰빙은 인지적 그리고 감성적 요소들의 합으로 정의되어 왔으며(Andrews and McKennell, 1980; Galinha and Pais-Ribeiro, 2011), 이는 웰빙이 사람들의 감성적 반응, 영역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삶의 만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Diener et al., 1999). 헤도닉 웰빙과 유데모니아 웰빙 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대략 0.7의 상관계수-가 존재하며 이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된다(Keyes et al., 2002; Waterman, 1993).

웰빙, 삶에 있어서의 만족, 행복, 삶의 질 등에 관한 용어들은 흔히 혼용되어 사용된다(Layard, 2010). 웰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웰빙의 전반적인 측정이나 삶의 질 혹은 만족의 간소화된 측정에 초점을 둔다. 이를테면, 삶의 질은 국가 단위의 대규모 웰빙의 측정에 이용 되는 반면에 행복은 독립적인 측정으로서 상대적으로 덜 이용된다. 전반적인 웰빙이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 혹은 긍정 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들 간 0.5~0.6의 상관 계수가 나타남을 많은 실증연구들이 제시한다(Bartels and Boomsma, 2009; Diener et al. 2009).



〈그림 8〉 삶의 질의 개념

출처: Susniene and Jurkauskas(2009)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 삶의 질은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강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계발하여 높은 수준의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량이론(capability approach)을 전제로 한다.

Roback(1982)의 이론적 모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賃)이 주어진 상태에서 효용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복합 소비재(賃)와 주거용 토지(賃)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 :

$$\frac{\partial U}{\partial 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frac{\partial Z}{\partial W} = \frac{\partial U}{\partial W} = 0$$

여기서, U , Z , W , 그리고 W 는 임금, 지대, 그리고 비근로 소득(non-labor income)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U = U(Z, W, W)$$

따라서, 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의 효용이 동일하도록 임금과 지대가 조정되어야 한다.

반면, 기업의 생산함수가 보수에 대해 불변이고(constant returns-to-scale) 재화의 가격이 1로 가정된다면, 이윤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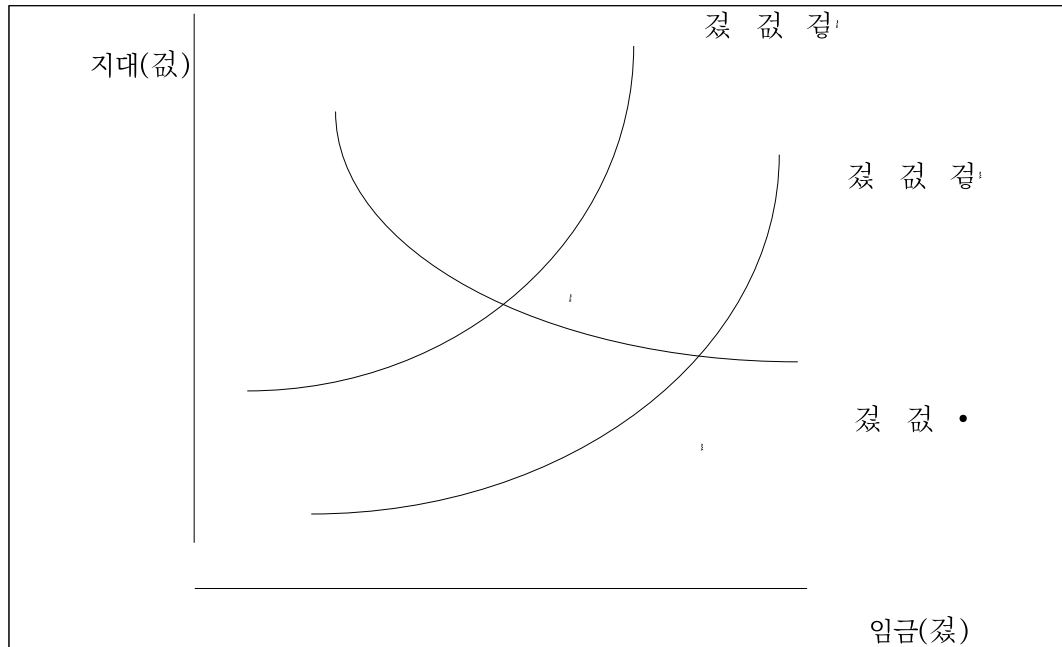
$$\frac{\partial \pi}{\partial Z} = 0$$

여기서, π 는 단위비용함수(unit cost function)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지역 간 균형조건과 기업의 지역 간 균형조건은 지역의 평균 임금과 지대를 각각 x축과 y축에 갖는 그래프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두 지역 1과 2를 비교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단지 날씨가 지역 1에 비해 지역 2에서 보다 좋다고 가정하자. 기업의 생산활동은 공장 내의 실내에서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두 지역에서의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있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단위 비용곡선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날씨가 보다 좋은 지역 2에 거주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지역 2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지역 1에 거주하는 노동자들 보다 높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를 지닌다. 따라서, 두 지역의 균형은 E_1 (지역 1)과 E_2 (지역 2)

에서 각각 발생한다. 이러한 균형상태 하에서, 평균 임금은 지역 1에서 보다 높고 평균 지대는 지역 2에서 보다 높아 지역 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의 균형 임금과 지대는 근로자의 효용극대화조건과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에 의해 결정된다.⁵⁾



〈그림 9〉 간접효용함수와 단위비용함수

(2) 삶의 질 지수 평가 기준

삶의 질은 그 개념상 다층적이고 포괄적이며, 시대에 따라 혹은 학자들 간 상이하게 정의되어 오고 있어 이의 측정을 위한 지수의 설정 역시 많은 이견을 수반한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5)은 발전지표로서 삶의 질 지수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표의 수와 유형에 관해 경제학자들 간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다수의 지표들은 교육, 건강 등과 같은 결과변수가 아닌 투입변수들이다.

셋째, 사회지표들은 현재의 후생을 고려할 뿐 미래와는 관련이 없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 and Hong(2019) 참조

넷째,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기반에 의존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사회지표가 동일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상이한 가중치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간 삶의 질 비교는 부정확하다.

이에 Hagerty et al.(2001)은 다음과 같은 삶의 질 지수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명확한 실질적인 목표, 즉 공공정책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공공정책입안자들이 모든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계열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이론에 기초해야 한다.
다섯째, 지수의 구성요소들은 믿을만하고, 유효하며, 민감해야 한다.
여섯째,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어질 수 있고 여러 구성요소로 나뉘질 수 있다.
일곱째, 영역들은 삶의 경험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
여덟째, 개별 영역은 실질적이면서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부분을 포괄해야 한다.
아홉째, 개별 영역은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열 번째, 개별 영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열한 번째, 만일 특정 영역이 제안되었다면, 이는 대상 집단에 대한 일반적 영역들을 넘어 삶의 질 지수 구성에 있어 독특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열두 번째, 영역들은 삶의 질 지수 구성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있어 잠재적으로 중립, 긍정 혹은 부정이어야 한다.
열세 번째, 영역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개성의 범주들, 인지적 절차, 그리고 감정과 다르다.
열네 번째, 개별 영역의 주관적 범주는 인지적 구성요소와 감성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OECD의 “보다 나은 삶” 지표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우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사람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다차원의 웰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성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가? 혹은 정책 개입에 민감한가? 이는 웰빙,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정책의 설계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다섯째, 통계적 혹은 학술적 집단에서 웰빙지표로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수용되는가?
여섯째,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라.
일곱째,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라.
마지막으로, 반복적 계기를 통해 수집되는가?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웰빙에서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3) 삶의 질 지수

□ 건강-관련 삶의 질(HRQOL)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는 최초의 미국 지수로서,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지난 30일 중에서 며칠이나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까?”, “지난 30일 중에서 며칠이나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까?”, “지난 30일 중에서 며칠이나 좋지 않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었습니까?”와 같이 건강의 영역에 한정하여 조사된다.

□ WHO의 삶의 질(WHOQOL)

여섯 개의 영역-즉, 육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독립의 정도, 사회적 관계, 환경, 정신적 영역-을 포함하나, 심리적 영역이 주관적 평가와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 소비자 신뢰 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삶의 질에서 경제적 관점 영역을 주관적으로 측정한다. 가구와 사회에 대한 다섯 개 질문으로 지표가 구성된다. 1년 전에 비해 재정적으로 나아졌는가? 혹은 악화되었는가?, 앞으로 1년 후에는 재정적으로 나아지거나 악화되거나 혹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향후 1년동안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앞으로 5년동안 호경기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실업 혹은 불황 등이 지속될 것인가?, 가구나 전자제품과 같이 가구 내 큰 지출을 수반하는 소비의 시기로 지금이 적당한가?

□ Money Magazine's “Best Places”

Money사는 설문조사에 기초해 미국 내 살기 좋은 300개 대도시를 발표한다. 지표 가운데 일부는 인구 1인당 의사수, 범죄율, 생활비 지수, 최근의 일자리 성장률, 미래 일자리 성장률 추정치, 특정 규모 주택의 가격, 그리고 지난 1년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에 해당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지표가 신뢰성이 낮고 가변성이 심한 지표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 Index of Economic Well-Being⁶⁾

이 지표는 한 사회의 경제적 웰빙이 평균소비흐름, 생산자본의 총량, 개별 소득의 불평등적 분포, 그리고 미래 소득 예상-즉, 실직과 실업으로부터의 경제적 안정성, 질병, 가계파산, 그리고 노후 빈곤-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존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 American Demographics Index of Well-Being

패러다임이나 삶의 질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웰빙에 대한 경제학자 개념에서 지표들을 선정하며, 이로 인해 임시방편적 지표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는다. 지표로는 소비자 태도, 소득과 고용기회,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 여가, 생산성, 기술을 포함한다.

□ Johnston's QOL Index

객관적 지표들에 의해 구성되며, 단순한 지표값 대신에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변화의 값을 이용한다. 먼저, 9개의 사회적 관심 영역을 나타내는 21개의 객관적 지표들이 제시되며 이는 건강, 공공 안전, 교육, 고용, 소득, 빈곤, 주택, 가구 안정, 그리고 평등에 해당한다. 시계열 자료에서 임의의 한 해를 선택하여 초기 값으로 정하고 1~100의 수치를 갖는 백분율 변화를 이용해 승수를 도출한다. 이를 이용해 수치들을 변화한 후에 이들을 합해 하나의 수치로 지수값을 제시한다.

□ Eurobarometer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와 유사하며, EU회원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4점 척도의 삶에 대한 만족과 응답자 국가 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등을 매년 조사한다. 하지만, 조사의 일반적인 초점은 정치적 이슈나 유럽 통합에 대한 의견 등에 해당한다.

□ Veenhoven's Happy Life-Expectancy Scale

Ruut Veenhoven(1996)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론적 주장과 함께 실증분석 결과에

6) 미국의 Genuine Progress Index도 경제적 웰빙을 측정한다.

기초한다. 그는 기본 욕구 접근법(basic need approach)이나 사회적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을 부정한다. Happy Life-Expectancy는 “표준적인” 삶의 기대치를 0~1의 값으로 측정된 평균 행복 수치와 곱하여 산출된다.

□ UN Human Development Index

1990년 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기대수명, 지식(글을 읽고 쓰는 능력 2/3, 교육연수 1/3), 그리고 소득으로 지표가 구성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 0~1의 값으로 표준화한 이후에 평균을 내서 지수를 산출한다.

□ Diener's Basic and Advanced QOL Index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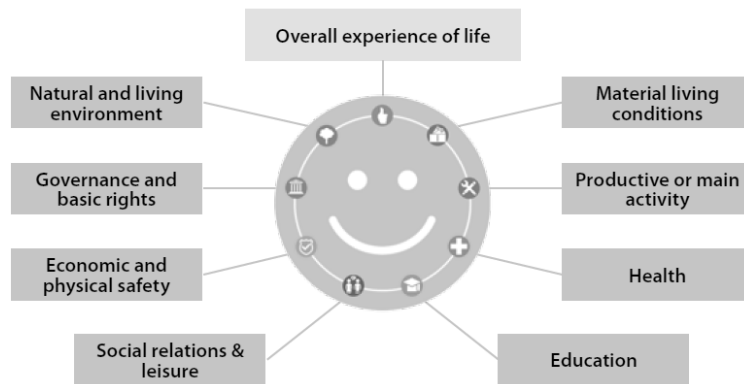
객관적인 삶의 질 기준에 의해 국가들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며, Advanced 지표는 하나의 주관적 요소를 포함한다. Basic 지표는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반면에 Advanced 지표는 선진국에 적용한다. 과거의 지표들이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되었다.

□ 네덜란드의 Living Conditions Index

8개 영역(주택, 건강, 구매력, 여가활동, 이동성, 사회적 참여, 체육활동, 휴일)에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사회적 참여영역은 조직활동에 대한 적극적 기여,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고립과 같은 세부 지표를 포함한다.

□ EUROSTAT의 삶의 질 지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물질적 생활조건, 생산적인 혹은 주요 활동, 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와 여가,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안전, 거버넌스와 기본권, 자연환경과 정주환경으로 영역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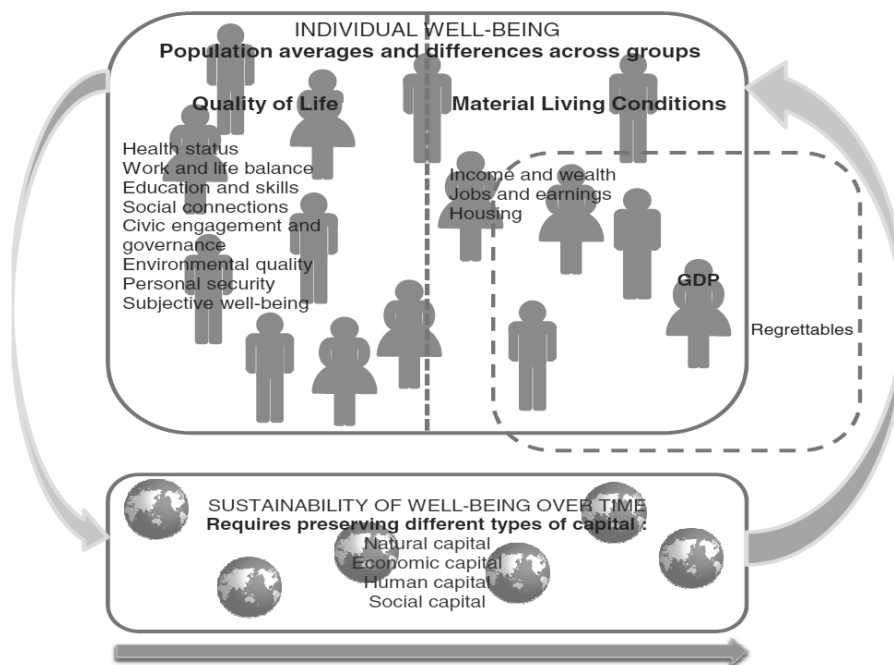


〈그림 10〉 EUROSTAT의 삶의 질 지수 영역

출처: EUROSTAT

□ OECD의 삶의 질 지수

웰빙측정 분석틀이 개인의 웰빙과 웰빙의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삶의 질과 물질적 생활조건으로 구별된다. 삶의 질은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적 질, 개인의 안전, 주관적 웰빙으로 구성된다.



〈그림 11〉 OECD의 웰빙측정을 위한 “How’s Life” 분석틀

출처: OECD

□ Estes' Index of Social Progress

1984년 Richard Este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에 적용되었다. 이 지표의 목적은 사회적 공급의 적절성에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고 성장하는 세계 인구의 기초적인 사회적 그리고 물질적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급의 적절성은 국가 혹은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물질적, 그리고 여타의 필요-예를 들면, 음식, 의복, 주거공간,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 교육,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를 공급하는 정부의 역량에서의 변화를 나타낸다.

2) 선행연구 검토

(1) 정부 역할과 삶의 질

최근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주관적 웰빙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웰빙을 이해하는 집합적 차원의 개념인 커뮤니티 웰빙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인석 외, 2015).

‘집합적’ 차원에서 웰빙을 이해하는 커뮤니티웰빙의 모형 중 하나로 Kee 외(2014)의 커뮤니티웰빙 다차원모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Kee외(2014)의 모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적자본, 경제자본, 자연자본, 인프라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각자 소속된 지역사회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6개 자본과 그 하위요인으로 17개의 지표 및 40개의 세부지표(측정항목)를 가진다.

먼저 **인적자본**은 보건, 복지, 교육이라는 지표로 구성되며 **경제자본**은 고용, 지방재정, 지역경제 지표로 구성된다. **자연자본**은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 서비스, 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공원 및 녹지공간의 세부지표로 측정되며 **인프라자본**은 교통시스템, ICT, 안전이라는 지표로 구성된다. **사회자본**은 규범, 네트워크, 참여, 신뢰라는 지표로 구성되며, **문화자본**은 문화활동, 지역문화공간, 지역문화자산이라는 지표를 가진다.

이처럼 개별 영역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커뮤니티웰빙 다차원 모형의 자본들은 “각 영역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주민들의 집합적 인식과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은 Kee 외(2014)에 의해 제시된 이후로 여러 연구에서 그 타당성과 활용도를 인정받아왔으며, 커뮤니티웰빙의 구조를 밝히는데 활용되어 왔다(기영화 외, 2014; 최영출, 2015; 서인석 외, 2015; 서인석 외, 2016; 이미애·이승중, 2016). 기영화 외(2014)는 고차요인분석을 통해 Kee 외(2014)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최영출(2015)은 Kee 외(2014)의 모형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 바 있다. 이미애·이승중(2016) 또한 Kee 외(2014)의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를 도출해낸 바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웰빙을 논하는 것으로부터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민주발전,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이승중, 2014: 5). 개별 지방정부의 목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과 행복감을 증진하는 것을 통해 주민 복지를 달성하고자 한다. 단순히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 6개 자본과 17개 지표를 구성요소로 하는 다차원 모형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둘째, 커뮤니티웰빙 자본요인들을 지방정부의 자산으로 고려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커뮤니티웰빙 다차원 모형은 여섯 가지 자본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차원 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투입 요소(커뮤니티웰빙을 구성하는 각 자본)와 산출요소(삶의 질)를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인근 지방정부와 같은 다른 의사결정단위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효율성 달성정도, 자본 수준 달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부탄: GDP보다 GNH가 더 중요하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가치가 없다.

“아직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맞춤형 정책

일본(도쿄 아라가와구): 구정은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2)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 중, 도시의 삶의 질이 우위에 있다는 연구로, 박대식·마상진(2007)은 주민 2,000명(도시 600명, 농촌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도시의 삶의 질 지수가 53.167점으로 농촌의 삶의 질 지수인 47.576점보다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승철(2011)은 도시유형을 광역·기술형, 산업·경제형, 교육·생활·복지형, 환경·생태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으며, **농촌형 도시가 경제형 도시와 생활형 도시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유형별로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도시의 유형별로 효율적인 관리 및 정책방향 또한 제시하였다(이승철, 2011). 문경주(2014)는 OECD의 삶의 질 개념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동태적인 삶의 질 점수(자료포락분석을 통한 효율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7개 대도시 지역의 삶의 질이 9개 도지역(농촌지역)의 삶의 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주, 2014).

반면에, 농촌의 삶의 질이 도시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 또한 존재한다. 고광용·고명철(2017)은 미국의 15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광용·고명철, 2017). Campanera & Higgins(2011)는 영국의 208개 도시지역과 144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지역의 삶의 질이 농촌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차이는 공동체 연관지표(community-related indicators)와 경제 연관지표(economy-related indicators)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ampanera & Higgins, 2011). 특정 집단에서 농촌의 삶의 질이 도시의 삶의 질보다 높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 양진향·권영숙(2005)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성인여성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도·농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농촌여성의 삶의 질이 도시여성의 삶의 질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삶의 질 하위영역 중 정신적 안녕과 안정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삶의 질 격차를 일으킨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양진향·권영숙(2005)은 도시여성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밝혀내 삶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논의들과는 반대로,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 또한 다수 존재한다(배민기·조택희, 2016; 허만형, 2014; Ismail 외, 2014; Shucksmith 외, 2009). 한국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한 연구들(배민기·조택희, 2016; 허만형, 2014)에서는 삶의 질을 하위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혼재된 양상을 보였음을 지적하였다. Shucksmith 외(2009)는 2003년의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객관적인 생활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삶의 질(주관적)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고 이 결과가 다른 사례들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를 요약하여 <표 7>과 같이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비교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표 7>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비교에 관한 연구

구분	연구자	분석대상		측정방법		연구내용
		개인·지역	객관·주관	단일차원·다차원	변수	
도시 우위	박대식· 마상진 (2007)	개인	주관	다차원	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 7개 분야의 19개 지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얻어진 가중치를 활용하여 삶의 질 지수를 도출한 후, 도시와 농촌 비교
	이승철 (2011)	개인	주관	다차원	환경, 경제, 사회, 기타 등 4개 분야 19개 지표	네 개의 도시유형에 대해서 4개 분야의 삶의 질 점수를 각각 계산한 후 비교
	문경주 (2014)	지역	객관	다차원	OECD의 삶의 질에 근거한 보건, 사회안전, 경제, 환경 등 4개 부문을 활용하여 DEA 분석을 통해 얻어진 효율성 점수를 삶의 질로 활용	10년 간의 동태적 삶의 질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상호보완성을 인정하고 있음
	Nguyen 외 (2015)	개인	객관·주관	다차원	주관(소득안정성, 근로 조건, 생활조건) 및 객관(저축액, 임금, 문서화된 고용계약) 지표 사용	도시이주 후에 주관적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DID분석 결과 객관적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고광용· 고명철 (2017)	지역	주관	단일차원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활동결과(거주도시 내에서의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해서 느끼는 평가점수 활용	도시와 농촌이라는 구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높은 인구밀도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함

구분	연구자	분석대상		측정방법		연구내용
		개인·지역	객관·주관	단일차원·다차원	변수	
도시 우위	Cam-pasera & Higgins (2011)	지역	객관	다차원	경제적 웰빙, 교육, 환경, 주거, 교통 등 10개 분야의 73개 세부지표를 활용하였으며, 행복(Happiness)과는 상이함을 강조함	농촌의 삶의 질이 도시의 삶의 질에 비해 더 높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삶의 질 분포가 더 균등한 것으로 나타남
농촌 우위	양진항·권영숙 (2005)	개인	주관	다차원	전반적 삶의 질과 5개의 하위 영역(유능감, 정신적 안녕, 신체적 안녕, 안정성, 활력) 측정	전반적 삶의 질, 정신적 안녕, 안정성 영역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임
우위 없음	배민기·조택희 (2016)	개인	주관	다차원	경제, 인프라, 여가 등과 관련된 9개 분야의 지표들을 통해 지역별로 삶의 질 평균을 산출	도시와 농촌의 구분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지역적 인접성, 주변 도시여건 등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삶의 질 격차를 만들어냄
	허민형 (2014)	지역	객관·주관	다차원	객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EQ-5D(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항목과 주관적 수준(건강 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을 고려	객관적 수준에서 본 삶의 질은 도시지역에서 높았으나 스트레스 수준의 측면에서는 농촌이 더 나은 모습을 보임
	Ismail 외 (2014)	개인	주관	다차원	전반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14개의 세부지표를 사용	지역구분은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Shucksmith 외 (2009)	개인	주관	단일차원	주관적 삶의 질을 묻는 문항을 활용해 10점 척도로 측정	일부 국가들에서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차이는 존재했으나, 주관적 삶의 질은 도시와 농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세계행복리포트’도 앞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행복리포트 2020〉

□ 조사개요

- 2014부터 4년에 걸쳐 세계 150개국 도시와 농촌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 실시
- 3가지 질문 ① 자신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0에서 10까지 숫자로 표현
② 조사 전날 즐거움과 웃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긍정영향 평가)
③ 조사 전날 걱정이나 슬픔, 분노를 겪었는지(부정영향 평가) 물었다

□ 조사결과

- [도시민의 삶의 질이 더 높음] 150개국 중 101개 국가(76%)에서 도시 인구의 평균 삶의 만족도가 농촌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농촌 인구의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은 곳은 13곳(9%)으로, 특히 레바논(-0.41), 아이슬란드(-0.38), 네덜란드(-0.35), 뉴질랜드(-0.34), 영국(-0.34) 등이 두드러짐
- [도시의 역설] 농촌이 행복한 이유: 공동체(소속감), 복지불평등
- [15~29세 사람들이 농촌에서 평균적으로 훨씬 더 행복] 15세 중학생과 저소득층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행복했지만, 같은 연령그룹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훨씬 더 행복
- [로리 산토스교수(예일대): 167만명 수강하는 행복의 과학(The Science of Well Being)]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외로움은 행복의 가장 큰 적이며 사회적 관계와 소통이 행복의 필수 요소”

자료: (사)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간 뉴스레터 제59호(2020. 4.2.)

(3) 도시민과 삶의 질: 계층과 삶의 질

행복(Happiness)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 측면, 국가적 측면, 지역적 측면에서 지표의 도출 및 활용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2000년대 들어 심리학 분야에서는 Schwartz(2004) 등을 중심으로 개인이 자신의 건강 등 각종 웰빙 지표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 개인의 삶의 질을 비롯하여 건강, 행복, 슬픔 등에 대한 내적 기준, 자아정체성, 가치관 등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변하는 개념을 총칭하는 “반응전환이론(Response Shift Theory)”이 주장되었다. “반응전환이론”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이명숙, 2015), 청년세대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지 않고 청년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에 대해 분석한 연구(변금선 외, 2019), 청년층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취업과 관련하여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연구(왕정하, 2018)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령에 따른 계층별, 특히 청년층이 느끼는 행복감과 삶의 질의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

이명숙(2012)은 한국인의 행복감 및 정서적 안녕감에 대해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세대에서 계층간, 성별간 차이를 심화 분석하였다. 그리고 “반응전환이론”에 기반한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 심신의 건강문제가 행복감 및 정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에 대해 청년세대(18~39세), 중년세대(40~59세), 노년세대(60세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청년세대-노년세대, 중년세대-노년세대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청년세대와 중년세대가 노년세대에 비해 행복감 및 정서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세대간 차이 Scheffe 다중비교

	(I)	(J)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주관적행 복감	청년세대	중년세대	-.033	.051	n.s.
		노년세대	.163*	.060	p<.05
	중년세대	청년세대	.033	.051	n.s.
		노년세대	.195*	.062	p<.01
정서적 안녕감	청년세대	중년세대	-.230	.119	n.s.
		노년세대	.440*	.141	p<.01
	중년세대	청년세대	.230	.119	n.s.
		노년세대	.670*	.144	p<.01

자료: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분석

청년세대 내부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계층, 교육수준, 성별에 따라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층과 하층으로 느끼는 집단의 정서적 안녕감이 비교적 낮게 나왔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에서 느끼는 경쟁의식, 비교의식, 과거부터 학습되어온 남녀의 역할구분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예측변인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족 및 지인의 사회적 지지와 전문가의 지지는 청년세대의 정서적 안녕감을 제고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Stephen Post(2005, 2007)를 중심으로 이타적 행동 및 정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변금선 외(2019)는 청년층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청년을 경제활동 집단과 비경제활동 집단으로 구분한 후 다시 취업자·미취업자, 재학생·비재학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집단별 삶의 질 수준을 경제, 교육노동, 건강, 사회관계, 시민참여, 행복 등 6개

영역에서 리커트척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 건강, 시민참여, 행복 등 4개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집단의 삶의 질이 낮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에서 다중격차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온 집단은 경제활동 집단에서 실업에 속한 집단, 비경제활동 집단에서 비재학생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청년의 14.02%가 다중격차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년이 처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은 청년집단을 하나의 동일한 그룹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이 처한 여건별, 계층별 특성을 파악하고 계층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표 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 경험 빈도분석

구분		전체(%)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전체	취업	실업	전체	재학생	비재학생
영역별 빈도 분포	0개 영역	37.33	40.50	44.47	20.79	30.09	43.00	10.88
	1개 영역	31.94	30.56	31.68	19.46	35.09	33.96	29.72
	2개 영역	16.71	16.19	15.29	31.37	17.90	17.85	25.78
	3개 영역	9.40	8.61	6.37	17.24	11.19	3.72	21.27
	4개 영역	3.96	3.41	2.09	4.36	5.23	1.48	10.45
	5개 영역	0.59	0.62	0.00	6.78	0.50	0.00	1.89
	6개 영역 모두	0.07	0.10	0.11	0.00	0.00	0.00	0.00
다중격차(3개 이상 영역)		14.02	12.74	8.57	28.38	16.92	5.20	33.61

자료: 변금선 외,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마지막으로 왕정하(2018)는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고용에 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직장을 직장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판단은 과거 사회의 계층구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Treiman, 1977; Treiman and Ganzeboom, 1990; 차종천, 1998; 유홍준·김월화, 2006; 이왕원·김문조·최윤희, 2016)라는 인식에서 임금 외에 13가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Index of Job Desirability(Jencks, Perman and Rainwater, 1988), 업무의 성격 및 자율성 등을 포함한 주관적 만족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Ritter and Anker, 2002)까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직장의 유형을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계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 6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직장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 및 직장유형별 진입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직장의 유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만족도 분석결과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긴 대기업의 선호도가 2011년-2017년 약 30%하락하였고, 구직자에게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1위를 하는 중소기업보다 정부기관 재직자의 소득가치가 낮은 반면 직장 선호조사에서는 정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높은 유보임금이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직장 유형별 진입특성은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년의 경우 임금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은 교육기관으로 진입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여건 등 환경가치는 대기업보다 정부기관 및 외국계 기업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유형이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과 비교하여 부정적 정서(삶의 질 하위영역)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재직자들의 부정적 정서 경험빈도가 중소기업 재직자들에 비해 높다는 것이 의미있다. 이와 같이 최근 청년들의 직장 선호도와 직장 유형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하였고,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가치도 변화였다. 따라서 대기업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가치, 발전가치 등 수요에 대응한 고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생활SOC관련 연구

최근 정부는 “일상생활”과 “주민편익”을 중심으로 한 생활SOC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수립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제안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조진우, 2020). 과거 기초생활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생활밀착형 SOC 등 다양한 명칭을 활용하였으나, 2018년 8월 정부가 “생활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하면서 생활SOC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4월 정책협의회 주도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이 발표되었고,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조진우(2020)는 생활SOC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시기 대형 토목사업 중심의 SOC사업은 국가적 목표달성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변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SOC의 질이 낮아졌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기존 사회간접자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① 간접자본의 증가와 생활 체감간의 괴리, ② 지역발전의 불균형, ③ SOC 시설의 노후화라고 제시하였고, 새로이

추진 중인 생활SOC 정책의 문제점은 ① 생활SOC 개념의 혼란, ② 생활 SOC관련 계획 제도의 미비, ③ 재정 부담 문제, 생활 SOC 사업 유지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생활 SOC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생활SOC에 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생활 SOC 가이드라인의 마련, 주민참여의 확보, 생활SOC 사업에서 민간투자의 활용, 시설 관리 운영방안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김미옥(2020)은 문재인 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분석하여, 현 정부의 생활 SOC 정책이 공공 체육시설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특성으로 국가 최저기준 설정 및 공간분석 활용과 시설 복합화 및 정부 내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생활SOC 정책의 짧은 기간과 추진주체의 부족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생활SOC 정책의 추진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기존 인식과 다르게 공공 기반시설 중 하나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기본 체육시설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공공체육시설과 타 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광역 자치단체 중심의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이해령 외(2020)는 경기도 5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생활SOC의 공간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의 특성과 규모가 유사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노인인구비율, 유아인구비율로 계층을 구분하여 생활SOC 접근성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을 기준으로 나눈 계층 간 생활SOC 접근성의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비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집단은 도서관, 의원, 공원 등의 접근성이 좋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집단은 경로당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이들을 종합하여 사회·경제적 계층과 접근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아인구 비율과 고령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평균지가는 높을수록 생활SOC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은 외(2019)는 경기도내 생활SOC 시설 및 주요 유형을 분석하여 생활SOC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경기도의 생활SOC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시설, 커뮤니티시설,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등 유사용어로 쓰인 생활인프라의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시설별 범주를 분류하였다. 건축물 대장 분석을 통해 현재 경기도내 분포한 SOC시설을 의료형, 복지형, 교육·학습형, 문화·체육형, 생활편의형으로

분류하여 특성을 제시하였고, 경기도 생활SOC 추진단에서 조사한 시군별 수요현황 분석 자료와 소요예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수요 및 공급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전술한 바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삶의 질의 개념과 구성요소, 측정 등 많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학자와 발표기관마다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범위와 분석 시점] 대부분이 선행연구가 국가나 특정 도시차원에의 한 시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본 연구는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충남)**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한 시점이 아니라 **시계열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자료와 내용] ‘**충남사회지표**’를 활용한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2012년 이후 매년 조사되고 있는 ‘충남사회지표조사’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충남 도민의 삶의 질**을 지역 간, 계층간 격차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제안**에 초점을 두었다.

[충남도정과 연계(정책 근거) 강화] 충남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 분석결과는 민선7기 도정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민 밀착형·도민 체감형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기반 정책개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삶의 질 측정과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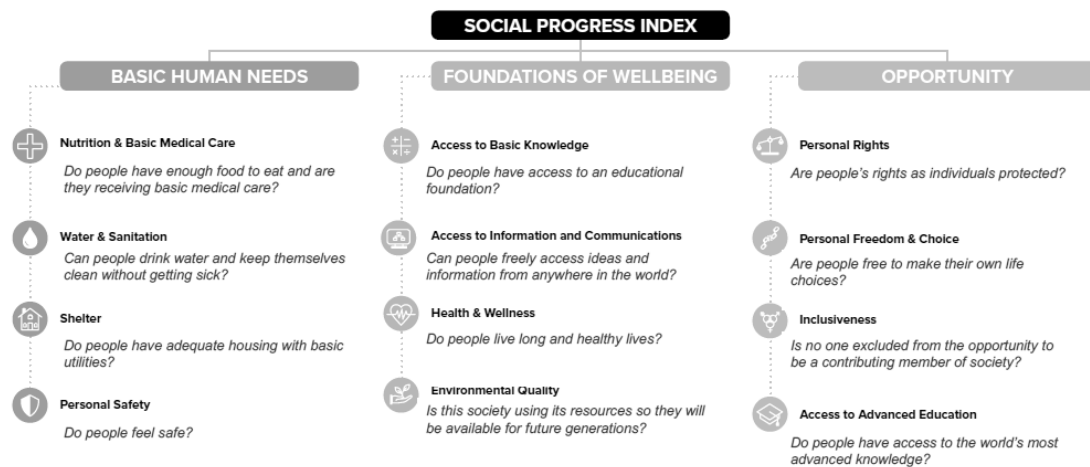
1) 삶의 질 측정

(1) 국가 단위 측정

OECD를 포함하여 많은 국제기구들에서 국가별 삶의 질지수 혹은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Social Progress Imperative 역시 Social Progress Index라는 국가 단위 삶의 질지수를 개발하여 측정 및 발표해 오고 있다. 이 지표는 세 개의

영역들에 대한 점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세 영역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건강, 위생, 주거공간), 웰빙의 근간(기대수명, 교육과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개인적인 권리, 선택의 자유, 일반적인 관용)를 포함한다. 이는 GDP가 보다 높은 삶의 표준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삶의 질에서 상위 10개 국가들은 선진국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강한 경제를 갖는 것은 세 지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

2020년 국가별 삶의 표준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삶의 질에서 151.19점을 기록해 33위에 해당하며, 안전지수 70.76점, 건강지수 83.59점, 오염지수 54.8점, 기후지수 68.39점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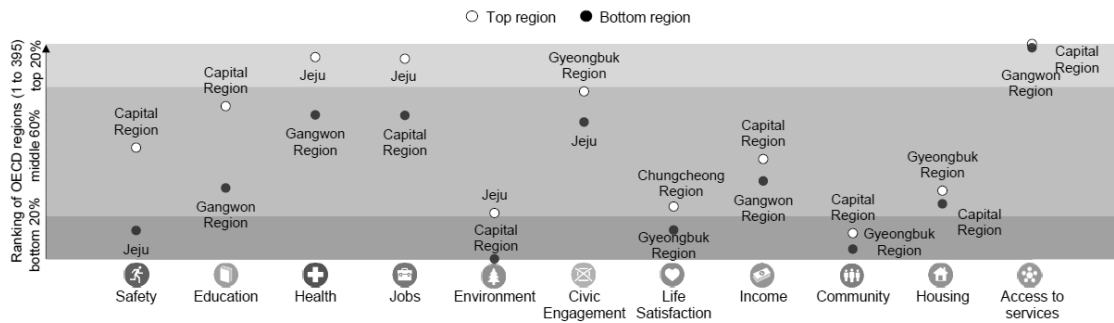
〈그림 12〉 Social Progress Index

출처: Social Progress Imperative

(2) 국가 내 지역 단위 측정

Blomquist, Berger, and Hoehn(1988)은 미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이나 임금을 강수량이나 온도, 학생-교사 비중, 해안가 여부 등의 어메니티(amenity) 변수들의 함수로 가정하고 이를 회귀분석하여 이러한 변수들의 암묵적 가격을 추정한다. 다시,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해 개별 도시의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한다.

OECD의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 측정결과에 의하면, 안전영역에서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OECD회원국들의 평균과 비교하여 13개 웰빙지표들 가운데 8개에서 우리나라 지역들은 우수하며 특히 고용과 실업률에서 그러한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13〉 OECD의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 측정결과

출처: OECD(<https://www.oecdregionalwellbeing.org/KR05.html>)

〈표 10〉 OECD의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 세부지표 측정결과

지역	교육	직업	소득	안전	건강	환경	시민참여	인터넷 접속	주택	공동체	삶의 만족
수도권	8.8	7.4	3.9	8.6	9.1	0.0	7.3	10.0	2.2	3.1	3.3
경남	7.8	6.9	3.7	8.5	7.4	0.0	7.3	10.0	2.8	2.5	3.3
경북	7.1	7.2	3.4	9.0	7.7	0.0	7.2	10.0	3.3	0.3	2.2
호남	6.5	7.2	3.3	9.0	7.7	0.0	7.8	10.0	3.3	1.7	3.0
충청	7.5	7.7	3.5	8.6	8.2	0.0	6.8	10.0	2.8	2.7	3.7
강원	6.3	7.1	3.2	8.8	7.2	0.0	6.7	10.0	2.8	1.4	2.2
제주	7.6	8.9	3.5	4.9	9.4	2.1	6.3	10.0	2.8	2.1	2.6

출처: OECD

	Korean regions		Country average	OECD average
	Top 20%	Bottom 20%		
Safety Homicide Rate (per 100 000 people), 2013	1.3	2.0	1.5	3.4
Education Labour force with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 2014	87.1	75.2	82.6	74.3
Health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2013	82.4	80.9	81.5	79.7
			6.6	8.4
Jobs Employment rate (%), 2014	73.1	67.5	70.8	66.3
			3.3	8.6
Environment Level of air pollution in PM 2.5 (µg/m³), 2013	16.4	27.0	23.7	10.4
Civic engagement Voters in last national election (%), 2015	77.6	74.4	75.9	68.1
Life satisfaction Self-evaluation of life satisfaction (scale from 0 to 10), average 2006-14	6.1	5.7	5.9	6.7
Incom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in USD PPP), 2013	17 093	14 904	15 779	17 916
Community Perceived social support network (%), average 2006-14	79.4	74.1	78.3	88.9
Housing Rooms per person, 2013	1.5	1.3	1.3	1.8
Access to services Households with broadband access (%), 2014	99.2	97.4	98.5	69.8

Note: Data in the first two columns refer to average values of top and bottom regions of national ranking and until the equivalent of 20% of the national population is reached.

〈그림 14〉 OECD의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지표의 세부지표 측정결과

출처: OECD

〈삶의 질과 행복〉

□ [삶의 질(Quality of Life)]

- 삶의 질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및 가치 체계와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및 관심에 관련된 삶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개인적 인식(WHO Quality of Life Groups(1995))
- 삶의 질이란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의 총계'(OECD(1994))
- 삶의 질이란 '소득이나 생산과 같은 정량적 측정 보다는 사회지표에 의해 측정된 인류복지의 개념'(UN(1997))
- 삶의 질은 행복(Happiness), 도덕(Morale), 만족감(Satisfaction)의 3가지 지표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Stock, Okun and Benin(1986))

□ 행복(Happiness)

- '행복'은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Shin and Johnson(1978))
-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조명한 외(1994))

※ 우리사회는 표면적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지난 반세기 동안 소득과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에 거의 함몰되어 있다시피 했다.(구교준(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사회조사와 삶의 질 측정

(1) 한국의 사회지표

①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배경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청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75년부터 '78년까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기초하여 경제기획원에서 '79년 최초 발간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사회변동의 수준, 국민의 삶의 질 등을 복지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전무하였고, 이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최초 작성 이후 '87년(한국개발원), '95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년(한국사회과학자료원) 네 차례에 걸쳐 개편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통계보고서로 활용되고 있다.

②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및 구성

기존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작성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하고, 현 사회 상태를 종합적, 체계적, 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구조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의 제공(통계청, 2011)”이라고 명기하고 있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이와 같이 ‘한국의 사회지표’는 초기 목적이 광범위하여 실제 작성 가능한 지표의 수는 126개에 불과하였고, 많은 지표들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2년 연구를 통해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가들의 사회지표를 비교검토한 후 현재의 지표체계가 구성되었다.

현재 사회지표는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세 가지 차원의 모니터링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고, 기존 13개(통계청(2011년) 기준) 영역에서 ‘정보와 통신’, ‘복지’ 분야의 하위항목을 분산시켜 11개 영역으로 통폐합 및 축소시켰다. 차원, 하위영역, 지표의 일관성을 위해 일부 항목의 명칭변경 및 영역이동, 기존 지표의 폐지, 신규지표의 추가 등으로 현재 11개 부분에 281개 지표가 조사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지표체계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표 11〉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 구성

기존체계 (2011년)	현재체계 (2012년 이후)	하위영역
인구	인구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분포와 이동
가구와 가족	가구와 가족	가족 및 가구 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규범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소득, 소득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 및 투자, 조세와 재정
노동	노동	인적자원, 취약계층 취업현황,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노사관계
교육	교육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 및 과정, 교육효과
보건	건강	건강상태, 건강결정인자, 보건의료시스템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주택공급관리, 주택시장, 주거상황, 주거의 질, 교통시설, 교통체계, 교통비용, 교통복지, 교통환경
정보와 통신		
환경	환경	오염물질배출, 자연자원이용, 생활환경, 생태환경, 환경관리,
복지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생활의 기반, 문화예술활동, 여가체육활동, 미디어활용(정보통신영역)
안전	안전	자연재해, 안전사고, 안전의식과 평가, 범죄, 형사사법활동
정부와 사회참여	사회통합	정치참여, 사회참여, 역능성, 사회적 소통, 신뢰, 관용성, 사회보장
국제비교	영역별	-

자료: 한국사회과학자료원(2012) 참고 재작성

(2) 지역사회지표와 충남사회지표⁷⁾

① 지역사회지표

지역사회지표 작성 배경에는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과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지역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가단위의 사회지표는 국가수준에서 평균적인 실태를 제시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지표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2>의 사회지표 및 지역사회지표의 발전단계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지표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진 시기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지방분권에 대한 강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심 등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였다.

〈표 12〉 사회지표와 지역사회지표의 발전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물질적 단계 (material stage)	사회적 단계 (social stage)	지구적 단계 (global stage)
시 기	1930~1960년대	1970~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주요 계기	대공황	사회문제 → 사회지표 운동	온난화 등 환경문제 (리오정상회담, 1992)
관심 영역	경제발전	복지, 웰빙	환경
주요 개념	GDP, 국민계정	삶의 질, 사회발전	지속가능성
주요 지표	경제	경제+사회	경제+사회+환경
주요 흐름 /관심	경제발전 지상주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 증대	지구적 환경문제, 사회의 질 등 전체 사회에 대한 관심 증가
지역사회지표	-	지역사회지표의 등장(80년대 중반)	지역사회지표의 세계적 확산

자료: 통계청(2016). 2016 지역사회지표 작성매뉴얼(이론편).

〈표 13〉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 작성 현황(2015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사회지표				사회조사			
	작성 여부	최초 년도	주기	횟수	실시 여부	최초 년도	조사기준시점	표본규모
서울특별시	○	2003	1	13	○	2003	10.01	20,000
부산광역시	○	1996	1	20	○	1996	08.17	17,860

7)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 통계청과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연구, 충남사회지표보고서를 참조 재정리.

광역자치단체	사회지표				사회조사			
	작성 여부	최초 년도	주기	횟수	실시 여부	최초 년도	조사기준시점	표본규모
대구광역시	○	2011	1	5	○	2011	05.14	8,400
인천광역시	○	1998	1	10	○	1998	08.21	9,000
광주광역시	○	1999	1	17	○	1999	05.04	4,905
대전광역시	○	2011	1	5	○	2011	09.01	5,000
울산광역시	×	-	-	-	○	1998	04.29	3,820
세종특별자치시	○	2014	1	2	○	2014	08.27	1,800
경기도	○	1998	1	18	○	1997	08.17	31,740
강원도	○	2008	1	8	○	2014	08.28	15,800
충청북도	○	2009	1	7	○	2009	08.24	11,604
충청남도	○	2012	1	4	○	2012	08.17	15,000
전라북도	○	2012	1	4	○	2007	08.19	13,515
전라남도	○	2012	1	4	○	2011	08.24	19,152
경상북도	○	1997	1	9	○	1997	08.17	20,304
경상남도	○	1992	1	24	○	1992	05.01	19,280
제주특별자치도	○	2012	1	4	○	2012	10.01	3,000

주)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7년 이후 사회지표 작성중단, 2013년 이후 사회조사 작성 중단
 자료: 통계청(2016). 2016 지역사회지표 작성매뉴얼(이론편).

충남사회지표는 지역사회지표의 일환으로 2012년에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충남사회지표의 작성목적은 도민생활 수준 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 사회변화의 예측, 도 정책 설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충남사회지표

충남사회지표에 적용된 지표통계는 행정자료, 통계청 등 다양한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 하여 작성되었고, 추가로 ‘충남 사회조사’를 통해 통계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2019년 충남사회지표는 총 12개 생활영역 및 기본항목, 49개 하위영역, 16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도 실과, 시군, 지역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지표 중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집약적이고 세부적이며, 시의성이 떨어지는 지표는 통합 및 삭제하고, 신규지표는 공식통계이면서 가능한 전국 및 충남 15개 시군을 포괄하고, 동일 척도로 반복적으로 측정 자료가 누적되는 지표 중에서 선정하였다. 169개 지표 중 79개 지표는 충남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나머지 90개 지표는 내부 행정자료 및 기초통계(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충남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충남사회지표 선정에 있어서는 민선5기 이후 도정 비전 키워드인 ‘행복’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표 14〉 충남사회지표의 영역별 구성(2019)

(단위: 개)

영역	지표합계	행정자료	사회조사
인구	11	11	
건강(보건)	18	10	8(8)
가구와 가족	16	8	8(1)
교육	11	8	3(3)
노동(일자리)	20	6	14(14)
소득과 소비	16	8	8(3)
주거와 교통	15	5	10(6)
환경	12	11	1(1)
안전	9	8	1(1)
여가와 문화	6	4	2(2)
사회통합(지역사회/복지)	18	8	10(9)
도정특성	8	3	5(5)
기본 항목	9	-	9(7)
합 계	169	90	79(60)

주) 사회조사의 ()안 수치는 가구원 대상 지표수임
자료: 충청남도(2019), 2019 충남사회지표.

3. 국가 생활SOC정책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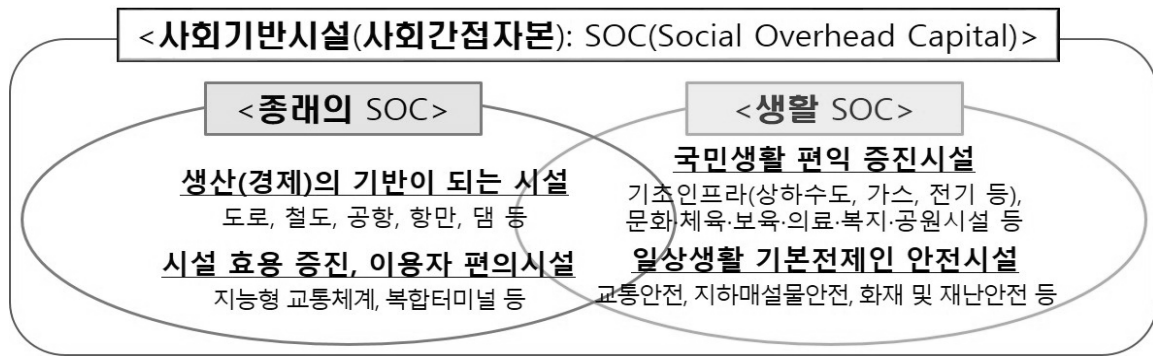
1) 국가 생활SOC 정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도입하였다. SOC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 되지는 않지만 생산을 위한 기여가 높은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과 대규모 생산

8) 생활SOC 3개년 계획안(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보도자료, '19. 4. 15) 참고 재정리

시설까지 포함한다. 이와 다르게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을 꾸려나기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그림 15〉 SOC 의미변화

출처: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보도자료, '19. 4. 15.)

우리나라는 단기간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였고, 국민소득 3만불에 도달하였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는 취약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성장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여가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사람중심의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

(2) 범정부 추진체계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의장:국조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협의회, 자문회의 영상회의 등 다양한 협의과정을 거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실천계획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3) 비전·목표 및 투자규모

2022년까지 생활SOC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년간 총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수준의 투자규모가 예상된다.

2) 국가 생활SOC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①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14.5조 원을 투자하고, ②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9조 원을 투자하며, ③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6조 원을 투자한다.



〈그림 16〉 생활SOC 정책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출처: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보도자료, '19. 4. 15)

(2) 사업추진 방식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전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행 부처별·사업별 별도의 공급방식에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하나의 공간에 복합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SOC의 복합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공공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업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시설의 조성 후에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책임운영 원칙 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클라우드 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물로 건설하여 광역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대표 사례 〉

- 10분 내에 체육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 최소한 1개의 공공요양시설이 만들어 집니다.
- 시설을 복합화하여 문화·체육·돌봄 등 여러 가지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축되는 학교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민이 거주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인프라는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근로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춰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3개년 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향후 정책환경 변화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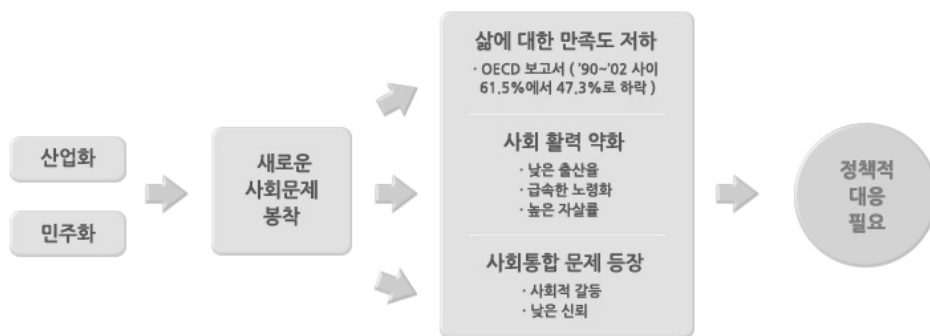
제3장. 사회지표로 본 충남의 삶의 질 격차와 충남사회지표 개선 정책건의

1. 우리나라 삶의 질 변화

1) 국민의 삶의 질 지표⁹⁾

(1) 측정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발전에 성공하였으나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나 체감하는 행복도의 수준을 높이지는 못하였다. 또한 경제발전과 동시에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이념적 갈등 등 다양한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기존 경제 성장 기반의 물리적 지표에서 벗어나 삶의 질에 포커스를 둔 정책 및 지표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해당 지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림 17〉 국민 삶의 질 지표 선정 배경

자료: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https://www.index.go.kr>)

9) <https://www.index.go.kr/unify/idx-list.do?clasCd=8&pagenum=1>

국가지표체계의 하나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전체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의 관계는 개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환경적 여건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각 지표는 공식 통계에서 활용되는 자료의 질과 적정성, 가치중립성을 고려하여 지표검토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2) 측정 결과

11개 영역 80개로 구성된 국민의 삶의 질 지표의 측정값은 <표 15>와 같이 결측치가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체계적인 설계에 의한 측정보다는 기존 지표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표의 최근 10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소비·자산 영역과 여가 영역에서 상승 폭이 큰 지표가 나타났으며, 안전영역에서는 수치가 하락한 지표가 비교적 많았다. 그 외 스트레스, 고용안전, 기후변화, 여가시간 등에서 수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삶의 질 영역별 변화

단위	지표명	단위	◀ 분석년도 ▶									증감율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족·공동체 (5개)	가족관계만족도	%	54.8		56.2		55.2		56.5		56.6	0.4
	독거노인비율	%				18.4	18.4		18.9		19.4	1.1
	사회단체참여율	%		46.6		50.1		48.9		49.7		1.1
	사회적 고립도	%		31.5		32.4		30.2		28.7		-1.5
	지역사회 소속감	%				64	62.5	62.5	56.9	62.2	69.2	1.6
건강 (7개)	건강수명	세	71		73	73		73	73			0.5
	기대수명	세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0.4
	비만율	%	30.9	31.4	32.4	31.8	30.9	33.2	34.8	34.1	34.6	1.4
	스트레스 인지율	%	70		69.6		66.5		54.8		54.4	-3.1
	신체활동 실천율	%	31.5		34.7		36.9		38		38.3	2.5
	자살률	%	31.2	31.7	28.1	28.5	27.3	26.5	25.6	24.3	26.6	-2.0
	주관적 건강상태	%	46.8		45.3		48.7		47.1		48.8	0.5
교육 (6개)	고등교육이수율	%	39.7	40.4	41.7	43.1	44.6	45.5	46.9	47.7	49	2.7
	교육비 부담도	%	78.4		73		69.3		65.3		64.4	-2.4
	대학졸업자 취업률	%		67.6	68.1	67.4	67	67.5	67.7	66.2	67.7	0.0
	유아교육 취원율	%	85	85.6	88.6	92.4	91.8	91.2	92.7	93.9	93.5	1.2
	학교교육효과	%	32.9		34.9		36		35		35.6	1.0
	학교생활만족도	%	46.5		46.7		49.7		52.3			2.0

단위	지표명	단위	◀ 분석년도 ▶									증감율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용 임금 (6개)	고용률	%	58.9	59.3	59.6	59.8	60.5	60.5	60.6	60.8	60.7	0.4
	근로시간	시간	187	180.8	173.7	167.9	165.5	173.5	171.1	168.5	156.4	-2.2
	실업률	%	3.7	3.4	3.2	3.1	3.5	3.6	3.7	3.7	3.8	0.3
	월평균 임금	천원	2,555	2,563	2,611	2,669	2,719	2,740	2,806	2,814	2,899	1.6
	일자리 만족도	%		24.6		26.3		25.3		27.7		2.0
	저임금근로자비율	%	24.7	23.8	23.9	24.7	23.7	23.5	23.5	22.3	19	-3.2
소득 소비 자산 (7개)	가계부채비율	%	147.5	152.9	153.9	154.9	158	162.3	174.5	181.7	184.2	2.8
	가구순자산	만 원	25,333	25,930	27,767	27,365	27,682	28,429	29,631	30,673	32,904	3.3
	가구중위소득(명목)	만 원		2,076	2,189	2,344	2,370	2,448	2,549	2,649	2,756	4.1
	상대적 빈곤율	%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5
	소득만족도	%		11.7		12.1		11.4		13.3		2.2
	소비생활만족도	%		12.7		13.6		13.9		15.4		3.3
	1인당(실질) 국민총소득	만 원	2,808	2,832	2,900	2,998	3,083	3,260	3,391	3,493	3,518	2.9
여가 (6개)	문화여가지출률	%			4.2	4.28	4.35	4.44	4.53	5.27	5.76	5.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회/연		8.4		8.9		8.4		9		1.2
	여가생활만족도	%		19.3		27.1		26		27.2		5.9%
	여가시간(요일평균)	시간					4.2		3.6		3.9	-1.8
	여가시간 충분도	%					66.2		60.1		52.4	-5.7
	1인당 여행일수	일/연	9.1	7.2	9.7	10.2	10.5	10.9	11	12.5		4.6
주거 (6개)	자가점유가구비율	%	54.3		53.8		53.6		56.8	57.7	57.7	0.8
	주거환경만족도	%	80.9				79.8		83.9	86.2	85.9	0.8
	주택임대료비율 (소득대비, 전국)	%	19.2		19.8		20.3		18.1	17	15.5	-2.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0.6		7.2		5.4		5.4	5.9	5.7	-7.5
	통근시간	분/일	33.7					35.4				1.0
	1인당 주거면적	m ²	28.5		31.7		33.5		33.2	31.2	31.7	1.3
환경 (9개)	기후변화불안도	%	66.4		62.5		62.9		62.8		49.3	-3.7
	녹지환경만족도	%	42		43.8		41.2		41.3		50.2	2.3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56.1	59.1	62.6	66.4	69.1	71	72.7	75.6		4.4
	대기질 만족도	%	36		40.1		36		31.7		28.6	-2.8
	미세먼지 농도	μg/m ³						25.2	25.2	24.6	22.8	-3.3
	소음만족도	%	27.3		29		26.9		27.5		29.9	1.1

단위	지표명	단위	◀ 분석년도 ▶									증감율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환경 (9개)	수질만족도	%	33.9		36.9		34.9		33.2		29.3	-1.8
	토양환경만족도	%	30.4		33.5		30.5		29.4		29.4	-0.4
	1인당 도시공원 면적	m ² /인	8.4	8.3	8.9	8.6	8.6	8.8	9.2	9.6	10	2.2
안전 (9개)	가해에 의한 사망률	명/10만 명	1.3	1.1	1.1	1.1	1	1	0.9	0.8	0.8	-5.9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명	11.1	10.5	10.7	10.1	9.4	9.1	8.4	8.1	7.3	-5.1
	범죄피해율	건/10만 명			4,600		3,743		3,556		3,679	-3.7
	산재사망률	명/만 명	1.36	1.3	1.2	1.25	1.08	1.01	0.96	1.05	1.12	-2.4
	아동안전사고사망률	명/10만 명	4.8	4.1	4.2	3.8	2.9	3.1	2.8	2.9	2.4	-8.3
	아동학대피해경험률	명/10만 명	56.2	61.6	66.8	72.5	109.9	131.7	215.4	265	301.4	23.4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11.3		13.8		9.5		13.2		20.5	7.7
	야간보행안전도	%	59.4		56		57.4		59.1		63.5	0.8
	화재사망자수	명/년	304	263	267	307	325	253	306	345	369	2.5
시민 참여 (7개)	기관신뢰도	%				44.7	41.3	40.4	39.7	40.8	41.2	-1.6
	대인신뢰도	%				72.2	73.6	66.2	65.9	65.3	69.2	-0.8
	부패인식지수	점/10점	5.4	5.4	5.6	5.5	5.5	5.4	5.3	5.4	5.7	0.7
	선거투표율	%			75.8					77.2		0.4
	시민의식	점/7점				5.55	5.4	5.46	5.48	5.51	5.54	0.0
	자원봉사참여율	%		19.8		19.9		18.2		17.8		-1.8
	정치적 역량감	%				26.7	21.8	21.6	19.2	22.2	22	-3.8
주관적 웰빙 (3개)	긍정정서	점/10점				6.3	6.2	6.3	6.4	6.5	6.6	0.9
	부정정서	점/10점				4	4.1	3.7	3.7	3.6	3.3	-3.8
	삶의 만족도	점/10점				5.7	5.7	5.8	5.9	6	6.1	1.4

주) 붉은 색 음영은 감소지표, 푸른색 음영은 증가지표를 표현함

자료: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https://www.index.go.kr/unify/idx-list.do?clasCd=8&pagenum=1>)

2) 국민행복도 변화

OECD 자료를 이용한 박명호·박찬열(202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등 긍정적 요인은 지난 20년 간 지속적 상승세를 보였지만 소득 격차 및 고용 격차는 다소 악화된 양상을 드러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간 물질적 격차는 개선된 반면 사회적 격차의 간격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행복지표로 살펴본 한국의 위상 변화

구분			자수값 연평균 증가율 90-17(%)	순위						상대수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990	1000	2010	2017	순위변화 90-17		1990	2017
긍정적요인(27)			0.27	23	23	23	23	-	0	L	L
물질적기반(28)			1.11	22	23	23	23	-	-1	L	L
소득(31)			7.80	28	25	22	20	↑	8	L	M
고용(31)			0.00	10	14	10	11	-	-1	M	M
교육(31)			1.76	15	14	11	17	-	-2	M	M
건강(31)			2.22	26	25	16	10	↑↑	16	L	M
주거(28)			0.67	22	24	24	24	-	-2	L	L
환경(31)			-0.50	26	28	29	30	↓	-4	L	L
사회적기반(31)			-0.54	21	26	27	25	↓	-4	M	L
가족(31)			-2.61	5	6	13	12	↓	-7	M	M
사회관계(31)			-0.70	21	27	24	25	↓	-4	M	L
공동체생활(31)			-0.45	22	23	24	24	-	-2	M	L
문화여가생활(31)			1.55	30	29	28	29	-	1	L	L
안전(31)			-0.66	15	26	30	30	↓↓	-15	M	L
부정적요인(30)			-0.05	29	29	29	30	-	-1	L	L
물질적 격차(30)			0.06	27	27	28	26	-	1	L	L
소득격차(31)			-0.52	21	24	27	27	↓	-6	M	L
고용격차(30)			0.98	28	28	27	26	-	2	L	L
사회적 격차(31)			-0.16	31	31	31	31	-	0	L	L

구분			지수값 연평균 증가율 90-17(%)	순위					상대수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990	1000	2010	2017	순위변화 90-17	1990	2017
성별격차(31)			0.93	31	30	31	31	-	0	L
세대갈등(31)			-1.10	28	29	31	31	↓	-3	L

주1) 괄호안은 관련 자료가 없는 결측국가를 제외하고 지수를 계산한 국가의 수를 의미함

주2) 분석기간 중 순위가 10계단 이상 증가 '↑↑', 3계단 이상 증가 '↑', 10계단 이상 감소 '↓↓↓', 3계단 이상 감소 '↓', 2계단 이내로 변동한 경우 '-'로 표기함

주3) 상대수준은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30% "H(High)", 중위 40% "M(Middle)", 하위 30% "L(Low)" 표기

자료: 박명호·박찬열, 2020, 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연구,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3호 1-25

2. 전국과 비교한 충남의 삶의 질

전국과 충남을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로 사회지표로 제시되어 있는 지표 중 전국과 비교가 가능한 사회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및 가족, 인구, 교육·훈련 등 영역별 주요지표에 대해 비교하였다.

〈표 17〉 한국의 사회지표 중 사회조사로 비교가능한 항목

부문	지표	충남 평균	전국 평균
가구·가족	1) 가족관계 만족도*	62.9	56.6
	2) 가사분담률(본인주도/분담/남편주도)	39.4/58.5/2.1	38.4/59.1/2.5
	3)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견해 (결혼 해야한다 / 이혼 하지않는 것이 좋다)	51.8/16.5	48.1/16.7
건강	4) 주관적 건강상태*	50.9	48.7
	5) 유병률*	30.0	27.5
	6) 의료서비스 만족도* (병의원, 종합병원)	61.0/64.2	54.2/57.8
교육	7) 교육비 부담도	56.2	64.4
	8) 학교생활 만족도*	59.7	58.0
노동	9) 일자리 만족도*	33.6	32.3
소득·소비·자산	10) 소득만족도*	14.5	14.1
	11) 소비생활만족도	15.9	16.9

부문	지표	충남 평균	전국 평균
여가	12) 여가생활만족도	28.2	28.8
	1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61.4	66.2
생활환경	14)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 대기질, 수질, 소음, 토양환경, 녹지환경 만족도	32.3/32.0/ 40.1/34.7/53.2	28.6/29.3/ 29.9/29.4/50.2
	15) 기후변화 불안도	48.0	49.3
범죄·안전	16) 야간보행 안전도*	65.8	63.5
	17) 사회안전 인식*	23.8	20.5
주관적 웰빙	18) 주관적 삶의 만족도	66.4	66.5

*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1) 가구·가족 부문

(1)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충남은 전국대비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세부항목별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높고,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가족관계 만족도(2008~2018)

(단위: %)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반적인 만족도	전국	56.1	54.8	56.2	55.2	56.5	56.6
	충남	60.2	61.6	59.6	60.5	61.5	62.9
배우자와의 관계	전국	65.7	64.9	65.6	65.2	65.0	69.5
	충남	65.0	67.5	69.0	68.3	71.8	72.9
자녀와의 관계	전국	72.7	72.2	73.0	73.0	71.6	75.6
	충남	72.1	77.3	76.3	78.5	77.7	79.3
자기 부모와의 관계	전국	64.5	63.2	64.0	63.5	63.9	66.9
	충남	68.9	67.8	66.3	69.5	67.3	70.3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전국	52.5	51.1	51.1	48.6	52.4	56.5
	충남	58.1	54.4	56.4	50.8	55.3	58.7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국	53.0	52.8	53.1	52.2	53.2	55.7
	충남	57.6	58.6	58.3	60.1	59.8	62.2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국	43.8	42.8	42.8	40.6	42.5	46.1
	충남	47.5	48.2	50.6	48.2	50.5	53.2

주1) 13세 이상 인구 중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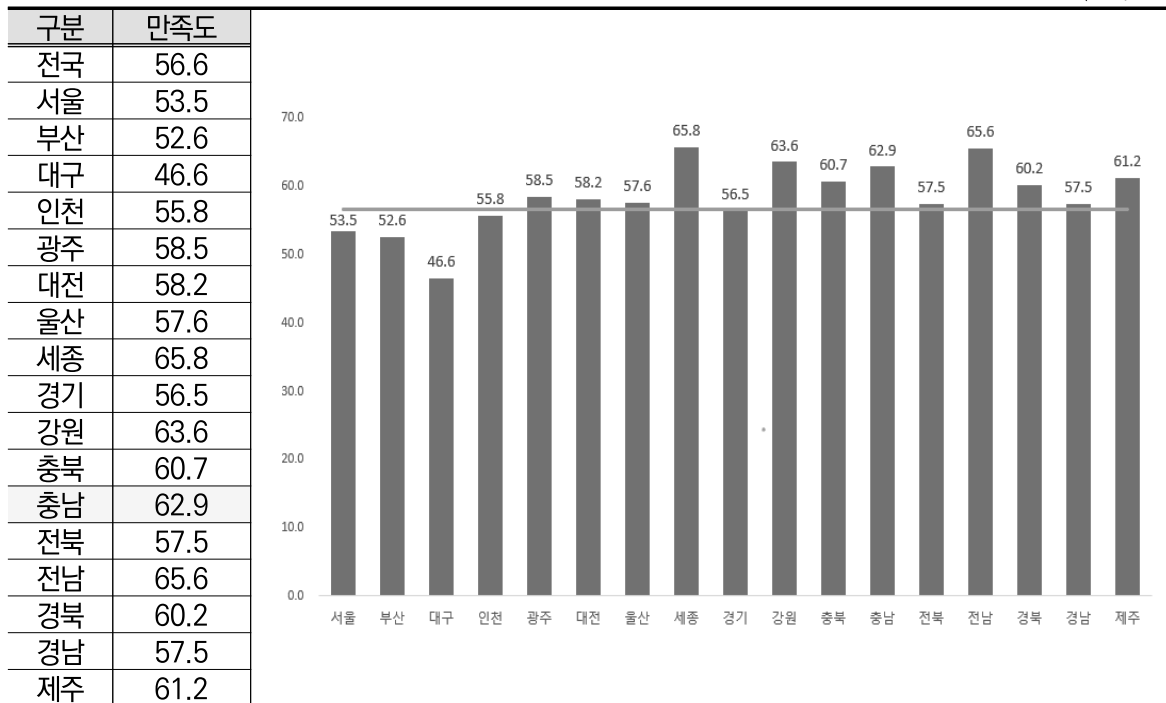
주2)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는 충남이 세종, 전남, 강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시도별 가족관계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2018)

(단위: %)



(2) 가사분담률

남편과 아내의 가사분담의 비율을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평분담한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가사분담률(2008~2018)

(단위: %)

성 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부인주도	66.5	61.3	52.0	50.2	43.8	38.4
	공평분담	32.4	36.8	45.3	47.5	53.5	59.1
	남편주도	1.1	1.9	2.6	2.3	2.7	2.5
충남	부인주도	66.0	62.8	53.9	47.3	46.4	39.4
	공평분담	32.7	35.5	44.0	51.1	52.1	58.5
	남편주도	1.3	1.7	2.1	1.6	1.4	2.1

주1) 13세 이상 인구 중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비율.

주2)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가사분담에 대해 부인주도(‘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와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책임진다’), 공평하게 분담, 남편주도(‘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와 ‘남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책임진다’)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주3)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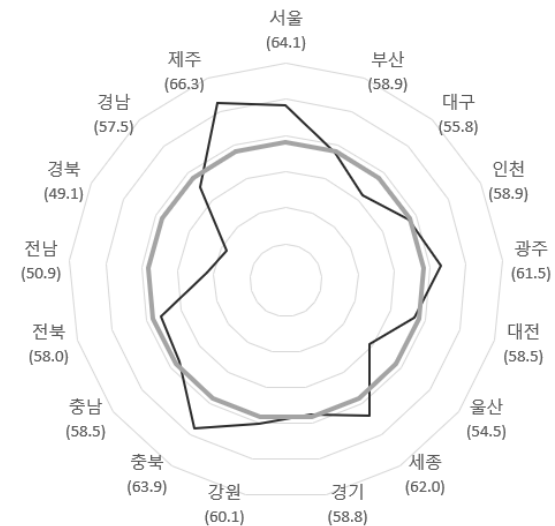
시도별 가사분담률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중이 제주, 서울, 충북이 높고, 충남은 공평 분담비중이 낮은 편(11위)으로 나타났다.

〈표 21〉 시도별 가사분담률(2018)

(단위: %)

구분	부인주도	공평분담	남편주도
전국	38.4	59.1	2.5
서울	33.3	64.1	2.6
부산	39.0	58.9	2.2
대구	42.1	55.8	2.0
인천	37.5	58.9	3.6
광주	36.2	61.5	2.4
대전	39.7	58.5	1.9
울산	43.4	54.5	2.2
세종	35.7	62.0	2.4
경기	38.4	58.8	2.8
강원	37.0	60.1	2.9
충북	33.4	63.9	2.8
충남	39.4	58.5	2.1
전북	39.1	58.0	2.8
전남	46.9	50.9	2.1
경북	49.2	49.1	1.7
경남	40.5	57.5	2.0
제주	31.1	66.3	2.7

〈시도별 가사분담률 중 공평분담 비율〉



(3)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견해

결혼과 이혼에 대해 전국과 충남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혼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2〉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견해(2008~2018)

(단위: %)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	전국	해야 한다	68.0	64.7	62.7	56.8	51.8	48.1
		보통	27.7	30.7	33.6	38.9	42.9	46.6
		하지 않아도 된다	2.9	3.3	1.8	2.0	3.1	3.0
	충남	해야 한다	71.0	71.5	65.0	58.6	52.5	51.8
		보통	25.3	24.2	28.5	36.8	42.8	42.5
		하지 않아도 된다	2.4	3.1	2.9	3.0	2.7	2.9
이혼	전국	해서는 안된다	58.6	56.6	48.7	44.4	39.5	33.2
		보통	31.9	33.4	37.8	39.9	43.1	46.3
		하는 것이 좋다	7.1	7.7	10.9	12.0	14.0	16.7
	충남	해서는 안된다	63.5	61.2	54.9	49.2	39.1	35.4
		보통	30.8	30.0	29.5	38.3	40.4	43.8
		하는 것이 좋다	3.7	6.8	12.6	10.0	16.3	16.5

주1) 결혼: 13세 이상 인구의 결혼과 이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주2) 결혼: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아야 한다(‘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않아야 한다’)

이혼: 해서는 안된다(‘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 해서는 안된다’), 보통(경우에 따라 이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좋다(‘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와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한다’)

주3)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 결혼은 ‘해야한다’는 전남, 전북, 경북에 이어 6번째로 높았으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 경북, 강원에 이어 6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와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각각 6번째와 7번째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3〉 시도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2018)

(단위: %)

구분	결혼		이혼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좋다
전국	48.1	3.0	33.2	16.7
서울	45.4	3.1	30.1	17.3
부산	48.0	2.5	37.0	17.2
대구	48.3	3.0	28.2	17.1
인천	44.7	3.7	31.1	16.2
광주	47.6	3.6	30.3	18.5
대전	45.4	3.4	35.4	14.0
울산	41.2	3.4	32.0	14.5
세종	47.0	4.1	31.8	14.3
경기	46.4	3.2	30.9	17.6
강원	50.9	2.3	40.0	13.3
충북	52.3	3.1	34.6	17.0
충남	51.8	2.9	35.4	16.5
전북	55.3	3.2	43.0	13.8
전남	57.6	2.5	41.8	16.1
경북	53.9	2.2	39.9	15.8
경남	49.4	3.3	33.3	16.5
제주	52.2	1.5	34.0	15.5

2) 건강 부문

(1)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중에서 충남은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59세와 40~49세에서 전국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24〉 주관적 건강상태(2008~2018)

(단위: %)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전체	계	51.5	46.8	45.4	48.7	47.2	48.7
	연령	15~19세	72.4	70.2	-	-	-	-
		13~19세	-	-	72.9	74.7	74.8	75.7
		20~29세	70.0	63.8	61.9	67.1	64.0	67.2
		30~39세	60.6	52.8	50.4	56.2	54.2	58.4
		40~49세	51.4	45.8	43.6	47.2	46.2	48.2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연령	50~59세	41.5	38.6	36.9	41.2	40.4	42.2
		60세 이상	23.0	23.6	21.6	23.9	25.4	27.2
		65세 이상	19.6	20.4	19.5	20.9	22.3	22.8
충남	전체	계	49.7	48.2	45.5	50.0	49.4	50.9
	연령	15~19세	78.7	69.1	-	-	-	-
		13~19세	-	-	71.5	77.7	80.2	76.4
		20~29세	71.5	65.8	60.7	68.3	73.0	70.9
		30~39세	65.5	57.5	54.3	56.7	58.3	59.7
		40~49세	53.5	55.7	45.9	53.2	47.4	52.4
		50~59세	36.7	44.1	40.8	48.7	42.5	48.8
		60세 이상	19.5	21.6	22.4	21.6	25.6	26.7
		65세 이상	15.6	20.1	19.6	17.8	21.7	24.9

주1) 13세 이상 인구 중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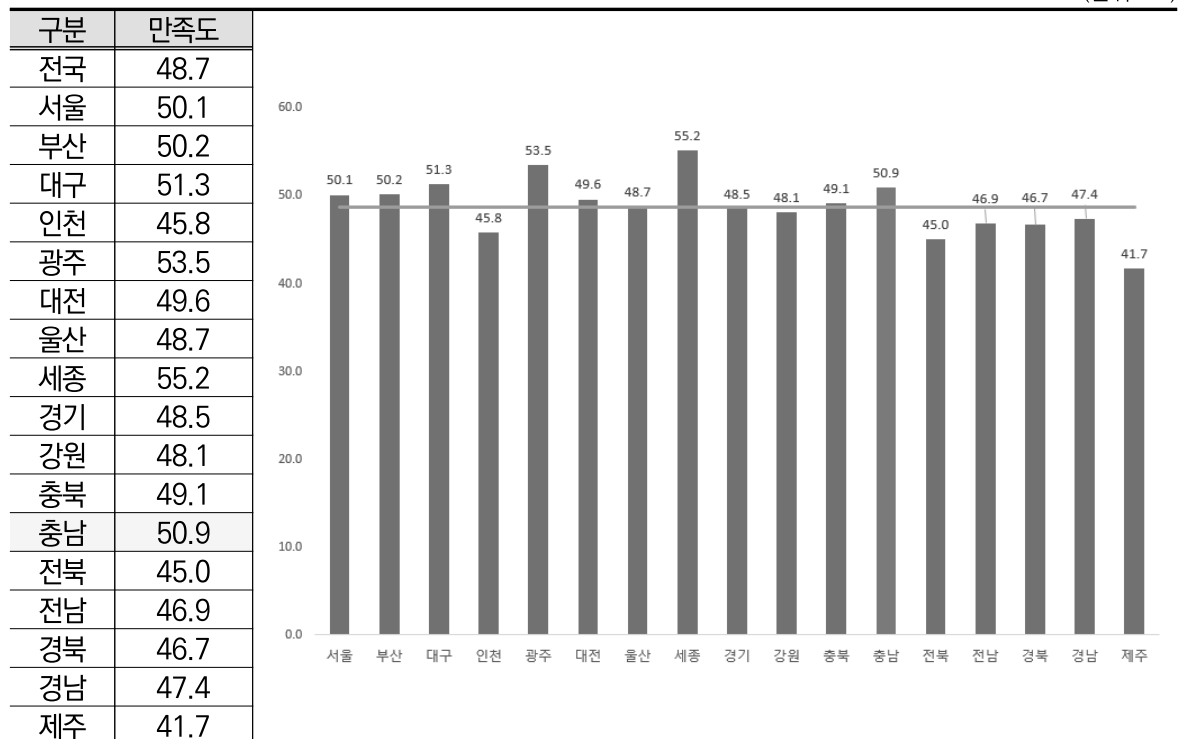
주2)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 비교에서, 충남은 세종, 광주, 대구에 이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25〉 시도별 주관적 건강상태(2018)

(단위: %)



(2) 유병률

유병률(2주간 아팠던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유병일수는 증가하는 반면 외병일수(입원하거나 반나절 이상 누워 지냈던 일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이 전반적으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6〉 2주간 유병률(2008~2018)

(단위: %, 일)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유병률	전체	17.5	20.7	24.1	24.6	25.7	27.5
		남자	14.9	17.1	21.2	22.1	22.8	24.9
		여자	20.0	24.2	26.9	27.1	28.5	30.1
	유병일수	전체	8.3	7.3	8.5	8.9	9.2	9.4
	외병일수	전체	0.7	0.6	0.6	0.7	0.8	0.5
충남	유병률	전체	20.8	23.4	30.1	28.5	26.8	30.0
		남자	19.1	21.8	25.0	25.3	22.8	27.9
		여자	22.4	25.0	35.2	31.9	30.9	32.2
	유병일수	전체	8.9	7.5	9.6	9.2	9.5	9.8
	외병일수	전체	0.6	0.4	0.3	0.4	0.5	0.3

주1) 지난 2주일 동안 아팠던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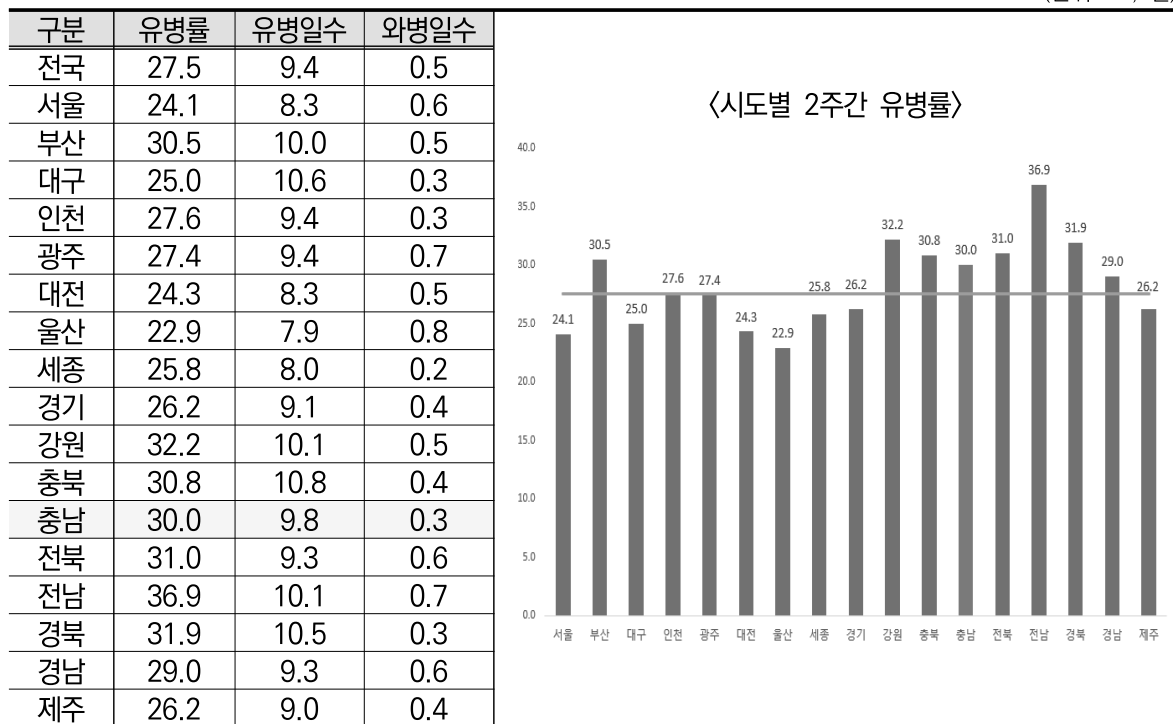
주2) 유병일수는 지난 2주일 동안 유병자가 아팠던 일수, 평균 외병일수: 지난 2주일 동안 유병자가 입원하거나 반나절 이상 누워 지냈던 일수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 유병률에서 충남은 전남, 강원, 경북 등에 이어 7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2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시도별 2주간 유병률(2018)

(단위: %, 일)



(3) 의료서비스 만족도

병의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충남이 전국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28〉 의료서비스 만족도(2008~2018)

(단위: %)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병의원	48.7	47.5	46.9	47.9	49.1	54.2
	종합병원	54.1	52.7	53.1	54.5	53.3	57.8
충남	병의원	55.1	49.8	51.0	51.2	51.4	61.0
	종합병원	58.0	54.6	58.0	59.8	59.6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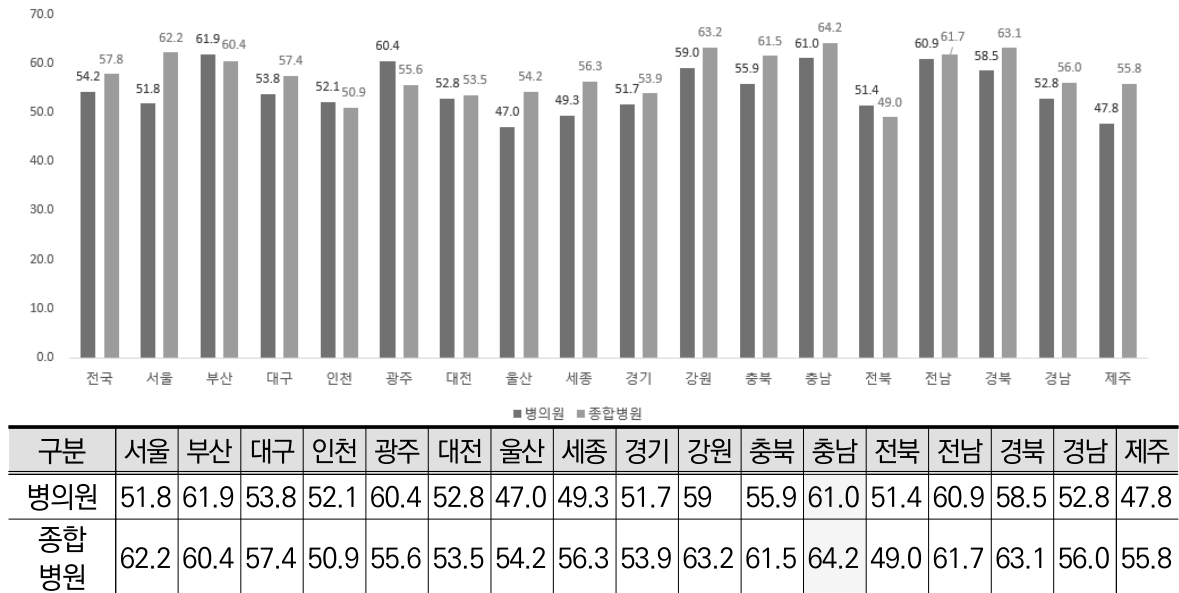
주) 병의원과 종합병원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병의원과 종합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병의원 및 종합병원 모두 충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시도별 의료서비스 만족도(2018)

(단위: %)



3) 교육 부문

(1) 교육비 부담도

충남의 교육비 부담도(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는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적은 부담도를 보이고 있다.

〈표 30〉 교육비 부담도(2008~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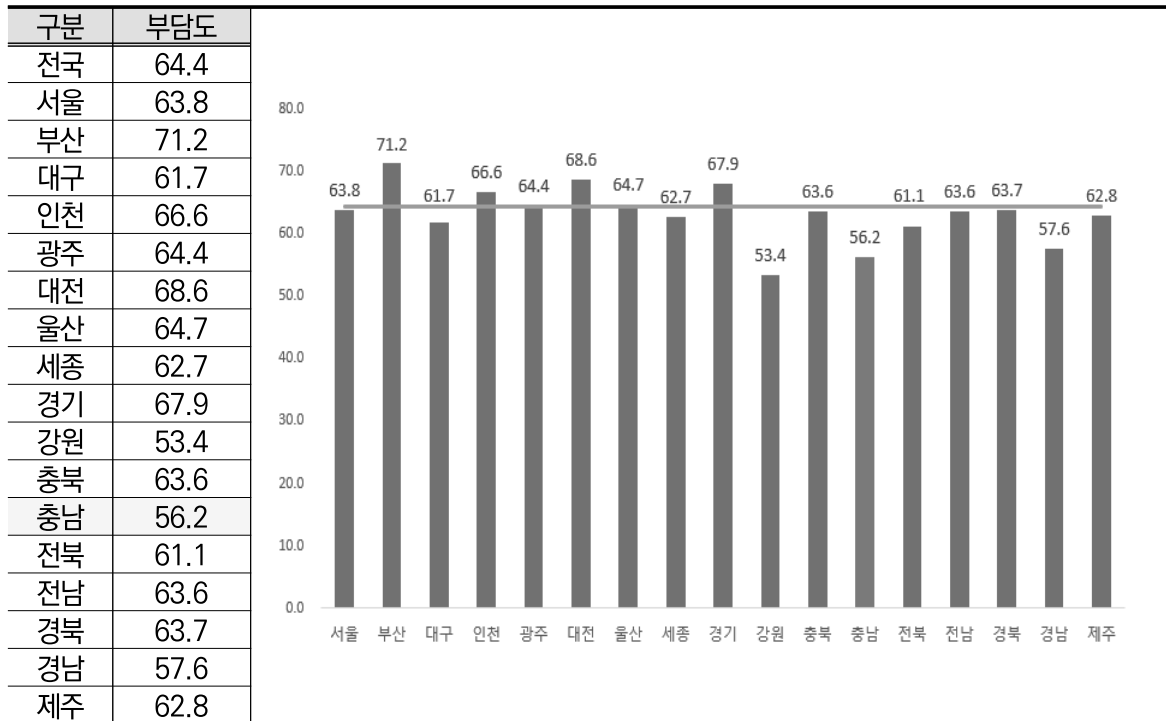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79.8	78.4	73.0	69.3	65.3	64.4
충남	73.0	74.1	66.3	63.5	60.0	56.2

주) 30세 이상 가구주 중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 교육비 부담도(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에서 충남은 강원, 제주에 이어 2번째로 가장 낮은 부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시도별 교육비 부담도(2018)

(단위: %)



(2) 학교생활 만족도

충남은 교육방법, 교사와의 관계, 학교주변 환경,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전국 보다 높은 만족을 보였으나, 교육내용, 교우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2〉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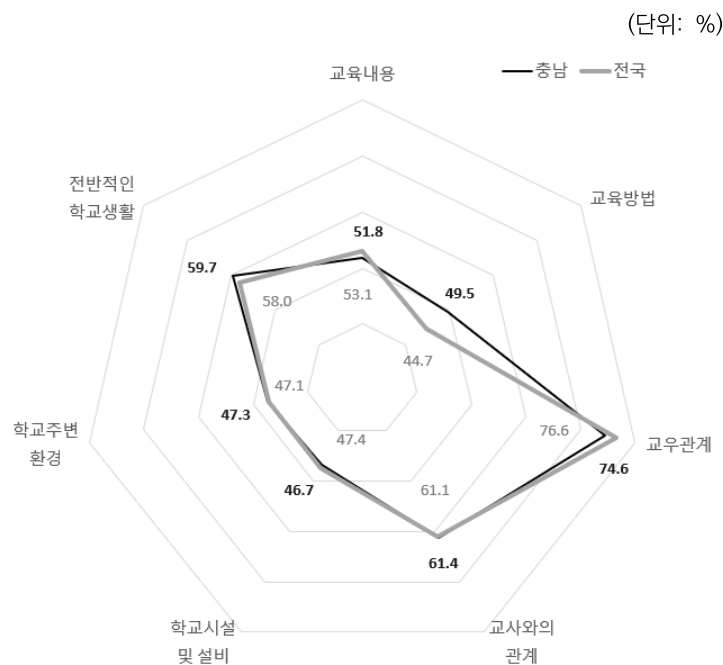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교육내용	50.8	46.3	42.8	47.7	48.6	53.1
	교육방법	42.7	38.6	36.1	44.0	42.9	44.7
	교우관계	70.0	68.4	66.5	69.4	68.8	76.6
	교사와의 관계	46.9	43.8	44.5	50.8	53.1	61.1
	학교시설 및 설비	34.7	34.1	33.5	38.7	41.0	47.4
	학교주변 환경	30.7	30.0	31.7	37.5	39.8	47.1
	전반적인 학교생활	51.1	46.5	46.7	49.8	52.2	58.0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충남	교육내용	58.0	50.7	41.5	49.8	63.3	51.8
	교육방법	50.0	45.5	31.0	45.9	53.5	49.5
	교우관계	82.9	73.6	67.5	62.7	77.6	74.6
	교사와의 관계	54.0	49.4	40.6	46.1	61.9	61.4
	학교시설 및 설비	38.6	40.6	38.7	38.3	47.3	46.7
	학교주변 환경	35.7	29.5	34.0	32.7	44.8	47.3
	전반적인 학교생활	63.2	59.0	43.2	48.0	65.2	59.7

주) 중·고등학생 중 자신의 학교생활(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주변환경, 전반적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그림 18〉 전국과 충남의 학교생활 만족도(2008~2018)

시도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항목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은 세종, 광주, 전남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충남은 12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방법은 전남, 제주, 세종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은 광주, 울산, 대구 등에서 높았으며 충남은 12번째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은 인천, 광주, 경남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교시설 및 설비의 만족은 세종, 제주, 서울 등의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충남은 10번째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은 제주, 세종, 경남 등의 순위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충남은 10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은 세종, 서울, 인천 등에 이어 7번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시도별 학교생활 만족도(2018)

(단위: %)

구분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 환경	전반적인 학교생활
전국	53.1	44.7	76.6	61.1	47.4	47.1	58.0
서울	57.9	44.1	75.8	60.3	52.5	50.9	63.9
부산	58.1	49.8	80.5	61.1	51.3	49.4	61.2
대구	51.7	44.3	80.8	52.5	39.4	40.0	52.3
인천	54.3	46.2	78.9	69.2	49.7	47.0	62.2
광주	60.0	49.3	81.6	66.7	49.3	49.3	61.0
대전	52.5	50.6	73.4	53.3	45.5	44.0	56.4
울산	50.0	43.3	80.9	55.9	46.5	46.5	59.0
세종	62.4	51.9	76.1	63.2	71.0	56.0	68.3
경기	49.9	42.7	76.0	62.2	44.2	43.8	54.7
강원	54.4	37.5	80.6	59.7	37.6	35.1	52.7
충북	53.2	46.2	72.8	65.2	47.8	49.9	60.7
충남	51.8	49.5	74.6	61.4	46.7	47.3	59.7
전북	42.4	38.4	70.2	55.6	41.2	43.9	49.8
전남	58.4	53.5	72.1	58.5	51.3	49.1	58.0
경북	52.7	42.9	80.2	58.0	52.1	49.0	59.4
경남	49.1	41.6	76.3	66.1	46.4	54.5	56.6
제주	55.4	53.0	70.7	60.8	53.9	56.3	56.1

4) 노동 부문

(1) 일자리 만족도

충남의 일자리 만족도(임금, 근무환경, 근로시간, 전반적인 만족도)는 근로시간과 전반적인 만족도, 근무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임금에 있어서는 낮았다. 전국과 비교하면 근무 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보다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일자리 만족도(2009~2019)

(단위: %)

구 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국	임금	15.8	14.0	16.3	16.4	18.7	23.1
	근무환경	27.3	25.3	27.3	27.4	30.5	34.1
	근로시간	23.4	23.4	25.3	24.3	28.0	34.6
	전반적인 만족도	26.6	24.6	26.3	25.2	27.7	32.3
충남	임금	19.5	16.4	17.9	22.0	17.3	25.8
	근무환경	30.5	25.5	32.2	29.1	27.3	32.1
	근로시간	25.9	24.0	31.6	27.7	25.7	35.5
	전반적인 만족도	31.1	29.0	29.9	27.1	23.7	33.6

주) 직장의 근로여건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다니는 직장의 임금, 근무환경, 근로시간, 전반적 근로여건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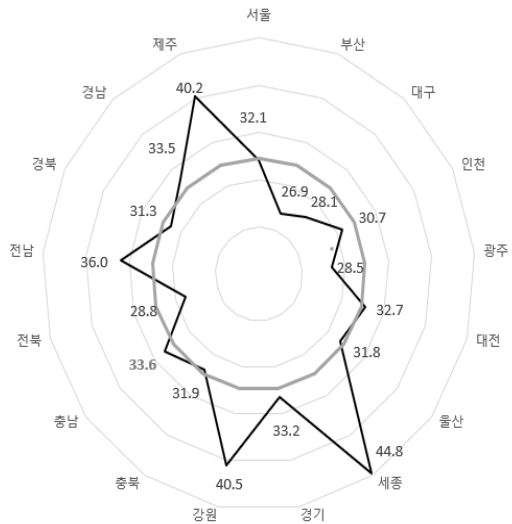
시도별로 일자리 만족도는 세종, 강원, 제주에서 항목별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충남의 경우에는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5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35〉 시도별 일자리 만족도(2019)

(단위: %)

구분	임금	근무 환경	근로 시간	전반적인 만족도
전국	23.1	34.1	34.6	32.3
서울	22.6	36.4	34.7	32.1
부산	22.9	32.2	31.7	26.9
대구	22.1	29.4	29.5	28.1
인천	21.8	32.0	32.2	30.7
광주	24.0	33.2	33.9	28.5
대전	21.5	35.1	35.2	32.7
울산	22.2	31.3	34.3	31.8
세종	31.4	46.2	41.9	44.8
경기	22.9	34.2	34.3	33.2
강원	28.7	41.4	45.3	40.5
충북	23.1	32.8	34.7	31.9
충남	25.8	32.1	35.5	33.6
전북	21.7	29.8	33.6	28.8
전남	26.5	35.2	38.2	36.0
경북	22.3	31.7	34.9	31.3
경남	22.4	35.0	34.5	33.5
제주	32.1	37.3	41.6	40.2

〈시도별 일자리 만족도 중 전반적인 만족도〉



5) 소득·소비·자산 부문

(1) 소득만족도

충남은 전국 보다 소득이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2009년 소득만족도가 높았다가 감소하였으며, 2017년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소득 만족도(2009~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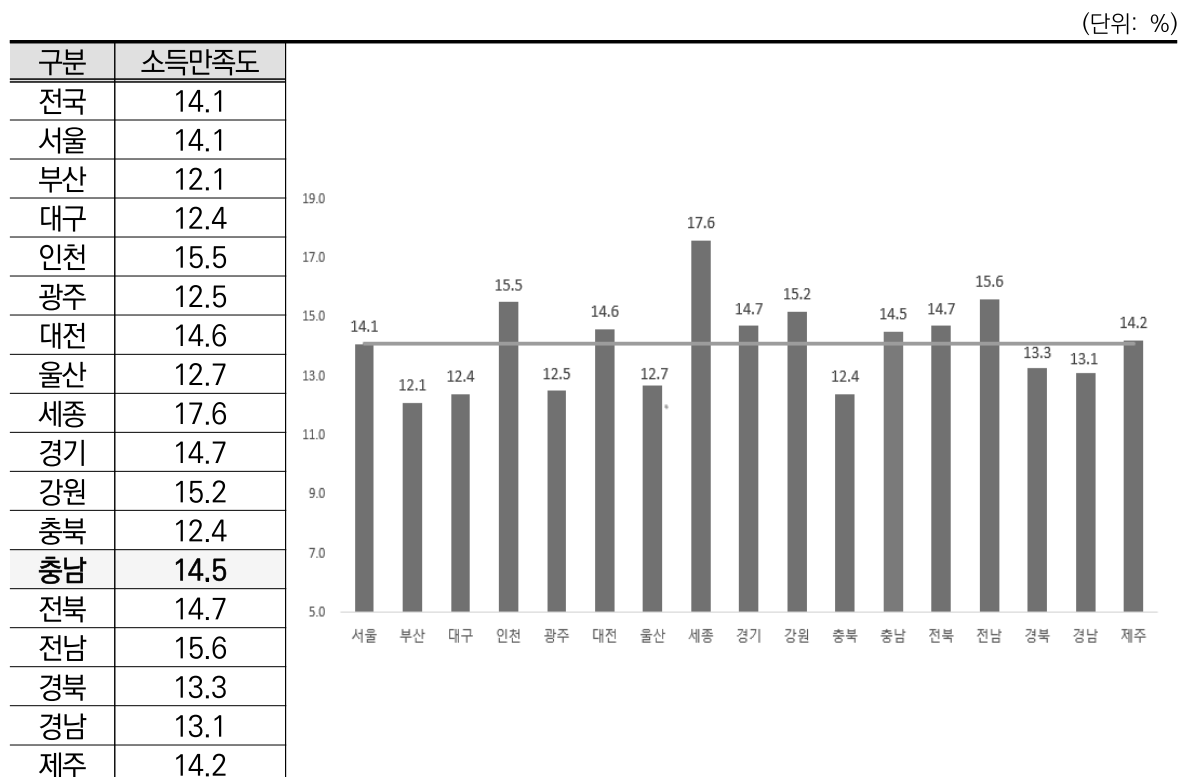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국	14.0	11.8	12.0	11.4	13.3	14.1
충남	16.5	14.3	12.7	12.9	11.6	14.5

주)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 소득만족도는 세종, 전남, 인천 등에 이어 8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 시도별 소득 만족도(2019)



(2) 소비생활 만족도

전국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충남은 소비생활 만족도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보다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8〉 소비생활 만족도(2009~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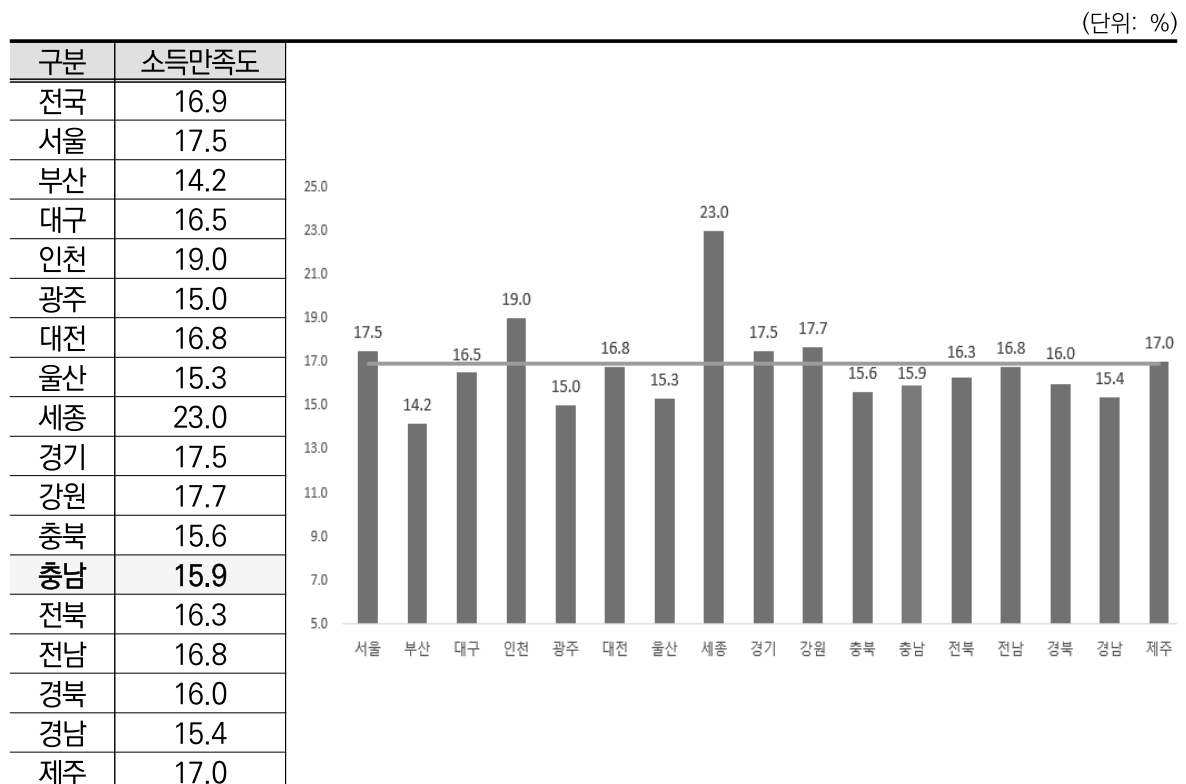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국	13.7	12.7	13.6	13.9	15.4	16.9
충남	15.7	13.2	12.8	14.1	12.1	15.9

주)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본인의 소비생활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 소비생활 만족도는 세종, 인천, 강원 등에 이어 1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시도별 소비생활 만족도(2019)



6) 여가 부문

(1) 여가생활 만족도

충남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국 대비 약간 하회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여가생활 만족도(2009~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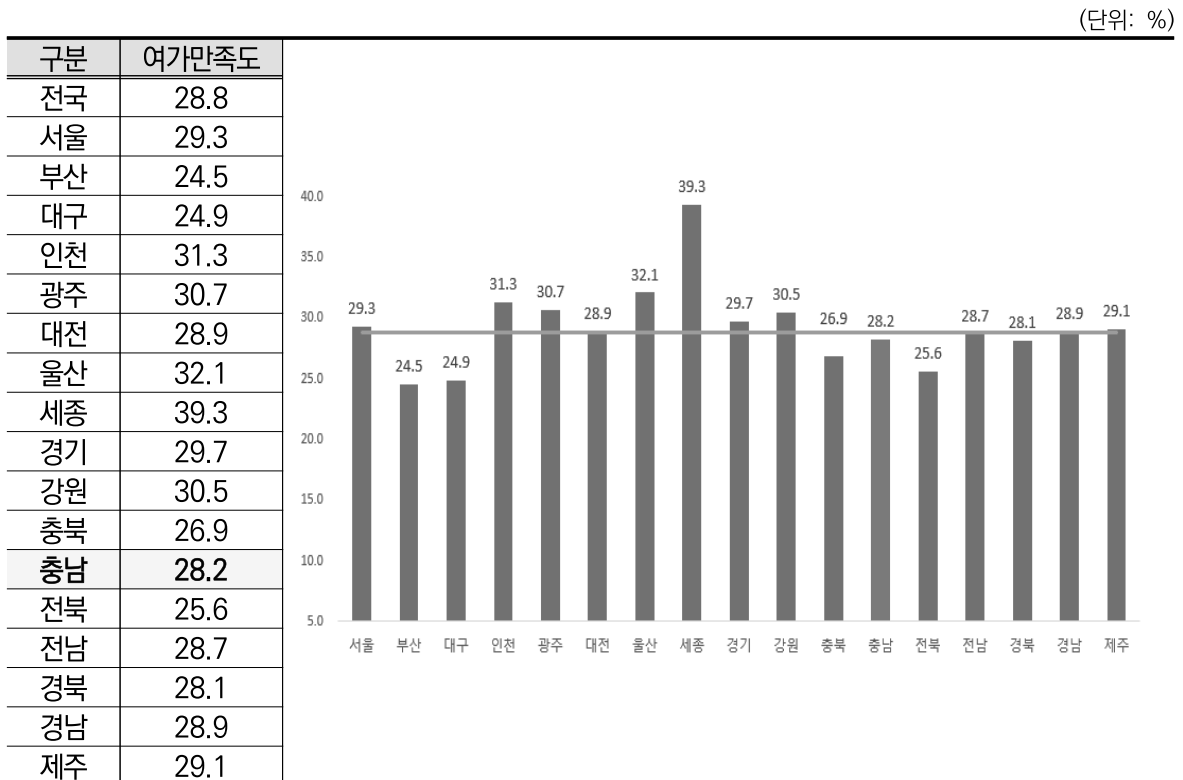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국	21.8	19.3	27.0	26.0	27.2	28.8
충남	23.8	19.2	25.7	26.8	24.2	28.2

주)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 여가생활 만족도는 세종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은 1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 시도별 여가생활 만족도(2019)



(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충남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전체 관람률이 낮게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영화 > 박물관 관람 > 음악·연주회 > 스포츠 관람 > 연극·마당극·뮤지컬 > 미술관 관람 > 무용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2011~2019)

(단위: %)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전 국	전체		58.6	63.4	66.8	66.5	66.2
	장 르 별	음악·연주회	25.2	21.7	20.6	20.8	24.9
		연극·마당극·뮤지컬	25.0	24.2	22.4	22.6	20.7
		무용	2.6	2.4	1.8	1.9	1.6
		영화	81.8	85.9	88.1	88.4	88.2
		박물관 관람	26.4	25.8	26.6	25.1	23.7
		미술관 관람	20.7	19.4	19.1	20.3	19.6
		스포츠 관람	24.3	22.0	21.1	25.2	23.5
충 남	전체		45.8	53.1	58.3	59.0	61.4
	장 르 별	음악·연주회	28.3	21.3	18.6	19.1	22.4
		연극·마당극·뮤지컬	22.8	21.8	18.5	14.8	17.4
		무용	3.0	2.3	2.2	1.3	2.0
		영화	79.0	84.5	85.6	89.3	88.2
		박물관 관람	30.7	27.9	28.2	22.0	24.6
		미술관 관람	17.0	15.9	15.5	14.2	16.7
		스포츠 관람	20.4	18.9	18.1	17.2	21.7

주1)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주2) 전체 관람률은 지난 1년 동안 공연, 전시,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는 세종에서 전체 관람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서울 등의 순으로 높았다. 충남은 관람률이 14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표 43〉 시도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2019)

(단위: %)

구분	전체	장르별						
		음악 ·연주회	연극·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관람	미술관 관람	스포츠 관람
전국	66.2	24.9	20.7	1.6	88.2	23.7	19.6	23.5
서울	70.7	29.5	26.9	1.7	88.2	25.0	26.4	24.2
부산	64.0	21.1	15.5	1.7	91.3	17.6	17.1	27.1
대구	61.9	20.4	16.7	1.1	88.5	19.5	16.2	22.2
인천	67.1	21.5	19.8	1.5	86.7	22.0	15.0	27.1
광주	73.0	26.1	15.9	1.9	89.4	25.2	19.2	27.5
대전	69.5	28.0	16.1	1.6	86.2	24.8	18.7	28.6
울산	62.9	24.6	16.0	1.4	89.1	20.9	14.1	23.4
세종	75.5	30.2	27.0	2.5	87.1	33.7	22.6	27.4
경기	69.7	23.5	22.6	1.6	89.0	25.2	20.7	21.3
강원	57.9	26.8	18.0	2.1	87.8	23.1	16.7	18.8
충북	63.7	24.6	15.4	1.9	87.0	22.9	17.2	19.0
충남	61.4	22.4	17.4	2.0	88.2	24.6	16.7	21.7
전북	62.3	27.1	16.6	1.5	88.7	23.4	16.3	21.4
전남	56.5	19.8	13.6	1.7	89.3	20.8	13.7	22.7
경북	56.5	23.6	20.0	0.9	84.9	24.7	15.2	26.4
경남	63.0	26.0	19.3	0.9	84.7	24.0	16.6	25.3
제주	64.1	27.4	17.6	1.6	90.3	20.6	20.9	21.1

7) 환경 부문

(1) 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충남이 모든 항목에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2018년 소음 및 토양환경 만족도만 전년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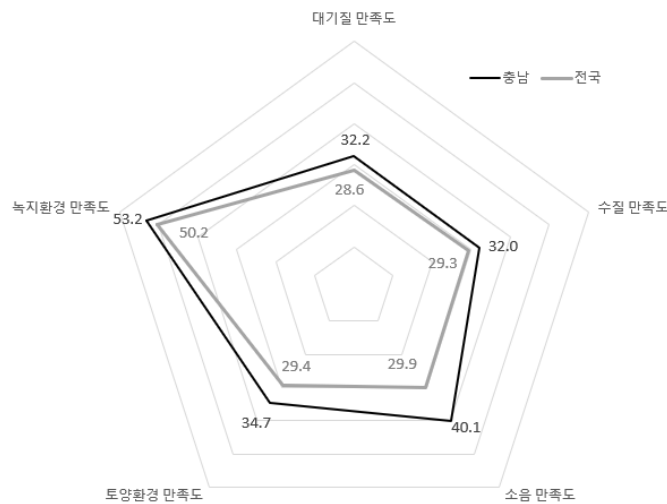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대기질 만족도	36.0	40.1	36	31.7	28.6
	수질 만족도	33.9	36.9	34.9	33.2	29.3
	소음 만족도	27.3	29.0	26.9	27.5	29.9
	토양환경 만족도	30.4	33.5	30.5	29.4	29.4
	녹지환경 만족도	42.0	43.8	41.2	41.3	50.2
충남	대기질 만족도	59.0	54.0	51.7	36.4	32.2
	수질 만족도	52.6	47.7	44.5	34.9	32.0
	소음 만족도	44.7	44.7	41.1	32.6	40.1
	토양환경 만족도	48.2	45.1	41.5	31.8	34.7
	녹지환경 만족도	58.4	49.6	42.8	38.3	53.2

주)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질, 수질, 소음, 토양환경,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 하천, 소음·진동, 토양오염, 녹지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단위: %)



〈그림 19〉 전국과 충남의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2018)

시도별로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소음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강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전반적인 환경 만족은 강원, 전남, 제주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시도별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2018)

(단위: %)

구분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소음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전반적인 환경만족도
전국	28.6	29.3	29.9	29.4	50.2	35.8
서울	20.7	24.0	25.4	24.8	45.8	30.9
부산	32.1	31.8	29.0	31.9	49.6	36.5
대구	21.3	21.1	17.5	20.5	37.0	23.5
인천	17.8	16.7	25.2	19.6	40.3	25.2
광주	26.0	19.7	21.4	23.0	47.2	26.8
대전	24.0	24.8	25.5	25.9	44.4	31.4
울산	23.8	29.2	24.6	26.8	44.8	31.6
세종	30.6	37.4	39.3	41.1	59.0	46.2
경기	24.3	26.9	27.4	27.2	50.6	34.6
강원	55.1	52.1	45.3	50.8	67.1	57.2
충북	32.8	33.6	34.3	33.7	49.6	38.7
충남	32.2	32.0	40.1	34.7	53.2	40.5
전북	32.8	32.1	31.9	31.6	45.1	36.0
전남	49.9	47	47.5	43.1	68.6	52.6
경북	40.0	37.8	37.6	35.9	59.1	43.5
경남	41.1	39.4	39.6	38.0	60.7	46.8
제주	50.9	42.2	38.7	39	56.1	48.5

(2) 기후변화 불안도

환경문제에 있어 기후변화에 불안하다는 비율은 충남이 전국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불안하다는 비율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46〉 기후변화 불안도(2008~2018)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65.6	66.4	62.5	62.9	62.8	49.3
충남	66.9	64.7	65.6	66.4	64.0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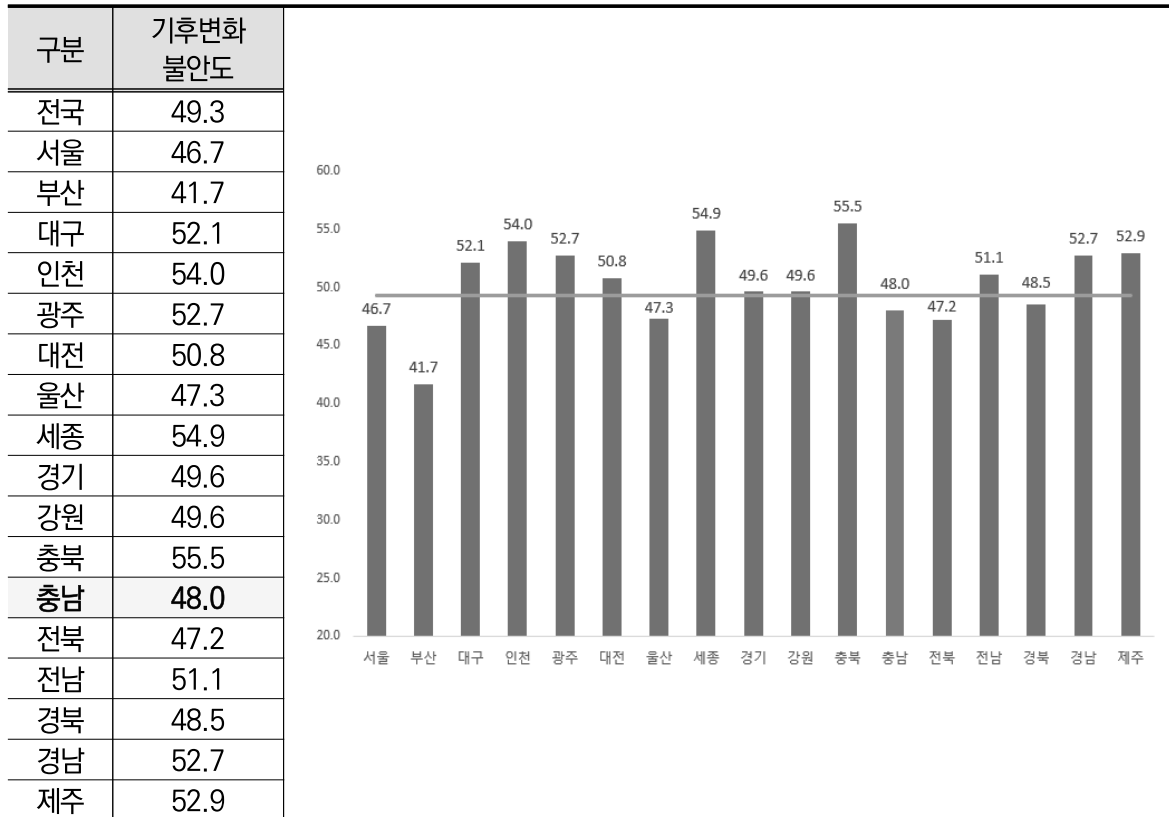
주) 기후변화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약간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는 부산 등에 이어 5번째로 기후변화에 따른 불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시도별 기후변화 불안도(2018)

(단위: %)



8) 범죄·안전 부문

(1) 야간보행 안전도

야간보행을 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 비율은 전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야간보행 안전도(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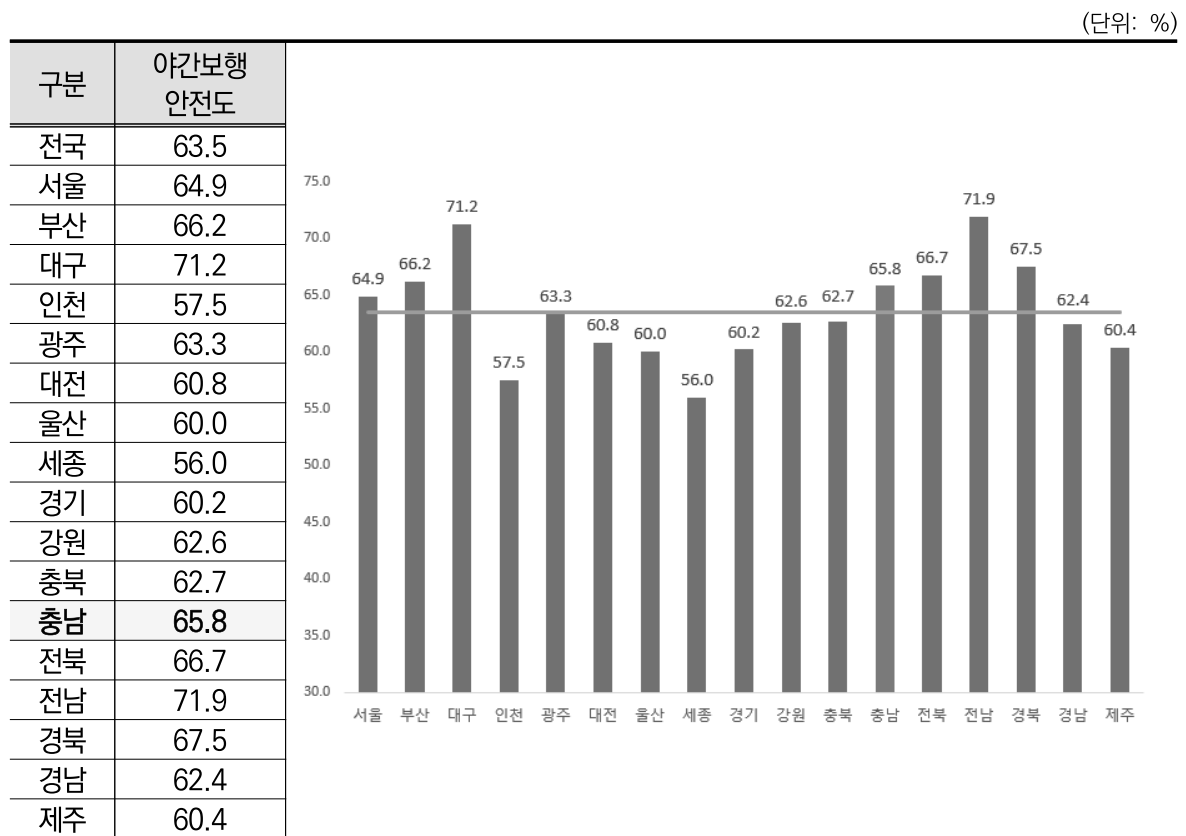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59.2	59.4	56.0	57.4	59.1	63.5
충남	61.5	65.7	61.9	57.4	59.4	65.8

주) 13세 이상 인구 중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인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는 전남, 대구, 경북 등에 이어 6번째로 야간보행을 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시도별 야간보행 안전도(2018)



(2)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08~2018)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8.2	11.3	13.8	9.5	13.2	20.5
충남	7.0	9.5	12.5	8.1	13.0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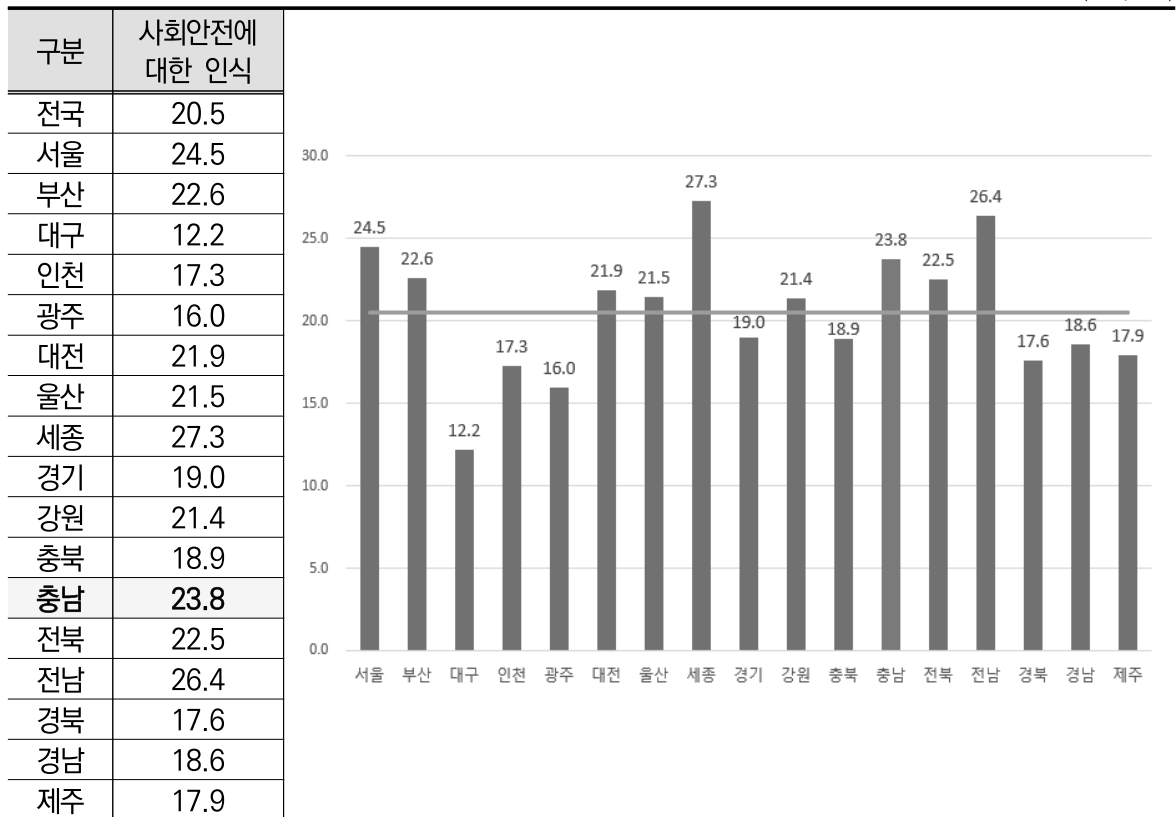
주) 13세 이상 인구 중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와 '매우 안전하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시도별로는 세종, 전남, 서울에 이어 4번째로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시도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18)

(단위: %)



9) 주관적 웰빙 부문

(1) 삶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감은 2018년 이후 전국 보다 낮았으며, 2015년, 2017년 주관적 만족감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주관적 만족감(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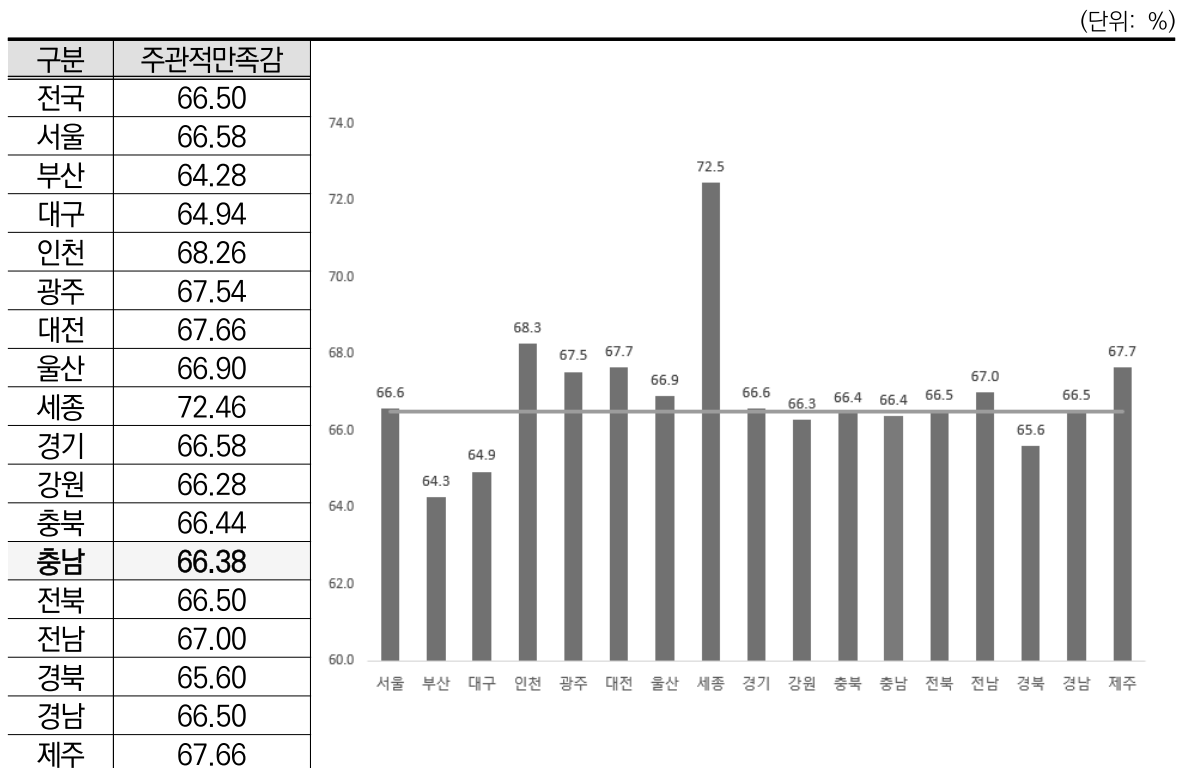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58.84	62.98	63.90	67.44	64.18	67.66	61.72	66.64	66.50
충남	59.36	62.28	63.74	68.62	64.44	68.50	62.08	66.08	66.38

주) 13세 이상의 주관적 만족감을 묻는 질문으로 5점 척도를 점수화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지역별로는 세종이 가장 높은 주관적 만족감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 제주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남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66.4점으로 13번째로 나타났다.

〈표 53〉 시도별 주관적 만족감(2019)



3. 충남의 삶의 질과 격차

1) 지역별 삶의 질 변화와 격차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측정된 충남도민의 삶의 질은 과거 2013년에 비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10점 만점에 5.610점이었으나 2017년은 6점을 넘었으며,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에는 6.047로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표준편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충남도민의 삶의 질 변화(연도별)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평균	5.610	5.696	6.026	6.047
표준편차	1.876	2.221	1.994	2.020

주) 2015년의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1~5점의 5점 척도에 의해 조사된 반면에 나머지 연도에서는 0~10점의 11점 척도로 조사됨. 2015년 5점 척도를 11점 척도로 변환하였음

〈표 55〉 충남도민의 삶의 질 변화(동·읍·면)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동지역	평균	5.613	-	6.124	6.171
	표준편차	1.906	-	1.981	1.909
읍지역	평균	5.596	-	5.837	5.932
	표준편차	1.927	-	2.030	2.113
면지역	평균	5.618	-	6.055	6.092
	표준편차	1.784	-	1.970	1.980

주) 2015년 “-”는 응답자의 거주지가 읍면동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읍면동별 수치를 산출하지 못함(이하 동일)

삶에 만족을 거주지의 읍면동 간 구분하는 경우, 읍면동 모두 분석기간 내 상승하였으나 2013년과 2019년 두 시점 간 변화를 기준으로 동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는 반면에 읍지역에서 가장 작은 폭의 상승을 나타낸다. 표준편차의 변화 역시 동지역

에서는 2013년 1.906에서 2019년 1.909로 아주 작은 폭의 상승이 나타나지만, 면지역은 동 기간 1.784에서 1.980으로, 읍지역은 1.927에서 2.113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 해당 지역 내 응답자들 간 삶의 만족도에서의 격차가 동지역에 비해 읍지역이나 면지역에서 최근에 보다 커졌음을 볼 수 있다.

〈표 56〉 충남 시군별 삶의 만족도 변화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천안시	평균	5.546	5.712	6.053	6.133
	표준편차	1.938	2.279	2.018	1.908
공주시	평균	5.621	5.549	5.761	5.822
	표준편차	1.977	2.041	1.856	1.961
보령시	평균	5.293	5.566	6.433	6.022
	표준편차	1.716	2.332	1.949	1.660
아산시	평균	5.805	5.921	5.959	6.114
	표준편차	1.582	2.125	1.855	1.852
서산시	평균	5.815	5.531	6.353	5.960
	표준편차	1.706	1.940	1.757	1.953
논산시	평균	5.550	5.687	5.811	5.782
	표준편차	1.798	2.272	2.026	2.012
계룡시	평균	5.901	6.244	6.370	6.269
	표준편차	1.939	2.274	1.953	1.924
당진시	평균	5.671	5.626	5.891	5.905
	표준편차	2.091	2.337	1.998	1.943
금산군	평균	5.229	5.786	5.718	6.044
	표준편차	1.548	2.125	2.131	2.121
부여군	평균	5.903	5.650	5.800	6.000
	표준편차	1.978	2.228	2.082	1.923
서천군	평균	5.478	5.628	6.215	6.433
	표준편차	1.820	2.303	2.145	2.090
청양군	평균	5.735	5.729	5.830	5.655
	표준편차	1.703	1.899	1.654	2.010
홍성군	평균	5.631	5.631	6.081	6.493
	표준편차	2.076	2.289	2.066	2.066
예산군	평균	5.560	5.612	6.166	5.925
	표준편차	2.051	2.301	2.290	1.968
태안군	평균	5.260	5.576	5.769	5.946
	표준편차	1.969	2.272	2.174	2.175

주) 2015년의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1~5점의 5점 척도에 의해 조사된 반면에 나머지 연도에서는 0~1점의 11점 척도로 조사됨. 2015년 5점 척도를 11점 척도로 변환하였음

삶의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를 기준으로 충남의 시군들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중간에 증가 혹은 감소하나 2019년이 2013년에 비해 높은 지역, 그리고 중간에 증가 혹은 감소하나 2019년이 2013년에 비해 낮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을 포함하고, 중간에 증가 혹은 감소하나 2019년이 2013년에 비해 높은 지역은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을 포함하며, 중간에 증가 혹은 감소하나 2019년이 2013년에 비해 낮은 지역은 청양군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의 도시화 정도나 규모 등에 의해 삶의 만족이 영향을 받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더불어, 천안시와 아산시를 예시적으로 비교하면, 두 지역 모두 분석기간 동안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천안시는 2013년 대비 2019년에 표준편차가 다소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으나 아산시의 경우 증가하여 두 지역에서 해당 지역 내 주민들 간 삶의 만족도 격차가 상이한 변화를 나타내 이 또한 그 원인 및 정책적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문별 삶의 질 변화와 격차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충남 사회지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측정 지표의 한계) 중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항목 역시 설문 방식과 척도 등의 작은 차이로 분석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2017년과 비교한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은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표는 문화/여가가 유일하고, 중간에 증가 혹은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교육, 의료, 주거환경, 수질, 토양, 소음, 녹지, 범죄에 해당하고,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대기와 안전 관련 대부분의 지표들(자연재해, 건축물, 교통사고, 화재, 사회전반)을 포함한다.

〈표 57〉 충남 삶의 질 관련 지표의 변화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교육	평균	2.936	2.981	2.938	3.137
	표준편차	0.649	0.752	0.948	0.874
의료	평균	3.327	3.406	3.384	3.458
	표준편차	0.748	0.901	0.828	0.910
주거환경	평균	5.694	-	5.437	5.716
	표준편차	2.074	-	1.783	1.809
환경: 대기	평균	3.377	-	2.794	3.026
	표준편차	0.879	-	1.146	1.196
환경: 수질	평균	3.324	-	3.121	3.401
	표준편차	0.821	-	0.951	0.948
환경: 토양	평균	3.354	-	3.142	3.435
	표준편차	0.808	-	0.932	0.902
환경: 소음	평균	3.239	-	3.071	3.400
	표준편차	0.985	-	1.083	1.086
환경: 녹지	평균	3.505	-	3.248	3.516
	표준편차	0.908	-	0.995	0.979
문화/여가 만족도	평균	4.129	4.450	6.029	6.886
	표준편차	2.124	2.211	2.418	1.888
안전: 자연재해	평균	3.557	3.622	3.028	3.320
	표준편차	0.820	0.890	0.932	0.919
안전: 건축물	평균	3.442	3.435	3.075	3.400
	표준편차	0.763	0.848	0.870	0.848
안전: 교통사고	평균	3.108	2.921	2.744	2.984
	표준편차	0.762	0.910	0.864	0.923
안전: 화재	평균	3.403	3.273	2.938	3.055
	표준편차	0.772	0.867	0.879	0.923
안전: 범죄	평균	3.162	3.006	2.820	3.414
	표준편차	0.811	0.940	0.909	0.816
안전: 사회전반	평균	3.294	3.253	2.934	3.219
	표준편차	0.744	0.836	0.777	0.753

주) 주거환경 만족도와 문화/여가 만족도는 0~10점의 11점 척도로 변환되었고, 나머지 변수들은 1~5점의 5점 척도로 변환되었음

3) 지역별·부문별 삶의 질 변화와 격차

동지역에서는 교육, 의료, 주거환경, 소음, 문화/여가, 범죄에서만 2013년 대비 2019년에 증가한 만족도를 나타낼 뿐 이외의 지표들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기와 자연재해에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표 58〉 충남 삶의 질 관련 지표의 변화(동지역)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교육	평균	3.023	-	2.865	3.056
	표준편차	0.626	-	0.926	0.869
의료	평균	3.312	-	3.321	3.365
	표준편차	0.727	-	0.827	0.861
주거환경	평균	5.769	-	5.759	5.951
	표준편차	2.082	-	1.732	1.718
환경: 대기	평균	3.269	-	2.497	2.607
	표준편차	0.840	-	1.011	1.074
환경: 수질	평균	3.286	-	2.949	3.134
	표준편차	0.796	-	0.835	0.859
환경: 토양	평균	3.291	-	2.968	3.160
	표준편차	0.781	-	0.829	0.823
환경: 소음	평균	3.022	-	2.784	3.065
	표준편차	0.943	-	0.972	0.989
환경: 녹지	평균	3.332	-	3.041	3.283
	표준편차	0.891	-	0.921	0.882
문화/여가 만족도	평균	4.700	-	6.034	6.754
	표준편차	2.025	-	2.258	1.826
안전: 자연재해	평균	3.606	-	2.994	3.347
	표준편차	0.812	-	0.938	0.855
안전: 건축물	평균	3.418	-	3.010	3.364
	표준편차	0.752	-	0.871	0.808
안전: 교통사고	평균	3.057	-	2.652	2.897
	표준편차	0.733	-	0.851	0.860
안전: 화재	평균	3.398	-	2.928	3.107
	표준편차	0.783	-	0.879	0.834
안전: 범죄	평균	3.023	-	2.640	3.300
	표준편차	0.790	-	0.872	0.798
안전: 사회전반	평균	3.215	-	2.845	3.129
	표준편차	0.720	-	0.766	0.718

읍지역에서는 교육, 의료, 주거환경, 수질, 토양, 소음, 문화/여가, 범죄에서 2013년 대비 2019년에 증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대기, 화재, 자연재해, 녹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다.

〈표 59〉 충남 삶의 질 관련 지표의 변화(읍지역)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교육 만족도	평균	2.858	-	3.038	3.182
	표준편차	0.653	-	0.942	0.914
의료 만족도	평균	3.255	-	3.356	3.416
	표준편차	0.764	-	0.836	0.929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	5.457	-	5.154	5.773
	표준편차	2.023	-	1.885	1.833
환경: 대기	평균	3.312	-	2.853	2.878
	표준편차	0.856	-	1.140	1.139
환경: 수질	평균	3.268	-	3.083	3.329
	표준편차	0.786	-	0.950	0.899
환경: 토양	평균	3.281	-	3.067	3.352
	표준편차	0.794	-	0.933	0.879
환경: 소음	평균	3.234	-	3.112	3.256
	표준편차	0.937	-	1.042	1.044
환경: 녹지	평균	3.449	-	3.126	3.343
	표준편차	0.873	-	1.010	0.974
문화/여가 만족도	평균	3.966	-	6.041	7.061
	표준편차	2.048	-	2.584	1.877
안전: 자연재해	평균	3.504	-	3.018	3.279
	표준편차	0.784	-	0.910	0.904
안전: 건축물	평균	3.415	-	3.034	3.307
	표준편차	0.747	-	0.852	0.833
안전: 교통사고	평균	3.090	-	2.744	2.912
	표준편차	0.773	-	0.848	0.903
안전: 화재	평균	3.393	-	2.907	3.036
	표준편차	0.745	-	0.852	0.887
안전: 범죄	평균	3.164	-	2.781	3.330
	표준편차	0.797	-	0.893	0.783
안전: 사회전반	평균	3.277	-	2.904	3.153
	표준편차	0.752	-	0.768	0.759

면지역에서는 교육, 의료, 수질, 토양, 소음, 범죄에서 2013년 대비 2019년에 증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동지역이나 읍지역과 달리, 면지역의 경우 주거환경 만족도 2013년에 비해 2017년과 2019년 모두 낮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만족도가 감소한 지표 가운데 화재의 경우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을 볼 수 있다.

〈표 60〉 충남 삶의 질 관련 지표의 변화(면지역)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교육 만족도	평균	2.891	-	2.978	3.138
	표준편차	0.662	-	0.986	0.837
의료 만족도	평균	3.413	-	3.488	3.511
	표준편차	0.752	-	0.814	0.905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	5.813	-	5.250	5.613
	표준편차	2.094	-	1.692	1.809
환경: 대기	평균	3.584	-	3.136	3.244
	표준편차	0.915	-	1.214	1.221
환경: 수질	평균	3.426	-	3.379	3.525
	표준편차	0.876	-	1.036	0.983
환경: 토양	평균	3.508	-	3.434	3.569
	표준편차	0.837	-	0.987	0.914
환경: 소음	평균	3.536	-	3.417	3.593
	표준편차	1.008	-	1.147	1.102
환경: 녹지	평균	3.791	-	3.621	3.700
	표준편차	0.895	-	0.971	0.972
문화/여가 만족도	평균	3.507	-	6.012	6.777
	표준편차	2.124	-	2.478	1.911
안전: 자연재해	평균	3.540	-	3.081	3.342
	표준편차	0.858	-	0.940	0.946
안전: 건축물	평균	3.500	-	3.194	3.475
	표준편차	0.790	-	0.872	0.861
안전: 교통사고	평균	3.195	-	2.865	3.057
	표준편차	0.783	-	0.880	0.947
안전: 화재	평균	3.419	-	2.978	3.054
	표준편차	0.782	-	0.900	0.968
안전: 범죄	평균	3.348	-	3.089	3.505
	표준편차	0.813	-	0.904	0.834
안전: 사회전반	평균	3.418	-	3.075	3.288
	표준편차	0.753	-	0.779	0.752

4. 충남의 삶의 질 결정요인

2019년 충남사회지표 조사를 통해서 본 충남도민의 삶의 질의 지역별 격차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점 만점에 **충남도민 전체는 6.046점**이며, 오히려 일의 가치와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을 나타냈다.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성격이 강한 동지역인가? 농촌지역이 강한 면지역인가?에 따라서는 **동지역이 농촌지역성격이 강한 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도시와 농촌 성격이 공존하는 읍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표 61〉 삶의 질 등의 지역별 격차(2019년)

구분		충남전체	거주지역별		
			읍지역	면지역	동지역
삶의 질	평균	6.046	5.931	6.091	6.171
	표준편차	2.020	2.112	1.980	1.908

2013년부터 현재(2019년)까지의 충남사회지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년 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민선 7기 충남도정과의 관계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을 한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선행연구와 2019년 충남사회지표 조사항목 등을 통해 추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 연구설계 및 기초분석 단계에서는 편의 상 개인/가족 영역, 주거환경영역, 사회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정리하였다. 참고로 기술적 통계 값은 다음과 같다.

〈표 62〉 삶의 질 주요 항목별 만족도 관련 변수 기술통계(2019): 충남 전체

영역구분	설문항목	설문지 번호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개인/가족 영역	신체건강	2-1	5.669	2.443	0	10
	정신건강	2-2	6.497	2.208	0	10
	스트레스	3-4	4.385	2.022	0	10

영역구분	설문항목	설문지 번호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개인/가족 영역	소득	19	2.821	0.997	1	5
	소비	20	2.835	0.895	1	5
	부채1)	53	0.315	0.465	0	1
	가족관계	7-7	4.061	0.820	1	5
	근로여건	14-8	3.249	0.789	1	5
주거환경 영역	의료시설	6-2-1	3.458	0.910	1	5
	의료서비스	6-2-2	3.568	0.883	1	5
	여가문화	29-7	6.472	2.017	0	10
	주택	22-1	6.378	2.087	0	10
	주거환경	22-8	5.716	1.809	0	10
	대중교통	23-6	3.480	0.906	1	5
	환경	27-6	3.452	0.877	1	5
	사회안전	28-11	3.219	0.753	1	5
	공교육	47-1	3.137	0.874	1	5
	사교육	47-2	2.919	0.827	1	5
사회영역	영아돌봄 어려움	36-1	3.229	1.052	1	5
	성인돌봄 어려움	36-2	3.603	1.116	1	5
	신뢰2)	34	3.462	1.085	1	5
삶의질	삶의질	1-1	6.047	2.020	0	10
	일의 가치	1-2	6.186	1.995	0	10
	행복	1-3	6.150	2.004	0	10

주1) 부채 있음 1, 부채 없음 0

주2) 신뢰할 수 없음 1, 경우에 따라 다름 3, 신뢰할 수 있음 5

도민의 삶의 질은 다양한 요인 중 가족관계와 소득, 신체적 건강 등 개인/가족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영역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주거영향과 여가문화,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신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변수 삶의 질(변수 삶의 질 1-1)

영역구분	설문항목	충남도 전체(y1)	거주지역별		
			동지역(y4)	읍지역(y5)	면지역(y6)
개인/가족 영역	신체건강	0.2292** (16.37)	0.2265** (9.32)	0.2399** (15.84)	0.2119** (8.21)
	소득	0.3627** (15.10)	0.4179** (11.43)	0.3233** (9.34)	0.3340** (7.84)
	가족관계	0.4227** (13.67)	0.4694** (11.59)	0.4007** (7.81)	0.4282** (9.14)
주거환경 영역	의료서비스	0.0532* (2.65)	0.1262* (2.78)	-0.0017 (-0.05)	0.0605* (2.71)
	여가문화	0.0710** (3.84)	0.0362* (2.35)	0.0744** (3.07)	0.1205** (4.60)
	주거환경	0.1123** (8.25)	0.0664* (2.99)	0.1426** (6.53)	0.1066** (3.69)
	대중교통	0.0417 (1.58)	0.0430 (1.17)	0.0704 (1.60)	-0.0131 (-0.31)
	환경	0.0001 (0.00)	0.0322 (1.15)	-0.0401 (-1.41)	0.0408 (0.83)
	사회안전	0.0669* (2.38)	0.1469** (3.67)	0.0689 (1.56)	-0.0567 (-1.18)
사회영역	신뢰	0.0890** (5.41)	0.0764* (2.71)	0.0685* (2.60)	0.1435** (6.25)
Adj. R2		0.3369	0.3527	0.3244	0.3630
표본수		14,205	3,865	6,541	3,799

주)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성,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혼인상태, 연령, 학력이 통제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추정결과를 표시되지 않았음.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들이 해당 시군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이를 거주하는 도시별(시급도시/군급도시)로 나누어 분석하면, 개인/가족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거환경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급도시는 여가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군급도시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도시성격이 강한 동지역과 농촌성격이 강한 면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개인/가족영역에서는 순위적 변동을 줄만큼의 차이는 없었다. 주거환경영역에서(상대적으로 동(도시)지역 거주자)는 사회안전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인 면지역 거주자는 오히려 여가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오히려 사회영역으로 구분한 신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충청남도 사회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충남의 최대 설문조사인 충남사회지표조사는 당해 연도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좋은 조사이다. 하지만 조사 성격상 사회전반을 파악하기는 좋지만 특정 분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2년 전부터 3년을 주기로 특정 분야의 조사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충남사회지표조사는 다음의 점이 개선되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지표변화이다. 최근, 국가 사회지표와의 비교지표 도출(지역 간 차이 분석)과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지표의 3개 년 주기적 조사 전략으로 많이 정리되었지만 2012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사회지표의 역사를 감안할 때 보다 규격화되고 정량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충남사회지표는 당해 연도 지역사회 실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계열적 분석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조사척도의 문제이다. 많은 항목에서 동일성격의 설문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척도가 달라(예를 들어 5점 만점, 11점 만점 등) 시기적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표본추출의 최소 공간적 범위이다. 현재 충남사회지표는 시군단위의 통계 생산을 위해 집계·공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간 비교는 효과적이지만 더 낮은 단계의 지역 비교(예를 들어 읍·면·동 단위의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계적 공포는 시군 단위로 하여도, 활용도 측면에서는 읍면동단위의 집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읍면동의 경우 표본추출이 '0'인 지역도 있어 전체적인 지역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표본재설계 과정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지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가칭) 충남사회지표 활용 정책제안 콘테스트’ 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제안할 때 도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4장.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제안: 사회지표와 생활SOC지표의 연계분석

1.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실증분석방법

연구진행과정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계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연구의 핵심내용인 지역별·계층별 삶의 질 격차와 생활SOC 서비스 공급수준의 격차를 분석한다. 생활SOC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권역과 수혜(수요)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계량화한다. 기존 연구들이 단순히 ‘서비스 권역 내 수요인구’만을 고려하거나 동의 인접(주변)시설의 분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비해 본 분석에서는 공간가중치 누적값을 고려한 점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충남의 삶의 질 격차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조사 원자료(2019년)와 충남사회지표 원자료(2019)를 이용하였다. 삶의 질 만족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측정한 삶의 질 만족도 변수와 OECD의 주관적 웰빙과 관련한 권고 문항들을 이용한 수치-즉, 삶에 대한 만족, 일에 대한 가치, 행복감을 더하고 근심·걱정과 우울감을 뺀 수치-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이들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들의 생활SOC와의 관계 분석을 위해 [식 1]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Y_{ijk} = \alpha + \beta_1 X_{ijk} + \beta_2 Z_{ijk} + \beta_3 W_{ijk} + \beta_4 V_{ijk} + \epsilon_{ijk} \quad \text{[식 1]}$$

여기서, Y_{ijk} 는 충남사회조사 응답자 ijk 의 삶에 대한 만족도(0~10점,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만족감에 해당) 혹은 OECD의 주관적 웰빙과 관련한 권고 문항들을 이용한 수

치-즉, 삶에 대한 만족, 일에 대한 가치, 행복감을 더하고 근심·걱정과 우울감을 뺀 수치-에 해당하고, $\bar{g}$ 는 응답자 g 의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세대유형, 주택형태, 주택점유유형을 포함하며, $\bar{g}$ 는 생활SOC의 서비스 수준을 나타낸다. $\bar{g}$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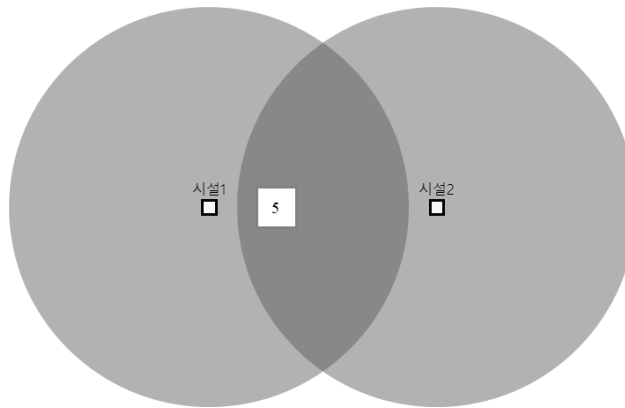
한편 생활SOC 격차분석(충남사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생활인프라 시설자료를 사용하여,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생활 SOC시설의 종류(국토지표 모니터링)를 기초로 서비스 범위에 따라 근린, 지역(읍면동), 도시(시군)로 구분하였고, 이들 시설의 임계거리는 [식 2]과 같이 충남 시군과 읍면동의 평균 거리를 통해 설정하였다.

$$\bar{g} = \frac{\sum_{i=1}^n g_i}{n} \quad \text{식 2}$$

위 식에서 $\bar{g}$ 는 읍면동 g 의 면적을 의미하고, n 은 충청남도 내 읍면동의 수를 나타낸다. [식2]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읍면동의 면적을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 뒤 제곱근을 적용함으로써 읍면동 간 평균 거리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bar{g}$ 는 읍면동 간 평균 거리를 정의한다. 만일 $\bar{g}$ 와 n 이 각각 충청남도 내 시군구 g 의 면적 및 시군구의 수를 나타낸다면 시군구 간 평균 거리로 역시 [식2]로 정의할 수 있다. [식3]을 적용하여 추정한 평균 거리는 읍면동과 시군구 각각 5,366km와 22,649km이다. 읍면동과 시군구 평균 거리는 각각 도시시설과 지역시설의 서비스 권역으로 정의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근린시설은 1,000km로 설정하였다.

서비스 양호지역은 생활SOC로부터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지역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도보나 차량 등으로 쉽게 이동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서비스 취약지역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서비스 접근성을 정량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서비스 권역 내 인구수로 정의한다. 가령 아래 <그림20>과 같이 시설1과 시설2의 서비스 권역 내에 위치하는 빨간색 테두리의 주거지역에 다섯 명이 거주하는 경우 방법을 이용한다.

즉 그 값은 5가 된다. 즉, 어느 시설이든 하나의 시설의 서비스 권역 내에 있는 인구 수인 것이다. 시설 내 인구수가 많을수록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림 20〉 시설별 서비스권역내 인구 산정방식(예)

2) 분석결과

(1) 생활SOC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격차 완화

■ 충남 생활SOC격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방법을 적용하여 충청남도 내 읍면동별로 24개 생활SOC 시설의 수혜(수요)인구를 추정하였다. 다음 표는 집계구 단위로 추정한 접근성 수준을 행정동(207) 단위로 집계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24개 생활SOC 중 11개 근린시설(서비스 권역 1,000m)을 대상으로 접근성 수준을 추정한 결과를 동, 읍, 면으로 구분하여 수혜인구를 집계하였다. 분석결과의 전반적인 패턴은 동의 수혜인구 즉, 접근성이 면이나 읍 지역보다 월등히 좋다는 점이다. 동의 경우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수요인구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다수의 근린시설이 입지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24개 생활SOC 중 3개 지역시설(서비스 권역 22,649m)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추정한 결과를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혜인구를 집계한 결과이다. 공공체육시설이나 경찰서의 경우는 근린시설의 경우와 유사하게 동지역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보건기관의 경우는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즉, 읍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보건기관의 경우 인구밀도에 비례하여 입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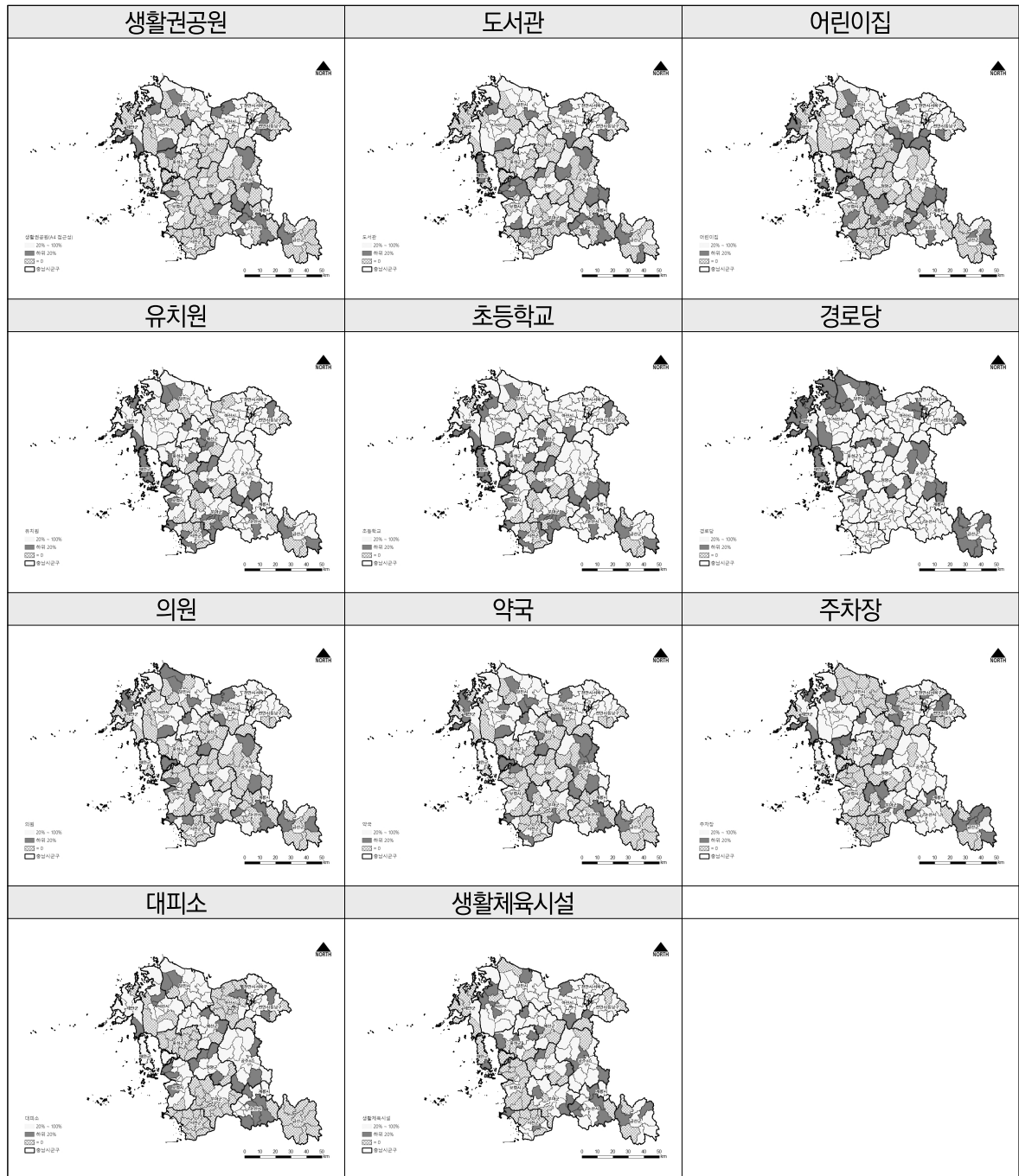
까지의 이동 거리에 균질하도록 지리적 공간상에서 등질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을 전제하면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읍이나 면의 경우 합산되는 권역 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추측된다.

〈표 64〉 지역별 생활SOC 수혜인구

(단위: %)

구분	생활SOC	동	면	읍	전체
근린 시설	생활권공원	92.8	26.0	68.1	66.8
	도서관	90.9	26.9	67.4	66.1
	어린이집	5.1	1.8	3.8	3.8
	유치원	2.9	1.1	1.7	2.1
	초등학교	5.6	2.1	3.6	4.1
	경로당	9.1	25.5	16.2	15.7
	의원	91.7	25.2	68.3	66.1
	약국	93.9	28.3	71.1	68.8
	주차장	82.8	22.5	58.8	59.0
	대피소	80.0	18.4	31.0	49.9
	생활체육시설	70.3	24.6	44.6	50.5
지역 시설	체육공공시설	99.6	88.7	97.1	95.7
	보건기관	100.0	98.9	98.7	99.4
	경찰서	99.8	72.9	95.4	90.6
도시 시설	주제공원	100.0	95.8	95.3	97.6
	공연문화시설	100.0	99.8	98.9	99.7
	종합사회복지관	100.0	84.2	85.5	91.8
	노인복지관	9.2	25.4	13.6	15.1
	노인교실	5.9	4.1	4.1	4.9
	종합병원	100.0	83.2	87.1	91.9
	응급의료시설	100.0	92.4	92.3	95.9
	병원	100.0	95.4	94.3	97.3
	소방서	100.0	99.9	100.0	100.0
	노인여가복지시설	9.2	25.4	13.6	15.1

24개 생활SOC 중 10개 도시시설(서비스 권역 5,366m)을 대상으로 A1과 A4를 적용한 결과를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혜인구를 집계한 결과, 도시시설의 경우도 근린시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동지역에서의 가장 양호한 접근성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 21〉 생활SOC서비스 취약(양호)지역 분포(근린시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촌성격의 면지역과 도시성격인 동지역 간에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지역의 특정시설의 경우 지역 내 모든 거주인구가 해당 접근성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동일 성격의 생활SOC가 복수로 있어 선택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큰 격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충청남도 내 행정동 단위로 11개 근린시설만을 대상으로 추정된 접근성을 단계구분도로 시각화한 <그림21>에서 빨간색 빗금은 추정결과가 0인 읍면동을 의미한다. 빨간색은 추정결과가 0보다 큰 읍면동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옅은 초록색은 나머지 80% 지역을 나타낸다. 근린시설의 서비스 권역을 1km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사각(취약) 지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 권역이 증가하면 이렇듯 접근성 추정결과가 0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 충남 도민의 삶의 질과 생활SOC

삶의 질과 기반시설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전자를 종속변수로 하고 후자와 충남 사회조사 응답자의 속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한다.

<표 65>는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응답자 개인의 속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 혹은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에서의 차이를 살펴본다. 삶에 대한 만족 혹은 OECD 권고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 관련 문항들을 이용한 일종의 지수-즉, 삶에 대한 만족, 일에 대한 가치, 행복감을 더한 후에 근심·걱정과 우울감을 뺀 수치-에 대해, 응답자의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세대유형,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상이함을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50대, 저학력, 미혼,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저소득, 2세대 이상 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 월세 거주에 경우에 삶에 대한 만족 혹은 관련 지수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기반시설들 가운데 도서관, 유치원, 종합병원, 경찰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삶에 대한 만족 혹은 관련 문항을 이용한 삶의 질 지수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한편,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의 경우 생활권공원, 공연문화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경찰서, 소방서, 생활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지수, 주거환경 만족 각각에 대한 기반시설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지역을 읍면동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읍지역의 경우 주제공원, 종합병원, 약국, 경찰서, 소방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표 65〉 삶의 질과 기반시설 간 관계(평균, tsw = 0.01, 서비스 권역을 형성하는 시설들의 공간가중치 누적값에 수요인구수를 곱한 값)

구 분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만족+일에 대한 가치+행복감-근심·걱정-우울감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여성	0.196**(5.55)	0.939**(6.33)	-0.014(-0.44)
연령대(15~19세)			
20대	-0.284**(-3.06)	-0.693+(-1.80)	-0.069(-0.78)
30대	-0.674**(-7.11)	-2.187**(-5.59)	-0.222*(-2.47)
40대	-0.819**(-8.68)	-2.824**(-7.25)	-0.234**(-2.64)
50대	-0.864**(-8.95)	-2.838**(-7.10)	0.049(0.54)
60대 이상	-0.791**(-7.85)	-2.456**(-5.89)	0.288**(3.02)
학력(초졸 이하)			
중졸 이하	0.106*(2.49)	0.722**(4.03)	0.004(0.09)
고졸 이하	0.251**(5.85)	1.334**(7.41)	0.050(1.28)
대학 이상	0.709**(14.28)	3.115**(14.89)	0.233**(5.13)
혼인상태(미혼)			
배우자 있음	0.411**(7.08)	1.762**(7.22)	0.068(1.23)
사별	0.233**(3.11)	0.959**(3.07)	0.131+(1.94)
이혼	-0.112(-1.37)	-0.576+(-1.68)	-0.014(-0.19)
가구주	0.120**(3.13)	0.703**(4.35)	0.003(0.07)
가구소득(1백만 원 미만)			
1~2백만 원 미만	0.444**(10.75)	1.945**(11.23)	0.121**(3.28)
2~3백만 원 미만	0.627**(14.12)	2.800**(15.05)	0.152**(3.76)
3~4백만 원 미만	0.785**(15.65)	3.564**(16.98)	0.253**(5.40)
4~5백만 원 미만	0.886**(16.67)	4.019**(17.77)	0.234**(4.65)
5백만 원 이상	1.247**(23.84)	5.583**(25.34)	0.595**(12.16)
세대구분(1인 가구)			
1세대 가구	0.042(0.76)	0.296(1.27)	0.084+(1.68)
2세대 가구	-0.310**(-6.10)	-1.376**(-6.37)	-0.079+(-1.75)
3세대 이상 가구	-0.309**(-4.38)	-1.715**(-5.80)	-0.109(-1.64)
비혈연 가구	0.058(0.18)	1.167(0.87)	0.374(1.47)
주택형태(단독주택)			
아파트	-0.129**(-3.60)	-0.855**(-5.71)	0.197**(5.95)
연립주택	-0.160**(-2.62)	-0.458+(-1.76)	0.087(1.62)
다세대 주택	-0.196*(-2.53)	-1.474**(-4.54)	-0.057(-0.83)
기타	0.360**(3.77)	1.821**(4.54)	0.216*(2.42)
점유형태(자가)			

구 분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만족+일에 대한 가치+행복감-근심·걱정-우울감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전세	-0.094+(-1.85)	-0.398+(-1.84)	-0.355**(-7.23)
보증부 월세	-0.159**(-2.79)	-0.713**(-3.03)	-0.435**(-8.93)
월세(사글세포함)	-0.317**(-4.88)	-1.259**(-4.73)	-0.341**(-5.89)
무상	-0.031(-0.44)	-0.354(-1.20)	-0.257**(-4.24)
기반시설 접근성	0.105(0.90)	0.968+(1.95)	0.761**(-6.83)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0.152**(-5.27)	-0.995**(-8.38)	-0.227**(-8.53)
공연문화시설	0.031(0.95)	0.135(0.99)	0.077**(-2.67)
도서관	0.489**(-2.92)	3.022**(-4.25)	0.596**(-3.66)
공공체육시설	-0.037(-0.65)	0.400+(1.69)	0.436**(-8.53)
어린이집	-0.862*(-2.02)	0.768(0.43)	-0.325(-0.78)
유치원	53.794**(-4.50)	334.204**(-6.56)	-33.459**(-3.09)
초등학교	-14.924(-1.49)	-150.230**(-3.52)	14.355(1.58)
종합사회복지관	-0.352**(-3.99)	-2.698**(-7.21)	-0.631**(-7.58)
경로당	-0.492(-1.39)	-2.004(-1.36)	-0.346(-1.13)
종합병원	0.519**(-3.12)	3.493**(-4.82)	-0.021(-0.14)
응급의료시설	-0.788**(-5.38)	-4.540**(-7.09)	0.147(1.13)
병원	0.020(0.86)	-0.066(-0.67)	0.020(0.94)
의원	0.070(0.75)	0.020(0.05)	-0.329**(-3.58)
보건기관	-0.059(-0.32)	-1.155(-1.57)	-0.666**(-3.94)
약국	-0.013(-0.08)	-0.893(-1.28)	-0.198(-1.26)
주차장	-0.001(-0.33)	0.002(0.15)	0.018**(-6.00)
경찰서	0.486**(-2.93)	3.938**(-5.76)	0.550**(-3.54)
소방서	0.048(0.65)	0.318(1.06)	0.264**(-3.80)
대피소	-1.912**(-5.73)	-10.449**(-7.45)	-1.731**(-5.51)
생활체육시설	-0.414(-0.92)	-2.421(-1.29)	0.831+(1.95)
노인여가복지시설	1.415**(-2.84)	6.412**(-3.11)	1.121*(2.51)
상수향	5.705**(-52.44)	7.999**(-17.71)	4.970**(-49.91)
관측수	25,243	25,199	25,224
Adj. R-squared	0.0827	0.0907	0.066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반면, 면지역의 경우 유치원, 경로당, 종합병원, 병원, 약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지역의 경우 공연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경로당, 종합병원, 병원, 보건기관, 경찰서, 생활체육시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삶의 질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읍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종합병원, 병원, 약국, 경찰서, 소방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면지역의 경우 공연문화

시설, 유치원, 경로당, 종합병원, 약국, 경찰서가 중요한 반면에 동지역의 경우 공연문화 시설, 도서관, 유치원, 경로당, 종합병원, 병원, 주차장, 경찰서, 생활체육시설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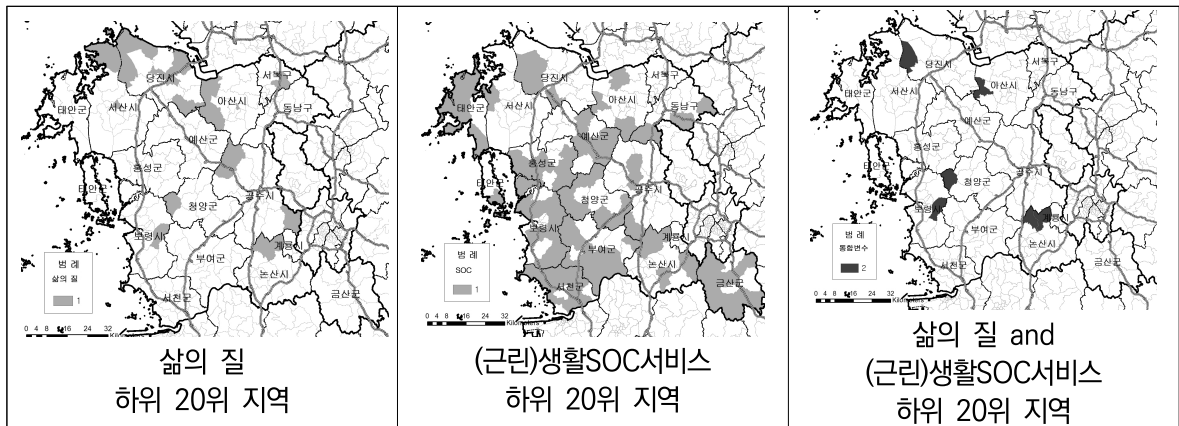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읍지역에서는 공연문화시설, 경로당, 종합병원, 주차장, 경찰서, 생활체육시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면지역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초등학교, 경로당, 종합병원, 병원, 의원, 경찰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중요한 반면에 동지역에서는 공연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경로당, 병원, 주차장, 대피소, 생활체육시설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정책제안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삶의 질의 지역적·계층적 격차는 더욱 고민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광역시에 비해 광역도가, 도시지역인 동지역에 비해 농촌 성격의 읍지역과 면지역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젊은 층은 도시에서, 고령자는 농촌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심층분석한 결과 전국적인 분석과 비슷하게, 고령자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청년과 중장년에 비해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단, 상대적으로 청년들은 동지역을, 중장년과 고령자는 면지역에서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활SOC와 삶의 질 만족도를 함께 분석한 결과- 1) 삶의 질 만족도가 하위 20위에 해당하는 지역과 2)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린 생활SOC 최대 취약지역 상위 20위 지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삶의 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20위 이하)은 주로 시급도시의 농촌지역 거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린생활SOC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대부분 면적이 모두 해당하며, 동지역과 읍지역에서도 상당부분 나타났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한정된 자료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삶의 질이 낮은 것과 생활SOC서비스 수준과의 관계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2〉 삶의 질과 생활SOC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

국가와 자치단체의 삶의 질 정책(사업)에 있어서 모든 국민과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보다는 아직 삶의 질에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과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즉, 삶의 질이 낮은 사람들의 수준을 높여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양극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등을 고려할 때 더 행복한 국민과 시민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최 일선과제일 것이며, 선도국가·선도도시로 가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22〉와 같이 삶의 질과 생활 SOC서비스 수준이 모두 낮은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생활SOC정책 및 코로나19로 인한 뉴딜정책과 적극 연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인구감소 및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시설의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화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고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이용하는 생활SOC서비스 수준의 측정방법과 대상시설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성격이 다른 생활SOC서비스 수준을 국가최저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측정하고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측정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며, 지방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다르고, 도시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분석과 기준 재설정 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 설정되고 있는 시설 역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로 재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생활SOC 개념과 유형, 세부시설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욱 요구되며, 복합생활SOC공급에 있어서 주요 서비스 콘텐츠는 건강과 질병관리가 중심이 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예를 들어 ‘건강복지마을만들기’ 정책관점에서 추진되고 단위사업 역시 건강 관련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강조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의료 관련 생활SOC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별 격차 완화

■ 시설 원단위 분석

해당 의료시설이 얼마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의료시설 하나가 몇 명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하는 시설 원단위 개념(전체인구수/시설수)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원단위 숫자가 작은 경우는 하나의 의료시설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적다는 것으로, 일정지역에 의료시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인 동지역은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적어, 해당 의료시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농촌지역인 면지역은 공적의료기관이 보건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의료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동지역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의 경우 동지역에 비해 20배 이상 적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가운데, 그나마 보건기관이 농촌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6〉 읍면동별 시설원단위

구분	인구	종합 병원	응급의료 시설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약국
동지역	957,778	87,071	87,071	33,027	1,442	95,778	1,912
면지역	623,459	-	-	623,459	5,469	1,850	4,796
읍지역	483,304	241,652	120,826	37,177	1,633	8,950	1,684
총합	2,064,541	158,811	137,636	48,013	1,922	5,148	2,249

* ‘-’는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임

충남은 4개의 의료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역별로 보면 충남의 1, 2위 도시가 있는 천안권에 의료시설이 많지만,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병원 1개가 19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인 대전과 인접한 논산권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주민의 일상적 의료시설인 의원 역시 천안권 시설의 원단위가 가장 크며, 이어 서산권과 공주권이었다.

〈표 67〉 의료권역별 시설원단위

구분	인구	종합 병원	응급의료 시설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약국
공주권	147,157	147,157	147,157	49,052	1,773	4,459	2,102
논산권	282,342	282,342	94,114	56,468	1,632	2,314	1,822
서산권	385,104	128,368	128,368	96,276	2,082	4,814	2,363
천안권	950,090	190,018	190,018	35,189	1,983	15,835	2,474
홍성권	299,848	99,949	99,949	74,962	1,947	2,829	2,054
충남	2,064,541	158,811	137,636	48,013	1,922	5,148	2,249

충남 15개 시군별로 해당 의료시설 원단위를 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아산시와 서산시가 열악하고, 응급의료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병원은 공주시가, 의원은 청양군이, 보건기관은 천안시와 계룡시가, 약국은 아산시와 계룡시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개 의료시설 당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많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불편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의료시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남 1·2인 도시인 천안시와 아산시마저도 수치적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 오히려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환자들은 수도권으로의 이동, 인접 중소도시는 천안시 의료시설 이용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8〉 시군별 시설원단위

구분	인구	종합 병원	응급의료 시설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약국
계룡	40,745	-	-	20,373	2,397	13,582	2,716
공주	106,412	106,412	106,412	106,412	1,612	3,547	1,935
금산	51,769	-	-	51,769	1,479	2,876	1,569
논산	116,106	116,106	116,106	58,053	1,470	2,903	1,843
당진	160,449	160,449	160,449	53,483	2,006	5,176	2,431
보령	95,490	95,490	95,490	47,745	1,736	3,410	2,122
부여	64,134	-	64,134	64,134	2,138	1,782	1,943
서산	166,069	83,035	83,035	-	2,185	6,387	2,442
서천	50,333	-	50,333	50,333	1,736	1,798	1,936
아산	313,587	313,587	313,587	34,843	2,240	11,200	2,931
예산	75,334	75,334	-	75,334	1,883	2,598	1,794
천안	636,503	159,126	159,126	35,361	1,878	19,891	2,298
청양	30,030	-	30,030	30,030	3,003	1,306	2,145
태안	58,586	-	-	58,586	2,020	2,547	2,020
홍성	98,994	98,994	98,994	-	2,020	3,807	2,200
충남	2,064,541	158,811	137,636	48,013	1,922	5,148	2,249

* '-'는 해당시설이 없는 경우임

■ 시설 접근성 분석(의료시설 서비스 취약지역·인구 분석)

이용자 측면에서 의료시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권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종합병원, 응급의료, 병원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의료시설 성격이 강한 의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의원과 약국의 수혜인구는 66.1%, 68.8%로 타 의료시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33.9%, 31.2%의 주민은 의원과 약국의 접근성 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역의 성격 즉,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접근성 격차(A1방법)를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은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대부분 접근가능한 지역(19,990M)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면, 농촌(면)지역 거주자와 농촌과 도시성격이 혼재한 읍지역 거주자는 각각 83.2%, 87.7%만이 종합병원 접근성 혜택을 누리고 있다. 즉, 면지역과 읍지역 생활자의 16.8%와 12.3%는 종합병원 접근성 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응급시설도 종합병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종합병원 내 응급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 경우 수혜인구가 모든 지역에서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상적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원의 경우 동지역은 91.7%로 높은 반면 농촌지역인 면지역은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약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69〉 지역(읍면동)별 시설 접근성

구분	인구	종합 병원	응급 의료시설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약국
동지역	957,778	100.0	100.0	100.0	91.7	100.0	93.9
면지역	623,459	83.2	92.4	95.4	25.2	98.9	28.3
읍지역	483,304	87.1	92.3	94.3	68.3	98.7	71.1
충남	2,064,541	91.9	95.9	97.3	66.1	99.4	68.8

이용자 측면에서 해당 의료시설의 접근성 중복(이용 선택성)을 허용하여 분석한 경우는 모든 시설에서 100%를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성격 즉,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접근성 격차를 보면, 종합병원, 응급 의료, 병원, 보건기관은 접근성 측면에서 시설접근성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일상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원과 약국의 경우 농촌지역인 면지역은 87.0%와 76.1%로 접근성 취약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0〉 의료권역별 시설 접근성

구분	인구	종합 병원	응급 의료시설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약국
공주권	147,157	100.0	100.0	100.0	61.3	99.6	63.3
논산권	282,342	54.9	81.7	100.0	42.0	99.3	43.8
서산권	385,104	91.7	91.7	93.6	53.4	97.6	58.2
천안권	950,090	100.0	100.0	100.0	84.0	99.9	86.9
홍성권	299,848	97.4	99.6	89.7	50.8	99.6	51.1
충남	2,064,541	91.9	95.9	97.3	66.1	99.4	68.8

〈표 71〉 도시(시군)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구분	인구	종합 병원	응급 의료시설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약국
계룡	40,745	100.0	100.0	100.0	81.5	100.0	85.9
공주	106,412	100.0	100.0	100.0	53.6	99.5	54.6
금산	51,769	0.0	0.0	100.0	46.1	99.2	45.8
논산	116,106	100.0	100.0	100.0	51.9	100.0	55.4
당진	160,449	99.2	99.2	99.8	57.1	99.8	61.5
보령	95,490	96.8	98.7	98.7	52.9	98.7	52.7
부여	64,134	60.5	100.0	100.0	21.6	98.5	23.7
서산	166,069	95.8	95.8	90.2	55.2	98.0	61.2
서천	50,333	0.0	100.0	100.0	41.0	98.9	40.8
아산	313,587	100.0	100.0	100.0	82.0	100.0	81.9
예산	75,334	100.0	100.0	98.0	45.9	100.0	48.0
천안	636,503	100.0	100.0	99.9	85.1	99.9	89.3
청양	30,030	84.4	100.0	100.0	28.7	100.0	28.7
태안	58,586	59.7	59.7	86.2	38.5	90.7	40.4
홍성	98,994	100.0	100.0	71.5	59.2	100.0	58.6
충남	2,064,541	91.9	95.9	97.3	66.1	99.4	68.8

■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 만족도 관계분석(생활SOC와 주민만족도)

생활SOC시설과 실제 주민의 해당 의료시설서비스의 만족도의 관계를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보면, 종합병원은 유의하지 않으며, 지방의료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종합병원은 양의 관계를, 응급의료시설과의 관계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 관계성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병(의)원서비스 만족도는 의원시설 원단위와 관계가 나타났다.

주거환경요인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활SOC서비스 원단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합병원과 의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종합병원과 의원, 보건기관은 본인의 건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2〉 의료관련 생활SOC(원단위)가 해당 의료시설만족도에 주는 영향

구분		종속변수(충남사회지표조사 만족도)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병(의)원	주거환경 (의료 만족도)	본인의 건강만족도
13종합병원(%)	계수	0.007	0.028+	-	0.017*	0.011*
	t-값	(0.55)	(1.90)		(2.29)	(2.43)
14응급의료시설(%)	계수	-0.010	-0.031+	-	-0.004	-0.000
	t-값	(-0.66)	(-1.94)	-	(-0.55)	(-0.07)
15병원(%)	계수	-	-	-0.003	0.014**	0.003
	t-값	-	-	(-0.57)	(3.13)	(0.56)
16의원(%)	계수	-	-	0.042+	0.030	0.033+
	t-값	-	-	(1.70)	(1.57)	(1.69)
18약국(%)	계수	-	-	-	0.010	-0.011
	t-값	-	-		(0.36)	(-0.62)
17보건기관(%)	계수	-	-	-	0.001	-0.011+
	t-값	-	-	-	(0.22)	(-1.65)

* “-”는 종속변수와와의 관계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지 않은 변수임.

※ 개인 및 가족속성변수는 회귀분석과정에서 투입하여, 통제하였으나 표에는 표시하지 않음.

의료시설 중 약국과 보건소의 경우 사회지표조사 응답자수가 적어 분석이 불가능하여 제외함.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각각 시설의 서비스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지방의료원은 종합병원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병원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환경만족도와 본인의 건강만족에 영향을 주는 의료시설 접근성은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이처럼 의료시설 원단위에 비해 접근성과의 관계는 대부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73〉 의료관련 생활SOC(접근성)가 해당 의료시설만족도에 주는 영향

구분		종속변수(충남사회지표조사 만족도)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병(의)원	주거환경 (의료 만족도)	본인의 건강만족도
13종합병원(%)	계수	-3.827	-10.193*	-	-2.634	-1.283
	t-값	(-0.57)	(-2.19)		(-0.68)	(-0.67)
14응급의료시설(%)	계수	1.773	0.152	-	5.247	5.013
	t-값	(0.16)	(0.02)	-	(0.74)	(1.25)
15병원(%)	계수	-	-	6.098+	1.683	-4.066
	t-값	-	-	(1.88)	(0.23)	(-1.03)

구분		종속변수(충남사회지표조사 만족도)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병(의)원	주거환경 (의료 만족도)	본인의 건강만족도
16의원(%)	계수	-	-	-1.913	2.013	0.588
	t-값	-	-	(-1.10)	(0.38)	(0.11)
18약국(%)	계수	-	-	-	7.195	-0.609
	t-값	-	-	-	(1.36)	(-0.11)
17보건기관(%)	계수	-	-	-	5.877	5.890
	t-값	-	-	-	(0.29)	(0.50)

* “-”는 종속변수와와의 관계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지 않은 변수임.

※ 개인 및 가족속성변수는 회귀분석과정에서 투입하여, 통제하였으나 표에는 표시하지 않음.

의료시설 중 약국과 보건소의 경우 사회지표조사 응답자수가 적어 분석이 불가능하여 제외함.

분석결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의료시설 원단위가 접근성보다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시설 원단위와 접근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원과 약국만 양의 관계를 나타낼 뿐 다른 시설들은 상호관계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표 74〉 의료시설 원단위와 접근성 상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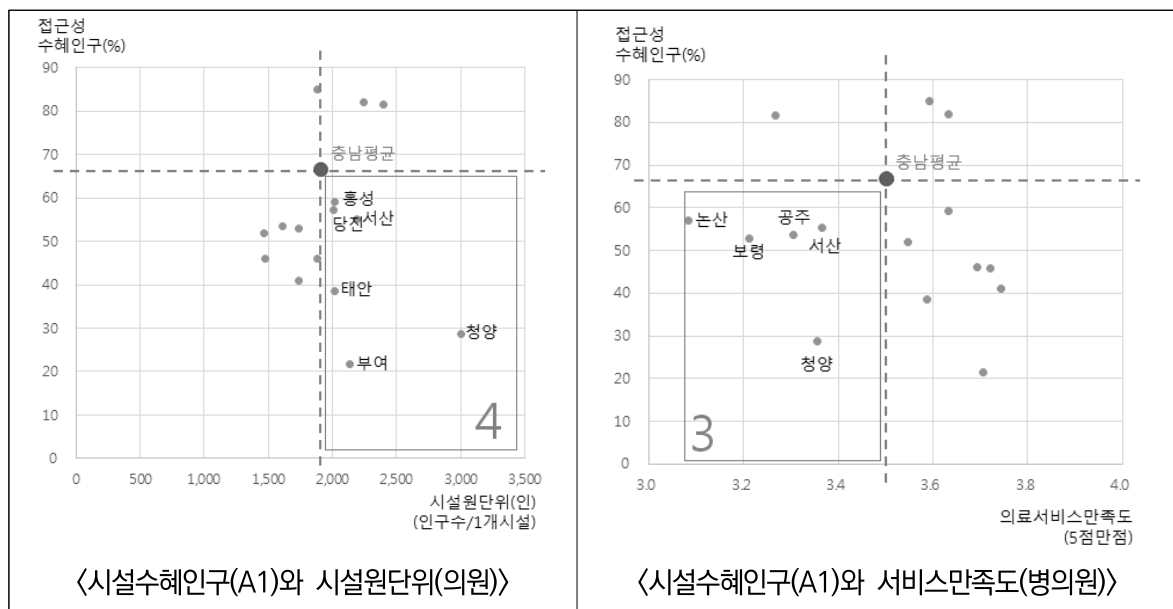
구분		원단위					
		종합병원	응급의료	병원	의원	보건시설	약국
접 근 성	종합병원	0.1112 (0.1106)	-	-	-	-	-
	응급의료	-	0.0703 (0.3139)	-	-	-	-
	병원	-	-	0.0853 (0.2217)	-	-	-
	의원	-	-	-	0.4286 (0.0000)	-	-
	보건시설	-	-	-	-	0.0220 (0.7530)	-
	약국	-	-	-	-	-	0.3741 (0.0000)

* ()는 유의수준임.

■ 정책제안

①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의료취약지역을 도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그림23>과 같이 해당지역에서 해당의료시설 수혜를 받는 인구비중(%)과 시설원단위의 관계를 통해 도출하였다. 그림에서 4사분면에 위치한 지역은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



<그림 23> 병(의)원 취약지역 도출

<그림23>은 의료시설 중 의원시설의 수혜인구비중이 낮고(취약인구 비중이 높고), 하나의 시설이 지원해야하는 인구가 많을(1개 시설당 지지인구, 인구에 비해 시설이 적은 지역) 수록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대적 분석결과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적고 농촌성격이 강한 청양, 부여와 의료권역 구분에서 서산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림23>의 오른쪽 그래프는 시설수혜인구와 시설만족도 분석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서산, 청양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왼쪽 그래프의 4영역, 오른쪽 그래프의 3영역에 모두 해당하는 도시는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의료시설·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의 격차를 의료시설의 접근성분석과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의료시설 접근성 분석은 국토정보원이 제공하는 6종 의료시설의 위치자료와 인구가 포함된 통계청 집계구자료를 이용하고, 의료시설이용 만족도는 충남사회지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원단위를 분석한 결과 충남의 최대도시인 천안시도 열악하였으며, 천안시와 인접한 아산시도 더욱 취약하였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은 생활 의료시설인 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고, 농촌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이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시설접근성과 의료시설원단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료취약지역은 충남에서도 농촌성격이 가장 강한 청양군과 부여군이, 의료권역 구분 상 서산권인 태안, 서산, 당진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연구대상지에 대해, 의료시설의 접근성과 만족도라는 질적·양적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시점과 공간적 분석단위의 불일치 등은 자료의 한계인 동시에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의료시설의 부족문제와 격차 문제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련 통계 생산의 세밀함과 정확성도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② 생활SOC 복합화 전략: 아산시 도고면 사례

[주요내용] 이러한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도고면의 부족한 생활 SOC공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도고면에는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순위로 우선 확충이 필요한 시설을 복합하여 최적의 위치에 공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건강복지 관련 기능을 주기능시설로 설정하고, 연계기능을 복합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접근성이 높은 곳은 어린이집+노인복지관+노인교실+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치하고, 이용자 수요 등의 검토를 통해 민간시설인 의원+약국을 적극 유치하고, 그 입지는 기존 공원녹지공간 또는 신규 조성되는 공원녹지 공간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75〉 도고면 생활SOC 확충 우선순위 검토

구분	시설 수혜인구 (%)	시설수 (개수)	확충 우선순위*	정부 제시 주요 복합화 사업대상
생활권공원	48.9	6	2순위	
주체공원	100.0	0		
문화시설	100.0	0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28.4	2	2순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체육시설	87.9	2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0.5	3	2순위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유치원	1.4	2	2순위	
초등학교	2.7	2	2순위	
종합사회복지관	100.0	1		
노인복지관	37.4	0	1순위	
노인교실	5.0	0	1순위	
경로당	37.4	34	2순위	
종합병원	100.0	0		
응급의료시설	100.0	0		
병원	100.0	0		
의원	29.7	1	2순위	
보건기관	100.0	2		
약국	39.3	2	2순위	
주차장	27.7	2	2순위	주거지주차장
경찰서	78.2	1		
소방서	100.0	0		
대피소	0.0	0	1순위	
생활체육시설	48.9	2	2순위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37.4	0	1순위	

* 우선순위 1순위는 해당시설이 도고면에 없으면서, 수혜인구가 50% 미만인 시설
우선순위 2순위는 해당시설이 도고면에 있지만, 수혜인구가 50% 미만인 시설

[정책동향]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체육-문화

-복합 플랫폼의 사업유형을 제시하고, 시설의 형태와 서비스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등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76〉 생활SOC 복합화 사업유형과 추진주체

구분	사업유형	정책 목표	주요 내용	주 기능 시설			
사업 유형 (예시)	돌봄플랫폼	고령화 및 돌봄 수요 대응	•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체육플랫폼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지역의 스포츠·여가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스포츠·여가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문화플랫폼	문화 중심 지역자치 기반 구축	• 지역의 문화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지원	공공도서관			
	복합플랫폼	소통·협력 기반의 사회혁신 활성화	• 일(work), 삶(live), 놀이(play)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창의공간 조성	①+②+③			
형태	수직 복합화		수평 복합화	중복 복합화			
							
규모 (서비스 범위)	구분	공간위계	공급목적	공급주체	규모	서비스위계	기능복합
	지역거점시설	소생활권 (국계법상 도시기본계획)	낙후지역 개선	공공	대규모	고차	대규모 복합시설
추진 체계	마을단위시설	마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상 근린권역)	아파트 수준 편의/복지	공공 우선투입 (민간고려)	소규모	저차	소규모 다기능시설 (마을커뮤니티센터)
							

사업1 (건강가정)

사업2 (공동육아)

사업3 ...

여가부

사업1 (주차장)

사업2

사업3 ...

국토부

협의 예산지원

지자체

균형위

사업 총괄 (접수, 협의 조정, 컨설팅)

협약절차 이행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 (사업계획 검토 조정 등)

협약체결 사업관리 (예산편성·정산 등)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복합화 사업계획

사업1

사업2

사업3

[예시] 동탄중앙이웃터 시설현황

5F

4F

3F

2F

1F

B1~B2

〈표 77〉 생활SOC 사업유형별 사례

사 업 내 용				
돌봄플랫폼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0	규모	• 연면적 13,069㎡(지하3, 지상7)
	외관		내용	•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곰달래어르신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곰달래 도서관, 강당,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조성
			재원	• 총사업비 281억 원 (국비 5, 시비 54, 구비 222)
체육플랫폼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자산리 308	규모	• 연면적 18,950㎡(지하1, 지상3)
	외관		내용	•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자활센터,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 조성
			재원	• 총사업비 430억 원 (국비 118, 도비 35, 군비 277)
문화플랫폼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	규모	• 연면적 2,917㎡(지하1, 지상 3)
	외관		내용	• 도서관(자료실, 열람실, 전시홀(로비), 다목적홀(작은 영화관), 평생학습실, 별빛극장(옥상)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조성
			재원	• 총사업비 103억 원 (국비 18, 도비 36, 군비 49)
복합플랫폼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규모	• 연면적 21,203㎡(지하1, 지상3)
	외관		내용	• 생명의 집(공연장), 건강의 집(보건소), 만남의 집(사무실), 문화의 집(문화원), 장애인/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야외공연장, 스포츠센터, 청산아트홀, 인삼고을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재원	• 총사업비 310억 원 (국비 97, 도비 17, 군비 175, 기타 21)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6.12., 생활SOC 복합화사업선정 가이드라인

2. 생활SOC정책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공원 접근성 추정과 최적 입지 제안

1) 실증분석방법

(1) 접근성 지표 구축 방법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관점에서 주거지 가까이에 큰 생활권 공원이 있으면 공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으면서도 어메니티(amenity) 측면에서 넓은 옥외공간이 주는 다양한 편익을 누릴 여지가 클 것이다. 공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공원까지 이동할 지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원 면적이 클수록 넓은 옥외공간의 향유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로부터 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익이 파생될 여지 역시 늘어날 수 있다. 가까이에 큰 공원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공원 이용 과정에서의 혼잡 등으로 인하여 편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리적 거리 감소 및 큰 공원 면적은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는 공원의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공원을 이용하는 수요인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공원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분산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원 접근성은 주민과 공원까지의 지리적 이동 거리와 공원의 면적, 그리고 공원을 이용할 수요인구의 규모를 결합하여 주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잣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원 접근성은 아래와 같이 식1로 정의할 수 있다.

$$\text{가} = \frac{\text{가} \times \text{가}}{\text{가}^i}$$

위 식에서 가 (=Urban Park Accessibility Index in Subregion j)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위 지역 가(이하 공간단위 가)에서의 공원 접근성을 나타낸다. 단위 지역 가는 대상지 전체를 구획한 하위 공간단위(읍면동, 집계구 등)를 의미한다. 우선 가 (=Population)는 공간단위 가에 거주하는 수요인구의 규모(=주민 수)를 나타낸다.

가 (=Level of Service in Subregion j)는 공간단위 가에 공급되는 공원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데, 아래 식2와 같이 정의한다.

$$\text{식 1} \quad \text{강개} = \frac{\text{강개} \times \text{강개}}{\text{강개}}$$

위 식에서 강개는 공원 강개의 면적을 나타내고, 강개는 대상지 내 공원의 개수이다. 강개(=unit area)는 1인당 공원 면적을 의미하는 모형 파라미터이다. 강개는 공원과 수요인구가 거주하는 공간단위 강개까지 지리적 거리인 강개를 매개변수(parameter)로 추정한 공간가중치(spatial weight)를 의미한다. 공간가중치는 강개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도록 거리조락함수(distance-decay function)를 적용한 값이다. 위에서 정의한 식2 즉, 공원 서비스 수준이란 공원 강개의 면적을 공간단위 강개에 배분한 결과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대상지 내 강개의 공원이 있으므로 공원 서비스 수준이란 대상지 내 모든 공원의 면적을 공간단위 강개에 배분·누적한 결과이다. 공원의 면적은 물론 공원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공간단위에 배분된다. 이는 공원까지 이동해야 할 거리가 증가할수록 공원 이용 과정에서의 서비스 편익이 줄어든다는 전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강개는 아래 식3과 같이 정의한다.

$$\text{식 3} \quad \text{강개} = \exp \left(-\frac{\log \frac{\text{강개}}{\text{강개}}}{\text{강개}} \right)$$

위 식에서 강개와 강개는 각각 서비스 도달거리(range of service)와 한계 공간가중치(marginal spatial weight)를 의미한다. 서비스 도달거리란 주민이 공원을 방문할 용의가 있는 최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사실 주민이 얼마나 멀리 있는 공원까지 이동하여 공원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는 실증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민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이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최대 이동 거리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증적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방법론 구성에 있어서 서비스 도달거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적 기준을 준용하여 1강개를 서비스 도달거리로 적용하였다. 한계 공간가중치는 서비스 도달거리에서 부여되는 공간가중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강개 서비스 도달거리에 대한 한계 공간가중치를 0.01로 부여한 경우, 이는 해당 공원까지 1강개를 이동해야 하는 주민의 경우 해당 공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1%라는 의미이다. 이는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가령 주민 1인이 1㎞ 거리에 있는 공원을 100회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1회 정도 실제 방문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혹은 해당 공원에서부터 1㎞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 중 1명만이 해당 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1㎞ 떨어진 공원 방문 가능성이 1%라는 것은 해당 거리가 실질적인 공원의 서비스 권역이고, 이 권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공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함의한다. 물론 식3에서 α 가 0이라면 이동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이고 공간가중치는 1이 된다. 이는 주민의 위치와 공원 중심점의 위치가 일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식3은 이러한 상황에서 α 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방문을 위한 이동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공간가중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동해야 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가중치가 감소하면 식2가 나타내는 면적으로 환산되는 공원 서비스 수준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3은 거리 따른 점진적 공간가중치 감소 효과를 거리조락함수를 통하여 반영하기 위한 정량적 수단이다. 이는 단순히 공원 서비스 권역을 1㎞로 규정하여 해당 경계까지는 서비스 권역 내 어디서든지 α 즉, 공간가중치 값이 1로 설정되고 서비스 권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공간가중치 값이 0으로 설정되는 접근성의 극단적인 변화를 적용하는 방식보다 현실적이다. 식3에서 서비스 도달거리(=공원 서비스 권역)를 벗어나면 공간가중치를 0을 설정한다.

식2의 핵심은 공원에서부터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거리조락효과를 적용하여 각 공원의 면적으로 주거지역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식2의 분자를 의미한다. 대상지에는 n 개의 공원이 분포하므로 각 공원에서부터 거리조락효과에 따라 배분되는 공원면적이 주거지역에 누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적된 공원면적은 해당 주거지역에서 도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 서비스의 수준을 정량화한 값이다. 식2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거지역 단위로 배분·누적되는 공원면적을 1인당 공원 면적인 α 로 나누어 명 단위로 환산한 결과이다. 1인당 공원 면적에 대한 기준 역시 지자체별 조례에 규정하거나 근거를 마련하여 결정할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분석결과 도출을 위하여 여기서는 α 값을 6로 적용한다. 이는 적정 수준의 공원 서비스 기준 충족에 필요한 1인당 최소 공원면적으로 해석한다.

최종적으로 식1은 공간단위 α 에서 명 단위로 환산한 실제 공원 서비스 수준 α 와

실제 인구수 Δ 간 산술적 차이로 정의한다. 이 차이가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1인당 최소 공원면적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더 많은 양의 공원 면적(인구수로 환산)이 해당 공간단위 지역에 배분·누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넓은 옥외공간의 향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공원의 흡인요인과 분산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서비스 편익이 상대적으로 좋음을 나타내고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공원 접근성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2) 신규입지 적정성 시뮬레이션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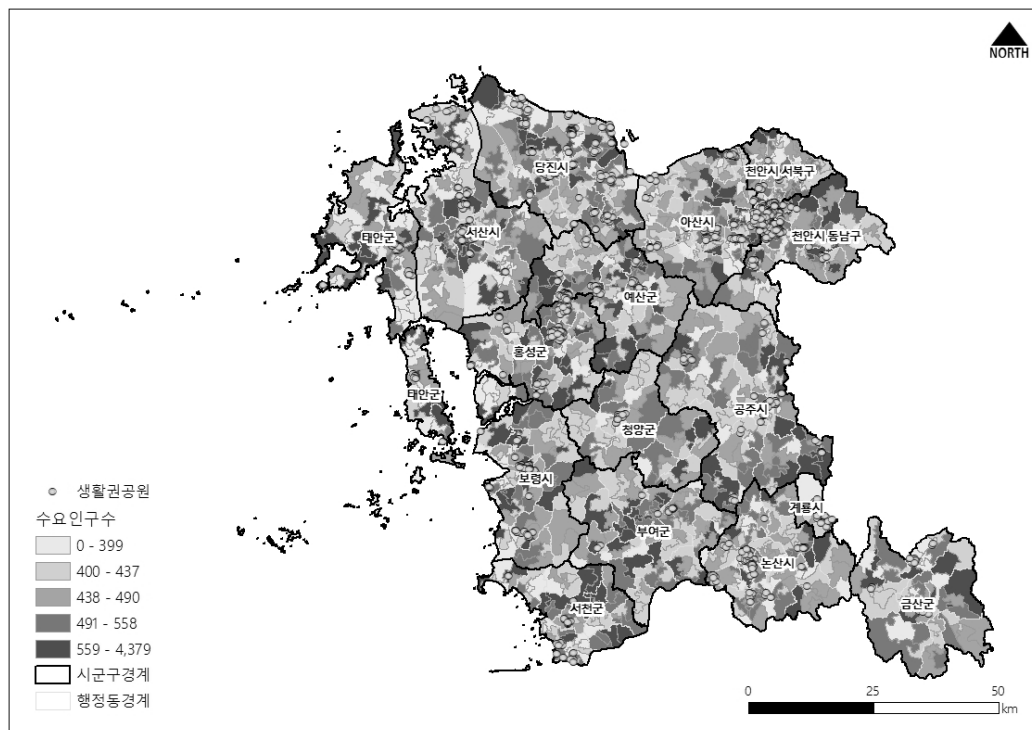
앞서 구축한 공원 접근성 지표를 적용하여 공원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른 공원 서비스 수준의 증진 효과를 입지 적정성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공원 신규 조성에 따라 공원 이용에 따른 서비스 수준이 좋아질수록 신규입지 적정성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아래 식4는 공원 신규 조성에 따른 이러한 서비스 수준의 개선 효과를 식2를 준용하여 정량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Delta_{\text{서비스}} = \frac{\Delta_{\text{면적}}}{\text{면적}} \times \Delta_{\text{인구수}}$$

위 식에서 $\Delta_{\text{서비스}}$ (=Improvement of Level of Service)는 공간단위 Δ 에서의 서비스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Delta_{\text{면적}}$ 는 신규 조성될 공원 Δ 의 면적을 의미한다. $\Delta_{\text{인구수}}$ 는 신규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지의 개수를 나타낸다. 모든 잠재적 신규 공원 대상지에 대하여 식4를 적용하면 대상지마다 공원 조성에 따른 입지 적정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공원의 서비스 수준 개선으로 인하여 공공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고 이는 신규입지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로 활용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이를 토대로 신규 조성에 따른 개선 효과가 큰 지역적 범위를 추정함으로써 추후 공원 공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입지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정보로 활용성이 기대된다.

(3) 실증자료 구축

본 연구의 실증 분석대상지는 충청남도이다. 통계청의 집계구¹⁰⁾ 단위 전체 인구를 공원을 이용할 수요인구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원 접근성 수준 추정을 위한 실증 분석을 위한 공간단위는 집계구이다. 실증 분석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명시된 공원 유형 중 주제공원을 제외한 생활권 공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림24>는 충남지역 수요인구 및 공원의 공간적 분포현황을 나타낸다. 수요인구는 집계구 단위로 등도수(quantile) 급간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단계구분도(coropleth map)로 시각화하였다. 그림에서 공원의 위치는 초록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24〉 충남지역 집계구 단위 인구수 단계구분도 및 공원의 공간적 분포현황도

10)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규정에 의하면 "집계구"란 기초단위구를 결합시켜 만든 구역으로 기초단위구에 통계적 특성인 동질성, 동량성을 부가하여 확정한 근린지역 통계서비스 구역을 말한다. 그 규모는 집계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구 500명 정도를 최적규모로 설정한다. 충남은 총 4,428개 집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4〉에서 볼 수 있듯이 공원은 대체로 충남지역 북부의 4대 도시지역(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및 이와 인접한 홍성군 및 예산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이 편중·분포하는 패턴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군 단위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계구(진한 검은색 톤) 지역에서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표 78〉은 분석에 활용한 충청남도 도시공원 유형별 기초통계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요약한 것이다.

충남지역의 공원 유형별 특성을 보면 개수에서는 어린이공원이 가장 많고, 면적의 경우는 근린공원이 가장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공원의 경우 홍성군을 제외하면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개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공원의 경우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가장 많이 분포해있다. 전체 공원의 개수가 가장 많고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당진시로 나타났다.

〈표 78〉 충청남도 시군구 단위 공원 유형별 기초통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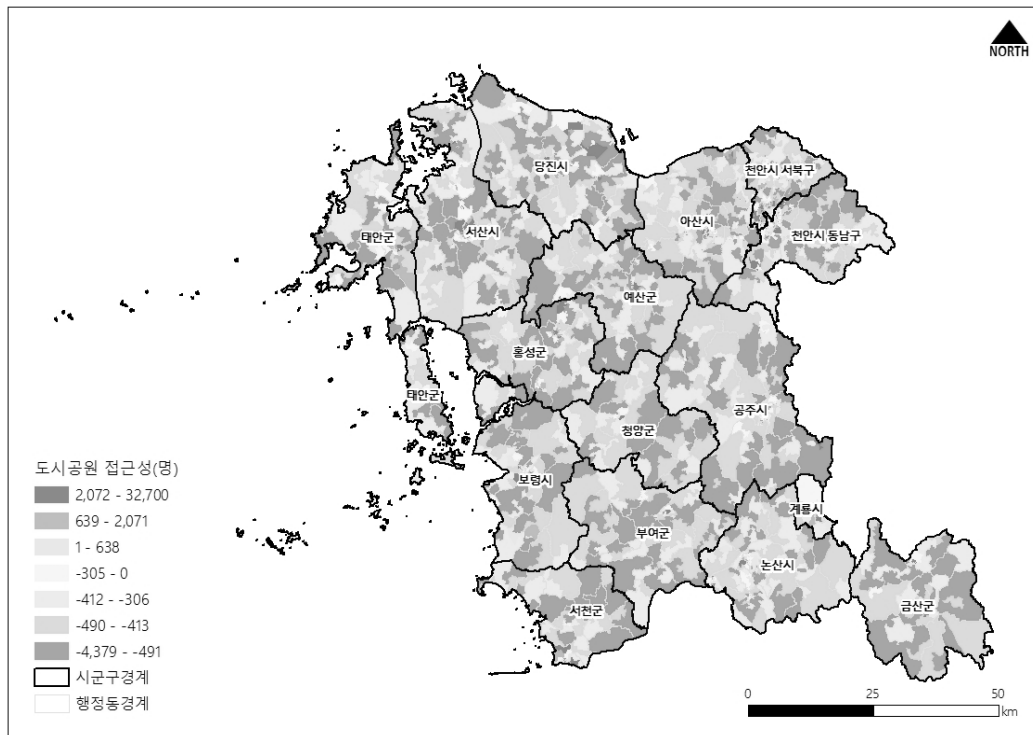
(단위: 개수(개), 총면적(㎡))

시군구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계	
	개수	총면적	개수	총면적	개수	총면적	개수	총면적
계룡시	9	884,595	9	42,403	6	17,719	24	944,717
공주시	12	577,968	16	33,596	13	21,550	41	633,114
금산군	9	1,251,137	4	4,605	5	14,563	18	1,270,305
논산시	11	692,599	27	49,989	28	56,106	66	798,694
당진시	45	3,070,408	37	55,626	46	93,703	128	3,219,737
보령시	16	929,236	16	29,029	34	75,748	66	1,034,013
부여군	4	103,303	5	3,200	3	7,110	12	113,613
서산시	21	2,652,727	24	51,916	42	77,770	87	2,782,413
서천군	8	417,022	3	15,052	10	26,582	21	458,656
아산시	18	780,019	0	0	46	99,005	64	879,024
예산군	11	576,030	19	58,529	19	57,329	49	691,888
천안시 동남구	21	1,785,502	5	11,556	43	95,470	69	1,892,528
천안시 서북구	28	750,683	2	1,811	65	309,027	95	1,061,521
청양군	3	82,868	4	6,359	4	8,555	11	97,782
태안군	11	499,627	4	13,386	15	33,493	30	546,506
홍성군	28	1,513,704	13	20,760	35	83,234	76	1,617,698
총합계	255	16,567,428	188	397,817	414	1,076,964	857	18,042,209

2) 분석결과

(1) 공원 접근성 분석결과

앞서 <그림24>의 집계구 단위 인구수 및 공원 분포현황을 나타내는 일차적 시각화 결과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공원의 접근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서 식1을 통하여 정의한 공원 접근성 지표에는 수요인구수와 공원의 규모, 그리고 두 지점 간 지리적 거리를 매개로 하는 조락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원 접근성 지표의 개념적 대원칙은 수요인구 근처에 큰 공원이 많이 분포할 경우, 해당 수요인구는 공원을 이용하는 옥외활동 과정에서 넓은 어메니티 공간을 여유 있게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수요자의 편익 증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은 공원을 방문하여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고 이는 양호한 접근성을 누리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넓은 공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조성되어 있어도 수요인구가 많으면 옥외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편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접근성 저하라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는 수요인구수가 적은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넓은 공원 역시 수요인구가 쉽게 접근하여 옥외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식1로 정의한 공원 접근성은 결국 공원이 제공하는 옥외 활동공간을 얼마나 방문하기 쉽고 동시에 옥외 활동공간을 여유 있게 이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세 가지 요인(수요인구 규모, 공원면적, 이동 거리)을 조합하여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25>는 식1을 충남지역 공원 및 집계구 단위 수요인구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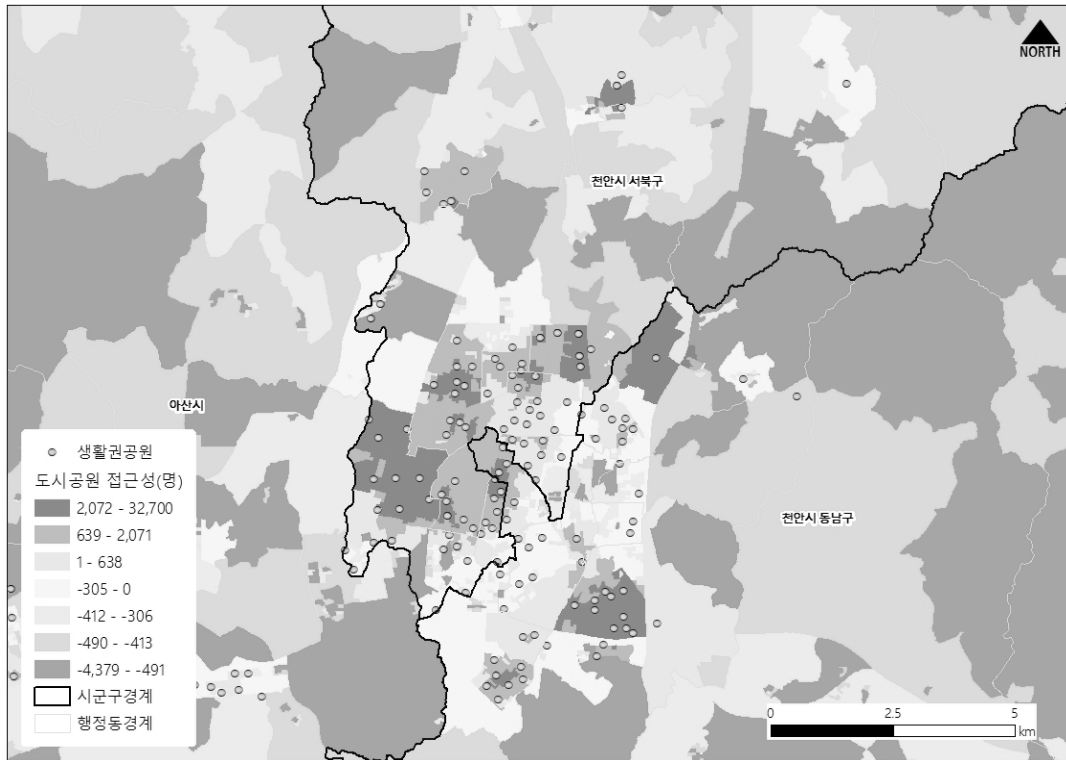
〈그림 25〉 충남지역 집계구 단위 도시공원 접근성 추정 결과

〈그림25〉를 보면 충남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등 북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식1로 정의한 공원 접근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도상에서 파란색 톤이 진한 집계구일수록 실제 인구수 값 보다 공원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값 값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값 는 주변에 조성된 공원의 면적을 거리조락효과를 반영하여 배분·누적한 뒤 이를 인구수(명) 단위로 환산한 결과이다. 즉, 배분·누적된 공원 면적을 인구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식1에서 절값로 표기한 1인당 공원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집계구 가까이에 큰 규모의 공원이 많을수록 값 값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1인당 면적 기준으로 더 많은 주민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집계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기준으로 설정된 1인당 면적보다 공원 내에서 더 많은 옥외공간을 활용할 여지가 큼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공원 접근성은 주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편익의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변에 큰 공원이 많이 분포해도 주민이 많으면 공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편익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공원 접근성이 저하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림25〉에서 진한

파란색 톤의 집계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더 넓고 여유 있게 옥외공간을 향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집계구에서의 공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다.

반대로 <그림25>에서 빨간색 톤이 진한 집계구일수록 공원 접근성은 떨어진다. 즉, 주변 가까이에 이용할 만한 넓은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25>를 보면 군 지역에 분포하는 집계구에서 빨간색 톤이 강하게 나타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상적 수준의 도보 활동을 통하여 공원을 방문하여 서비스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빨간색 톤이 진하다는 것은 실제 인구수보다 주변 공원으로부터 배분·누적된 공원의 면적을 인구수로 환산한 값이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원으로부터 거리가 멀거나 가깝더라도 면적이 작은 공원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농촌 지역에 분포하는 집계구일 경우 가까이 도보로 방문할만한 공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거리조락효과에 따라 넓은 공원으로부터도 배분·누적되는 면적이 턱없이 작아서 인구수 단위로 환산한 결과 자체가 작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원의 공급이 도시라는 지역적 범위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도시공원법이라는 관련법의 명칭이 공원 공급의 지역적 범위 및 유형이 명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원은 일종의 공공재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농촌 지역 내 공원 공급방안 개선에 관하여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림26>은 <그림25>의 충남지역의 집계구 단위로 공원 접근성을 추정한 결과 중 일부 지역(천안시)을 예시하기 위하여 확대한 것이다. 천안시 서북구와 동남구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접근성이 양호한 집계구들이 공간적 군집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공원의 분포가 도심 지역에 집중된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천안시 내에서도 공원 접근성 수준에 있어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서비스 도달거리를 1㎞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경우에는 공간가중치 값을 0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에 있어서 공원과 가까운 집계구에 공원의 면적이 집중적으로 배분·누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옅은 노란색 톤의 집계구가 파란색과 빨간색 톤의 접이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집계구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원과의 거리 증가폭 역시 커지기 때문에 파란색과 빨간색 톤의 공간적 변화가 다소 급격한 패턴을 보이는 측면으로도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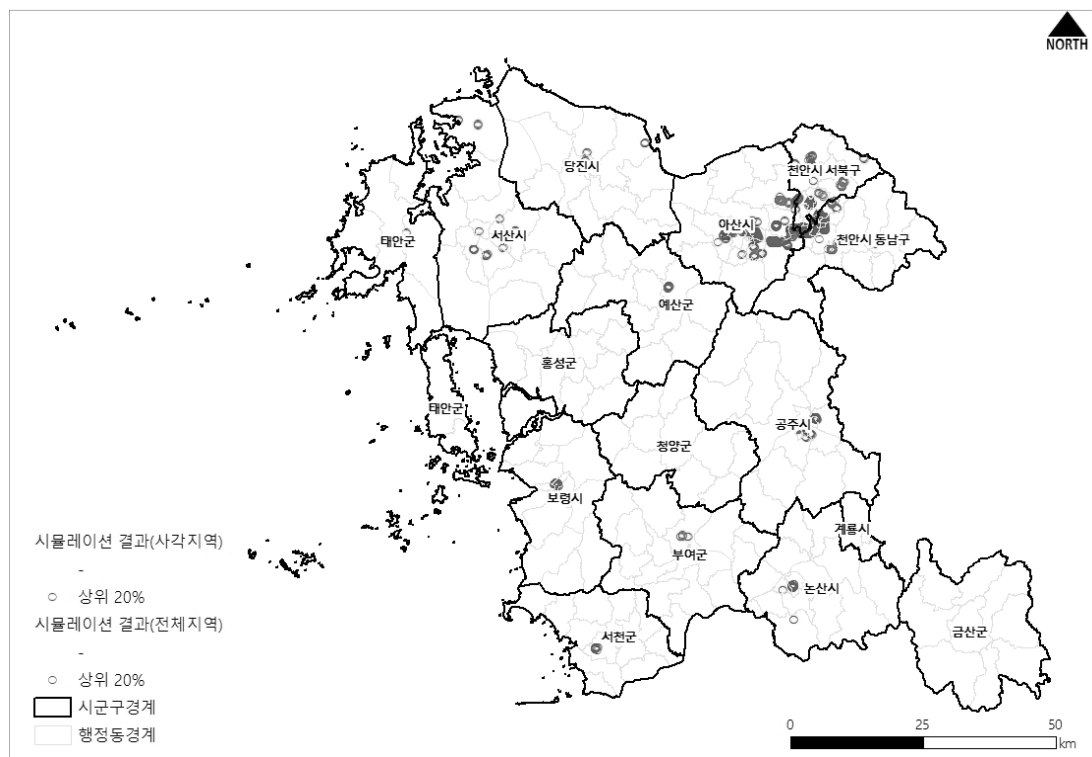
〈그림 26〉 충남지역 집계구 단위 도시공원 접근성 추정 결과(일부 도시지역 확대)

(2) 신규입지 적정성 시뮬레이션 결과

앞서 충남지역 집계구 단위로 공원 접근성 실증 추정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석적 합의를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공원 접근성 추정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공원이 신규 조성될 경우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신규입지 적정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공원을 새로 조성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 개선에 다른 공원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신규입지 적정성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입지에 따른 식4로 정의한 집계구별 서비스 개선 효과를 잠재적 공원 입지 지점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향후 공원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 입지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이라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부지의 집행/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원 조성 시 서비스 수준 개선 효과가 커서 공익적 편익 창출이 큰 부지를 중심으로 집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혹은 국공유지나 이전 적지 등의 부지를 중심으로 신규입지 적정성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공원 조성에 따른 서비스 수준

개선 효과를 크게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조성 가능 부지에 대한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방법론 측면에서 효과성을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소 인위적 방식의 신규입지 후보 지점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집계구 중심점을 잠재적 신규 입지 가능 후보 지점으로 놓고 집계구 중심점마다 공원을 신규 조성할 경우 예상되는 식4의 값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 효과성 측면에서 큰 값을 가지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잠재적 후보 지점(집계구 중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27>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신규입지 적정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27〉 신규입지 적정성 시뮬레이션 결과 상위 20% 지점

위 <그림27>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전체지역)은 앞서 <그림26>에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충남지역 모든 집계구 중심점을 기준으로 신규입지에 따른 서비스 수준 개선 효과를 추정하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을 파란색 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기존 공원에서부터 배분·누적된 공원 면적(식1의 값)이 이미 상당하지만, 인구수(식1의

값)가 그 값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식1의 값이 음수로 산출되어 명 단위로 환산되는 실제 서비스 면적보다 수요인구수가 더 많은 집계구를 포함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사각지역)은 식1의 값 값이 0인 집계구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이는 보라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값 값이 0이라는 것은 주변 1㎞ 범위 내에 도시공원이 분포하지 않아서 거리조락효과를 적용한 결과 기존 공원으로부터 배분·누적된 면적이 0이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기존 공원의 서비스 제공이 배제된 서비스 사각 지역임을 의미한다. 서비스 사각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입지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 두 경우 모두 신규입지 적정성이 충남지역 전체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의 경우 서비스 사각 지역을 대상으로 기눴한 신규입지 적정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이나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서천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할 결과가 상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 다른 시군보다 수요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시 내부에서도 도시공원 분포가 편중되어 있어서 접근성 편차가 크기 때문에 두 기준 모두에서 신규입지에 따른 서비스 수준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3)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공원 접근성을 공원까지의 거리와 공원의 규모, 수요인구의 규모를 동시에 고려한 공원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가까이에 넓은 공원이 있으면 이동 비용이 줄어들고 동시에 넓고 다양한 옥외 활동공간을 점유함으로써 공공 편익을 누릴 여지가 크다는 전제이다. 공원 접근성 지표를 충남지역 전체 생활권 공원과 수요인구(집계구 단위)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실증적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접근성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규 도시공원 조성에 따라 접근성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잠재적 신규 입지 가능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접근성 추정결과에 따르면 공원 접근성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도보권 범위를 기준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도시

지역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원 관련법에서 도시라는 지역적 범위를 전제한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국민 누구나 공원이 제공하는 공공 편익을 누릴 권리를 가지는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원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의 공원 공급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농촌 지역 주민이 공원이라는 녹색 인프라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나 체감하는 수요의 수준 등이 도시민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즉, 주변에 회색 건물만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농촌 지역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또한 공원 조성 시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조건을 고려했을 때 수요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촌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라는 물음과도 맞닥뜨릴 수 있다.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 도시공원은 수요가 있는 곳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공원 조성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농촌 지역 주민 역시 국민으로서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상적인 공원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즉,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농촌 지역에서의 공원 접근성이 저하되는 서비스 편익 배제 현상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이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전제로 국민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공원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치에 공원조성을 결정해야 할 경우, 기존 공원의 위치 그리고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최적의 입지 선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시뮬레이션 분석방법론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충남 도정의 핵심 키워드인 ‘행복(삶의 질)’을 양극화(격차)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민의 삶의 질 변화와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남 15개 시군의 삶의 질과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조사된 ‘충남 사회지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9년 ‘충남사회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도민의 삶의 질과 격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충남사회지표’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지표’의 연계 분석을 통해, 삶의 질 결정에 영향을 주고, 코로나 시대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슈를 도출하였다. 의료시설과 생활권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민의 의료시설만족도와 충남도의 의료생활SOC의 격차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활권 공원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생활권공원이 우선 공급되어야 하는 지역을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국과 비교한 충남의 삶의 질 격차

전국 대비 충남의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삶의 질 만족도는 66.4점으로 전국평균(66.5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세부 항목에서는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소비생활만족도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등은 낮게 나타났다.

□ 전국과 비교한 충남의 삶의 질 격차

충남 내에서의 삶의 질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5.610점, 2015년에는 5.696점, 2017년에는 6.026점, 2019년은 6.04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동·읍·면)에서 동일하게 상승하는 것을 나타냈다. 지역별 격차는 동지역의 평균이 높고, 읍지역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교통사고 안전과 화재안전에 대한 편차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 소득, 신체건강에 대한 요인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환경요인 중에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운데 여가문화와 의료서비스, 사회안전요인도 삶의 질에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읍·면 지역별로도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충남 생활SOC서비스 격차와 삶의 질과의 관계

국토모니터링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24개 종류의 생활SOC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수혜인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서비스 권역이 넓은 ‘지역시설’과 ‘도시시설’보다는 도민의 일상적 생활시설인 ‘근린시설’에 대한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시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가 밀집한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인구가 적고 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인 면지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종의 생활SOC가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관계성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생활SOC시설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민감도가 낮거나 이미 생활SOC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한정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생활SOC서비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실증분석 1: 의료 관련 생활SOC서비스와 의료만족도와와의 관계

생활SOC중 의료 관련 시설의 접근성이 충남사회지표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2가지 방법 즉, 시설원단위 방법과 접근성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접근성 보다는 시설원단위가 의료시설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보다 명확히 나타났다. 즉, 접근성보다는 시설의 수 등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종의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의원) 생활SOC서비스 수준이 충남사회지표 병(의)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반면, 다른 요인들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거환경의료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오히려 종합병원과 병원 즉, 규모있는 병원의 접근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에 대한 병(의)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만족도에는 오히려 규모 있는 병원과 종합병원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접근성과 시설원단위 분석에서 모두 열악한 시군은 충남 15개 시군 중 서산, 태안, 당진이다. 즉 의료권역구분 상 서산권에 해당하는 지역과 15개 시군 중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가장 농촌성격의 청양과 부여군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수요인구와 재정력인 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생활SOC복합화 관점에서 여러 시설의 융복합적 조성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가는 생활SOC복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산시 도고면을 대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시설의 공급이 해당 지역에서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동시에 인접 지역의 시설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복합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 실증분석 2: 한정된 재원으로 생활SOC서비스 우선공급지역 도출: 생활권공원 사례 분석

지방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 생활SOC시설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로와 공원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시설이 도로와 공원이다. 특히, 공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충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생활권공원을 대상으로 기 공급된 생활권공원의 분포와 이용자 밀지(수혜인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우선적인 공급(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하면서도 공급이 적은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천안과 아산 그리고 서산 지역에 많은 분포하고 있었다. 즉, 인구증가에 비해 생활SOC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지역들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의 추가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분석방법을 24개의 생활SOC시설에 적용할 경우 생활SOC별 우선 공급지역을 추출할 수 있고, 이를 생활SOC공급 정책에 반영할 경우 효과적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SOC시설 데이터 구축 역시 단순한 위치뿐만 아니라 규모, 주변의 주민수는 물론 유동인구 등의 데이터도 함께 구축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 연구가설로 설정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분석결과인 24개 생활SOC지표가 충남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즉, 양적·물리적 지표에 따라 삶의 질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증명하기 어려웠다. 즉 생활SOC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인과관계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둘째, 구체적으로 ‘의료관련 생활SOC시설의 서비스 수준(원단위와 접근성)에 따라 사회지표로 측정된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은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었다. 해당시설의 원단위와 접근성은 당해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종의 의료관련 생활SOC 중 일상적인 생활의료시설인 의원과 약국이다. 하지만 종합적인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활SOC는 병원과 종합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정부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생활SOC시설의 우선 공급지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생활SOC시설의 규모와 이용자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보다 정확도 높은 적정입지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삶의 질 격차뿐만 아니라, 질적지표인 도민의 삶 지표와 양적지표인 생활SOC지표를 연계 분석한 결과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지표의 척도, 생활SOC의 종류와 서비스범위 측정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이를 기초로 한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충남도는 사회지표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지표의 관리와 생활SOC시설의 개념과 유형구분, 서비스 범위 설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기법을 통해 생활SOC시설 최적입지 결정 등에 활용하면 체감도 높은 생활SOC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국가 차원에서 힘들다면, 충남도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민선7기 도정의 핵심을 ‘더 행복한 충남’

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도정의 정책들이 도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접근되고,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성적 지표와 이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연계 분석하여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연계 분석하는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명확한 해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표 대표성 문제, 지표 측정문제, 조사시기의 문제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광용·고명철, 2017,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지역사회 삶의 질 간 상관성 분석: Peterson의 정책유형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9권 2호, pp.27-55
- 김광석, 2014, 무엇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OECD 'Better Life Index'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및 국제 비교
- 김기중·김동준·이창효·이승일, 2018, 도시공원의 규모와 형태별 주변 지역의 지표 온도·건물 에너지 소비 저감 영향 범위 분석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2), pp.155-176.
- 김미옥, 2020, 문재인 정부 생활SOC 정책 내용 분석 및 공공체육시설 정책에 미치는 함의,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8(1), pp.1~18
- 김준우·안영진, 2014,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체감 의료서비스 격차- 암 치료 경험을 통한 실증적 연구,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48(1), pp.149~159
- 김진구, 2011,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 연령집단별 Le Grand 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7(3), pp.91~122
- 김태일·최윤영·이경희, 2008,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4(3), pp.53~75
- 홍석철·이호준, 2014, 응급의료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6(4), pp.103~133
- 김미송·원태홍·유환희, 2015, 진주시 1차 의료시설의 접근성 분석,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3(3), pp.49~55
- 박소현·이금숙, 2018, 저출산-고령사회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구연령층별 관련 의료시설 분포 예측,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53(3), pp.371~385
- 유명민, 2002, 의료시설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의료·복지 건축, 8(1), pp.37~43

- 박태성, 2015, 일본 지역의료시설의 기능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 - 지자체의 권역별 의료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pp.33~40
- 최광석, 2004, 의료복지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재편 및 그 실행 방안에 관한 전략적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의료·복지 건축, 10(2), pp.59~70
- 윤우용·채철균, 2011, 의료시설의 법적 분류기준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1), 한국 의료복지건축학회, 의료·복지 건축, 17(2), pp.27~34
- 김홍순·정다운, 서울시 의료시설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3(1), pp.27~45
- 김진현, 2015,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차이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46(0), pp.1~24
- 위희수·박송춘·박지은, 2019, 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이 의료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32(6), pp.2491~2511
- 김현철, 2020.2.3., 글로벌 경제 대변혁과 한국, 충남연구원 특강자료
- 김성아·정해식, 2019,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문경주, 2014, 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16개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1호, pp.1-31
- 박대식·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pp.31-55
- 박선일·문운경·정우석·이경주, 2015, “HPAI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 야생 철새 도래지 공간표집방법론에 관한 연구”,『한국지도학회지』, 15(1): 25-35.
- 박성현·이경아·유창호·이보형, 2018,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선형공원의 도시재생 효과,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 pp.109-120.
- 배민기·조택희, 2016, 삶의 질 특성에 따른 지자체 유형화 및 정책방향: 충청북도를 사례로,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 pp.133-154

- 양진향·권영숙, 2005, 도시와 농촌 지역 성인여성의 생활양식, 건강실태 및 삶의 질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제12권 제1호, pp.6-14
- 윤기찬·이일현·이현실, 2013, 기초자치단체별 보건의료서비스 효율성 격차 비교분석: 자료포락분석(DEA)의 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7(3), pp.231~262
- 이경주·임은선, 2009, 근린공원 입지계획지원을 위한 공급적정성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63, pp.107-122.
- 이고은·최열, 2016, 도시공원의 유형 및 입지적 특성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6(5), pp.927-936.
- 이금숙, 2005, 한국 의료서비스의 분포 특징 분석,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40(2), pp.242~251
- 이승철, 2011, 도시유형별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2호, pp.97-119
- 이유잔·김의준, 2015,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농촌 및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의 적용, 한국 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1), pp.65~88
- 이진우·윤갑식, 2018, 최근접 시설 탐색기법을 통한 부산광역시 생활권공원의 접근성 변화분석과 시사점, 「도시행정학보」, 31(2), pp.61-72.
- 이해령·정효잔·이희정, 2020, 생활SOC의 공간적 형평성 분석: 경기도 5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1), pp.69~88
- 이희연, 2004, 응급의료기관의 공간분포와 응급의료 서비스 수급의 공간적 격차,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pp.606~623
- 조진우, 2020, 생활SOC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900, pp.173~198
- 조희은·남지현, 2019, 생활SOC의 범위 및 시설의 유형별·지역별 특성 연구 - 경기도 생활SOC 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 20(5), pp.33~52
- 최민호·강영웅·이승종, 2019, 기초자치단체 삶의 질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커뮤니티

- 웰빙 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pp.329-356
- 최상옥, 2016, 뉴노멀시대 新공공성 탐색, 정부학 연구 22권 2호, pp.5-6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I 기본체계의 개편
 - 허만형, 2014,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3호, pp.231-254
 - 공공데이터(국토지표) 생활SOC 위치 원자료, 2019
 - 국가지표체계 「국민삶의질 지표」, 2020
 - 국토교통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 충청남도, 2019 충남사회지표, 2019
 - 통계청, 2016, 2016 지역사회지표 작성매뉴얼(이론편)
 - 통계청 GIS 집계구 원자료
 - 한국사회조사 원자료, 2019년
 - Boone, C. G., Buckley, G. L., Grove, J. M., & Sister, C., 2009, Parks and people: An environmental justice inquiry in Baltimore, MD.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9(4), pp.767-787.
 - Campanera & Higgins, 2011, Quality of life in urban-classified and rural-classified English local authority areas, Environment and Planning A
 - Comber, A., Brunsdon, C., & Green, E., 2008, Using a GIS-based network analysis to determine urban greenspace accessibility for different ethnic and religious group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6(1), pp.103-114.
 - Dalia Susniene, 2009, The concepts of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 Correlation and differences
 - Ismail, R., Hafezi, M. H., & Nor, R. M., 2014, The Comparison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o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Hapines in Sub-Urban and Rural Area in Malaysia. Research Journal of Aplied Sciences, Enginering and Technology, 7(7): 1418-1425.

- John F.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D. Sachs, 2013, World Happiness Report
- Langford, M., & Higgs, G., 2010, Accessibility and public service provision: Evaluating the impacts of the post office network change programme in the UK.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4), pp.585-601.
- Lee, G. & Hong, I., 2013, Measuring spatial accessibility in the context of spatial disparity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urban park servic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19, pp.85-90.
- Maller, C., Townsend, M., Pryor, A., Brown, P., & Leger, L. S., 2006, Healthy naturehealthy people: 'Contact with nature' as an upstream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 for population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1(1), pp.45-54.
- Meike Bartels, Genetics of Wellbeing and Its Components Satisfaction with Life, 2015,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Heritability Studies
- OECD, 2020, How's Life? 2020
- Richard A. Easterlin,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ed
- Richard Layard, 2010,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 Richard M. Ryan and Edward L. Deci,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Well-Being
- Shucksmith, M., Cameron, S., Meridew, T., & Pichler, F., 2009, Urban-Rural Di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ross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tudies, 43(10): 1275-1289.
- Wolch, J., Wilson, J. P., & Fehrenbach, J., 2005, Parks and park funding in Los Angeles: An equity-mapping analysis. Urban Geography, 26, pp.4-35.

- Wright Wendel, H. E., Downs, J. A., & Mihelcic, J. R., 2011, Assessing equitable access to urban green space: The role of engineered water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45(16), pp.6728-6734.
-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 OECD(<https://www.oecdregionalwellbeing.org/KR05.html>)
- Social Progress Imperative (<https://www.socialprogress.org/>)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최정현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원

외부연구진 ·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홍성효 공주대학교 교수

전략연구 2020-11 · 사회지표와 생활SOC지표 활용한 충남 삶의 질 격차분석과 정책제안

글쓴이 · 임준홍·최정현·이경주·홍성효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0년 12월 31일 / 발행 · 2020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21(지역도시문화연구실), 041-840-1114(대표)/팩스 · 041-840-1129(대표)

ISBN · 978-89-6124-536-4-03350

<http://www.cni.re.kr>

© 2020.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쇄물은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제작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사회적 가치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업들을 응원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